

■ 연구총서 ■

2003-11

국제노동운동의 현황과 새로운 흐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머 리 말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도 국제활동의 비중과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국제노동운동의 전반적인 현황이나 최근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는 물론이고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기존 국제노동운동의 조직현황과 활동, 한계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연대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일이었다.

그 결실인 본 연구보고서는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산별노련(GUFs), 세계노련(WFTU), 세계노동총연맹(WCL) 등 기존의 국제노동조합운동 조직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그러한 기존 국제노동계의 ‘한계’와 ‘오류’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국제노동운동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노동조합 간부, 관련 업무담당자와 연구자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국제노동조합운동 입문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국제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제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2003. 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 남 순 위 원 장

국제노동운동의 현황과 새로운 흐름

윤 효 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담당

강 총 호

한국노총 국제국장

윤 영 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

/ 목 / 차 /

국제조직 약어	1
제1장 서론	3
제2장 국제노동운동사 개괄	10
1. 국제노동자협회와 인터내셔널	10
2. 국제산별노련의 발전	12
3. 세계노련의 분열과 국제자유노련의 등장	17
4. 1990년대 이후 국제노동조합운동의 흐름	19
제3장 세계노동조합연맹	21
1. 세계노련의 창립	21
2. 세계노련의 분열	25
3. 세계노련의 현황	32
4. 노동조합인터내셔널(TUIs)	36
제4장 국제자유노련	38
1. 국제자유노련의 탄생	38
2. 국제자유노련의 조직구조 및 운영체제	41
3. 국제자유노련의 주요 활동	44
4. 국제자유노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49
제5장 국제산별노련	55
1. 국제산별노련의 역사	55
2. 조직구조 및 주요활동	56
3. 국제산별노련의 조직별 현황	59

제6장 세계노동총연맹	77
1. 세계노동총연맹의 역사와 성격	77
2.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적 배경	80
3. 세계노동총연맹의 현황과 운영	85
4. 전지구적 사회 계약, 세계노동총연맹의 새 방향	88
5. 세계노동총연맹과 국제자유노련의 통합 문제	94
제7장 국제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	97
1.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97
2. 노동자민중국제연락위원회와 열린세계대회	101
3. 남아공·브라질·한국 3국 노동운동 교류	104
4. 기타 국제적인 노동 네트워크	110
5. 온라인 노동 네트워크	114
제8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기 위한 국제연대	118
1. 세계사회포럼(WSF)	118
2. 이라크 침략전쟁과 국제노동운동의 흐름	127
3. 다국적기업 규제 흐름	132
제9장 결론 - 새로운 방향과 전략 모색	139
1. 노동운동을 둘러싼 세계적 도전들	139
2. 국제노동운동의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146
3. 한국노동운동의 과제와 방향	151
참고자료	158
국제노동단체 연락처	162

/ 표 / 목 / 차 /

<표 1> 국제산별노련(Global Union Federations) 현황 (2003년 7월 현재)	76
--	----

/ 그 / 립 / 목 / 차 /

<그림 1> 국제자유노련과 국제산별노련의 관계	40
---------------------------	----

국제조직 약어

ACTU	호주노총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FL	미국노동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Labour
AFL-CIO	미국노총	American Federation of Labour-Congress of Industrial Organisations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LN	아시아태평양 노동조합 네트워크	Asia Pacific Labour Network,
ASEM	유럽아시아정상회담	Asia-Europe Meeting
AUCCTU	소련 전연방노동조합중앙협의회	All Union Central Council of Trade Unions
CGIL	이탈리아노동총연맹	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CGT	프랑스 노동총연맹	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CIO	미국 산별기구평의회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sations
COSATU	남아프리카노동조합평의회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CUT	브라질 노동자단결중심	Central Única dos Trabalhadores
ETUC	유럽노동조합총연맹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FKTU	한국노총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VN	네덜란드노총	
GUFs	국제산별노련	Global Union Federations
ICFTU	국제자유노련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APRO	국제자유노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IFCTU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ristian
Trade Unions

IFIs 국제금융기구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TU 국제노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IFWEA 국제노동자교육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ILO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MF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TSs 국제산별사무국 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s

KCTU 민주노총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NGOs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TUAC OECD 노동조합자문회의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C 영국 노동조합평의회 Trade Union Congress

WCL 세계노동총연맹 World Confederation of Labour

WFTU 세계노련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T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sation

제1장 서론

“노동운동은 국제연대의 역사다. 노동운동은 태생부터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를 표방해왔다.” 하지만 이 말은 책에서 읽거나 강의에서 들은 내용일 뿐, 노동운동을 국제연대나 국제주의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노조간부나 노동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국제’니 ‘외국인’이니 하는 것들은 대단히 낯설다. 해외여행이 붐이지만, 먹고살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더군다나 ‘5천년 민족사’, ‘우수하고 순수한 단일혈통’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한국 노동자들에게 국제연대나 국제사업은 ‘영어를 할 줄 아는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의 일이지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노동운동의 고향인 유럽은 달랐다. 중국보다 작은 땅덩어리에 여러 나라와 민족이 오밀조밀 살아온 유럽에서는 16세기 이후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인구가 본격적으로 뒤섞이기 시작했다. 종교 전쟁과 부르주아 혁명은 기존의 공동체나 국경선 너머로 인구를 내몰았고, 그 결과 생활공동체나 민족공동체라는 중세의 생활양식은 해체되었다. 농업사회가 점차 산업사회로 바뀌었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국민(nation)으로 통합되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민족이 다른 나라로 나뉘져 국적이 달라지기도 하고, 다른 민족이 같은 나라로 편입돼 국적이 같아지기도 하였다. 국민국

가(nation-state)의 출현, 자본과 풍부한 상품, 상품과 무기, 상업의 비약적 발달과 신대륙 발견, 제국주의의 출현과 식민지의 확산이라는 혼돈 상황에서 노동자 조직이 결성되고 노동운동이 태어났으며, 노동운동은 당연히 출현 당시부터 직장보다는 거리, 자연보다는 직업, 국적보다는 계급, 국민보다는 국민들 사이의 관계(inter-nations)를 지향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에게도 비슷한 역사적 경험은 있다. 19세기를 거치며 조선 왕조가 약화되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유랑민으로 전락했다. 유랑민의 일부는 들고 돌아 만주와 연해주로 흘러들었고,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뒤섞였다. 20세기 초 조선왕조가 망하고 일본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반도로 밀려왔고, 조선인들도 노동자로 학생으로 일본으로 몰려갔다. 중국 대륙의 혼란 속에서 일부 중국인들은 조선에 정착했다. 일본의 군사적 침략이 만주를 거쳐 중국 대륙으로 확대되고, 결국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수백 만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노동자로 병사로 고국을 떠났다.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일본인 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 중국인 지주 밑에서 일하는 조선인 농민, 일본인 장교 밑에서 전투를 벌이는 조선인 병사, 중국 공산당 깃발 밑에서 항일전쟁을 벌이는 조선인 독립투사가 나타났다. 심지어는 소련 정부의 강요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조선인도 생겨났다. 기존의 조선 사회를 버티오던 질서가 무너지면서 국경이 무너지고, 민족이 해체되고, 사람들이 뒤섞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험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족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인들은 ‘본토’로 돌아갔고, 조선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쪼개졌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에 흩어진

조선인들은 그 나라 국민이 되었으며,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었다. 군사독재정권은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계급보다는 국민, 국민들 사이의 관계보다는 민족, 거리보다는 직장, 직업보다는 지연을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노동자들의 의식 속에 주입했고, 이것은 지정학적 고립성과 맞물리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한 민족 = 한 국민 = 한 국가’라는 등식이 국민적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국가의 지배와 통제에 길들여진 노동조합운동 역시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의 국제사업도 ‘회의를 빙자한 해외여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과 폐쇄의 고리를 끊는 사태가 발생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그것이다. 자본과 결탁한 군사독재의 폭압 속에서 숨죽여왔던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이다. 수백 만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하고 수천 개 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건설되었다. 1980년대 후반 내내 거대한 투쟁을 치르면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개별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종업원’에서 ‘노동자’로, 개발도상국의 ‘산업역군’에서 ‘노동계급’으로, 반공독재국가의 ‘국민’에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이 유럽 노동운동을 비롯한 국제 노동계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국제노동운동의 관심이 커졌다. 한국의 노동소식이 영어로 번역되어 외국 노동조합에 보내지고, 외국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국제 회의에 참가 초청을 받는 한국 노동조합 간부들의 수도 늘어났다. 국제노동기준을 규정한 『ILO 협약집』을 비롯해 노동문제와 관련된 외국 문헌이 한글로 번역되고, 유럽

노동운동이나 3세계 노동운동에 관한 자료가 각종 노동잡지에 소개되었다.

한편으로 국가권력과 자본의 협공이 거세지면서 민주노동운동은 국제노동조직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국제금융노련(IMF), 국제건설노련(IFBWW), 국제화학노련(ICEM), 국제공공노련(PSI) 같은 국제산별노련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자유노련(ICFTU)과의 접촉이 늘어났고, 이들 조직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억압정책에 항의하는 성명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네덜란드노총(FNV), 스웨덴노총(LO) 등 유럽 노동운동에서 한국 노동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이것은 한국 노동조합들의 국제산별노련 가맹, 한국 정부의 ILO 가입(1992년), 민주노총의 ICFTU 가입(1996년)으로 이어졌다.

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산하 가맹조직들은 거의 모두가 ICFTU나 국제산별연맹에 가입해 있다. 한국 노동조합들은 ICFTU 총회, ILO 총회를 비롯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이후 국제노동조직들이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국제회의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ICFTU 아시아태평양지역 청년캠프(1994년), 민주노총의 남반구노조연대회의(2001년)와 아시아노동조합회의(2003년)가 대표적이다.

21세를 맞이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을 빼고는 국제노동운동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 수백만이 죽어간 전쟁, 민족분단, 30년에 걸친 군사독재, 급속한 경제발전, 성공적인 민주화 이행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은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 노동운동에게도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 노동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이 가진 현장성과 활력에서, 후진국 노동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이 지나온 투쟁의 역사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노동운동은 제1세계 노동운동과 제3세계 노동운동의 경계 지점에서 있으며, 두 운동 사이의 가교 역할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길게는 1945년 이후, 짧게는 1987년 이후를 돌아볼 때 한국 노동운동과 국제 노동운동 사이의 교류가 지금처럼 활발한 때는 없었고,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기대가 지금처럼 높은 때도 없었다.

그러나, 한국 노동운동의 국제사업 역량은 그리 높지 못하다. 양대 노총 모두 국제사업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하다. 산하 산별조직 가운데 국제 담당자를 둔 곳은 몇 곳 없다. 노동조합의 인력과 자원이 기업 단위에 집중되어 있고 국제사업이 각종 사업의 순위에서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수준 이상의 국제사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무엇보다도 앞서 지적된 한국 사회 특유의 배타적 민족의식, 지정학적 고립성, 역사적 특수성은 한국 노동자들의 국제의식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운동의 국제사업이 회의 참가나 정보 교환 수준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국제노동운동에 대한 정보 역시 한글로 소개된 게 별로 없으며, 있더라도 개별 조직이나 특정 사안에 그친 게 대부분이다. 반면에 한국 노동운동의 역량과 경험이 쌓이고 국제 노동계와의 교류가 강화되면서 국제노동운동의 현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흐름을 살펴볼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의의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지적한 대로

국제노동운동의 전반적인 현황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국제노동조합운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제3장에서 세계노련(WFTU), 제4장에서 국제자유노련(ICFTU), 제5장에서 국제산별노련(GUFs), 제6장에서 세계노동총연맹(WCL)을 다룬다. 특히, 한국 노동계에서 WFTU와 WCL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 본 연구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의의는 국제노동운동의 현황과 더불어 새로운 흐름(제7장)을 소개하는 데 있다. 기존 국제 노동계의 ‘한계’와 ‘오류’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국제노동운동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활동을 국내에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작업 역시 본 연구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제3세계 노동운동이 중심이 된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노동자민중국제연락위원회(ILC), 남아공·브라질·한국 노동운동 3국 교류 등의 사례를 통해서 선진국 중심의 국제노동운동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의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제8장)는 점이다. 2001년 1차 포럼이래 국제사회운동의 새로운 전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세계사회포럼(WSF)과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대응을 살펴보고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연대를 통한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연구는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노동운동 조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제노동기구(ILO)와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이 다뤄지지 못했다. 둘째로 ICFTU와 국제산별노련 등 국제노동운동 주류의 사업과 활동에서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자료 부족으로 WFTU와 WCL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셋째로 상대적으로 조직이 안정되고 활동력이 있는 사례를 중심을 하다 보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몇몇 경우를 놓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쟁과 동원’보다는 ‘교섭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주로 소개된 면이 없지 않다. 넷째로 이 연구는 개괄적인 흐름의 서술을 통한 현황 소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나 논쟁에 대한 소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나아가 기존 국제노동운동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적 과제의 제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구성이 현장 활동(field)에 기초해서 이뤄지다 보니, 학문적 정밀함이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짚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는 세 명이 참가했으며, 장별 집필자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윤효원), 제2장 국제노동운동사 개괄(윤효원, 강충호), 제3장 세계노련(윤영모), 제4장 국제자유노련(강충호), 제5장 국제산별노련(강충호), 제6장 세계노동총연맹(윤영모), 제7장 국제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윤효원, 윤영모), 제8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기 위한 세계연대(윤효원, 윤영모), 제9장 결론(윤효원). 아무쪼록 이 책이 노동조합 간부, 관련 업무담당자와 연구자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국제노동조합운동 입문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장 국제노동운동사 개괄

1. 국제노동자협회와 인터내셔널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과 미국에서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세계자본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1860년대에 들어 이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지도자들은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노동조직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1864년 9월에 영국의 런던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주도로 노동자계급 최초의 국제조직인 국제노동자협회(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이 창립되었는데, 이 조직이 바로 제1인터내셔널이다.¹⁾

국제노동자협회에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벨기에, 미국 등의 노동조합 조직뿐만 아니라 각국의 사회주의자 단체, 협동조합, 노동자 교육단체도 참여하였는데, 조직의 성격이 대중조직이기보다는 정치조직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적인 요구와 함께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지지, 어린이와 여성노동자 보호와 차별 반대를 위한

1) 국제노동자협회의 창립대회에는 영국과 프랑스 대표들 이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헝가리 등의 노동자대표들도 참석하였고, 마르크스도 인터내셔널 창립선언과 규약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다. 그 후 186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대회에서는 마르크스가 작성한 노동조합운동의 기본방침(「노동조합, 과거, 현재, 미래」)을 채택하였다.

투쟁, 8시간 노동제 요구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근대 노동운동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1866과 1867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 끌면서 각국 노동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국제연대의 위력을 발휘해 나가던 협회는 1869년 제4차 대회 이후 조직 내부에서 바쿠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노선 갈등에 따른 분열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1872년 본부를 미국 뉴욕으로 옮기게 되었으나, 결국 1875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7차 대회를 끝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제1인터내셔널이 해산된 이후에도 각국의 노동운동가들은 다른 나라의 파업투쟁을 지원하는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조직 결성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1889년 7월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20개국 대표자 391명의 사회주의자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국제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제2인터내셔널이라고 불리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창립되게 되었다.²⁾

제2인터내셔널도 제1인터내셔널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정당,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함께 참여한 포괄적인 노동자계급 조직이었지만, 중앙집권적이었던 제1인터내셔널과는 달리 각국의 자주적 조직의 연합체 형태를 취하고 명확한 강령이나 지도부도 없었다. 그리고, 1900년에 국제 사회주의 뷰로(ISB)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상설 사무국조차 두지

2) 창립대회는 8시간 노동제의 입법화, 아동노동 금지, 여성노동 보호, 야간노동과 유해작업에 대한 특별규제, 주휴제의 의무화, 임금을 대체하는 현물지급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완전히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 등의 요구를 결의하는 한편,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위해 투쟁하였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1890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정해서 전세계 노동자계급이 함께 시위행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않았다. 하지만,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을 주도한 세력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던 만큼 제2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대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제2인터내셔널 내부에는 마르크스주의와 수정주의 사이에 이데올로기 투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운동에서도 직업별 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실리주의나 무정부주의(생디칼리즘)와 같은 다양한 노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독점자본주의의 발달과 식민지 수탈을 통한 초과이윤으로 인하여 노동자 상층부가 개량화·보수화되면서 제2인터내셔널은 노선투쟁과 분열로 점점 약화되었다.

특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행동을 하지 않던 중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제2인터내셔널에 소속된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들이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게 되면서 제2인터내셔널은 붕괴되고 말았다.

2. 국제산별노련의 발전

국제산별노련은 국제산별노동조합연맹의 줄임말이며, 영어로는 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s, 즉 ITSs라고 한다. 각국의 산별노조나 산별연맹들이 국제수준에서 모여 만든 연맹체(federation)가 국제산별노련인 것이다. 국제산별노련은 국제 노동조직 가운데 노동조합 조직에 가장 밀착된 단위로 국제적 수준에서 특정 산업 및 업종을 대변하고 있으며, 각국의 산업별 노동조직들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서 활동하고 있다.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제산별노련의 역사는 유럽의 사회주의

노동운동과 연결되어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유럽 각국의 노동운동은 출발부터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를 기치로 내걸었다.

사회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노동시장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서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와 일자리를 찾아 유럽 대륙을 이동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1789년 발발한 프랑스대혁명 이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유럽 각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간해방을 향한 정치적 격동이 줄을 이었고, 급진적 정치가와 운동가들의 망명 사태가 속출했다. 이러한 환경은 급진적 이데올로기와 노동자층이 자연스럽게 결합하게 만들었고,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국민주의(nation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를 뛰어넘은 노동운동의 국제주의가 대두하는 배경이 된다.

유럽 대륙에서 국경을 가로지르는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시작한 시점은 1860년대와 18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각국의 노동자들이 직업별로 노조를 꾸리고 연대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와 1890년대 무렵부터다. 1891년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gress)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목재, 금속, 섬유 노조들이 참여해 개별 국가를 뛰어넘은 국제연대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소속 조합원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국경을 가로질러 노동 조직들이 상호 협력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또한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외국인 노동자들을 파업 파괴분자로 활용하려는 자본가들의 ‘음모’를 어떻게 막을 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사정들은 노총, 즉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national center)들이 국제연대에 나서기 전에 산업 및 업종에 바탕한 개별 노동조합들이 국제연대를 시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각국 노총들이 국제주의를 활성화하면서 국제적 수준에서의 연대 조직을 건설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189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 많은 산업별 국제노동조직들이 출범했다. 1889년 제화공 조직, 1890년 광원 조직, 1893년 재단사 조직이 건설되었다. 물론 이 가운데 몇몇은 상설 구조를 갖추지 못한 비공식 조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국제산별노련의 뿌리는 이 당시의 조직들에 기원을 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산업별 국제노동조직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지향을 갖고 있었으며, 국제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조건에 대한 정보 교환, 외국인 노동자를 파업 파괴자로 활용하는 자본가의 탄압에 맞선 공동 대응, 파업 투쟁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사업을 조직했다.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3회 국제금속노동자총회가 열렸다. 여기서 다룬 의제는 조직 지원, 국경을 뛰어넘는 단체행동(파업), 사용자의 행동(직장폐쇄 등)에 대한 공동 대응(기금 지원, 파업 파괴자와의 투쟁), 핵심 근로기준의 확립, 청년 노동자의 교육과 보호, 상호 정보 교환 등으로 오늘날에도 노동운동에 여전히 중요한 문제들이 주를 이뤘다.

당시 유럽은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중심인 동시에 노동운동의 중심이기도 했다. 따라서 당시의 국제산별조직에 가입한 노조들은 대부분 유럽 조직이었다. 하지만, 미국 노동조합들도 간혹 참여하기도 했는데, 1904년 미국광원연합(UMWA)의 국제광산노동자연맹(Miners' International

Federation) 가입이 대표적이다.

국제산별노련의 활동에서 지도부가 차지하는 역할은 컸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본부들이 1차 대전 전까지 독일에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독일은 세계 최대의 노동자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최강의 노동운동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당시의 독일은 영국에 이은 제2의 공업국으로서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이었다. 이런 이유로 당시의 베를린은 국제노동운동의 비공식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다.

1914년 일어난 1차 대전은 국제노동운동을 분열시켰고, 당연히 국제산별노련의 성장에도 타격을 입혔다. 1914년 당시 산업별 국제노동조직은 모두 33개였는데 대부분이 1차 대전 기간 동안 회원 조직과의 연락 관계를 잃어버렸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노동운동들이 자국 정부의 전쟁 개입을 지지함에 따라 유럽 노동운동 안에서 ‘애국주의’와 ‘국수주의’ 열풍이 국제주의를 삼켜버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전쟁지지 결의였고, 이것은 국제사회주의 운동은 물론 국제노동운동 진영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1차 대전을 계기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갖고 있던 국제노동운동의 대표성이 상실되고, 국제노동운동의 중심이 영국의 런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벨기에의 브뤼셀, 스위스의 제네바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각국에서 많은 노조 조직들이 통합을 시도했다. 직업별·업종별 노조들이 통합으로 사라지고, 보다 큰 규모의 산업별 노조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별 노조의 출현으로 노동조합운동의 교섭력과 조직력은 더욱 커졌고, 이전 시기에 비해 재

정과 인력의 집중과 통합도 원활히 이뤄졌다.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국제노동조직에도 영향을 미쳤고, 국제산별조직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았다.

1차 대전은 각국 정부에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 평화를 증진하고 국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노동·자본 3자가 모이는 국제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출범하게 된다. 이 기구를 통해 노동조합 운동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 및 자본가와 함께 국제적인 수준에서 노동자의 최저 근로조건, 작업 규범 등을 만드는 논의 테이블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국제산별노련들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국제운수노련(ITF)은 1921년 합동선원위원회를 만들어 운수부문의 규제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ILO 협약과 각종 결의문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으로 1차 대전은 국제노동운동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분열하는 분수령이었다. 참전을 지지했던 입장과 전쟁에 반대했던 입장은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사회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소련의 출범은 국제사회주의운동과 국제노동운동의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1921년 적색인터내셔널(Red International)이 출범했고, 이즈음 기독교 노동조합들이 독자적인 국제조직을 꾸리기 시작했다. 이로써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노동운동은 크게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국제산별노련(ITSS) 흐름, 공산주의 성향의 적색인터내셔널 흐름, 기독교·카톨릭 노조운동 흐름으로 나뉘게 된다.

특히, 국제노동운동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흐름과 공산주의 흐름의 분

열과 대립은 국제 정치적으로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의 나치즘과 파시즘 세력의 집권이 그것이다. 1930년대 초반에 등장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우익 전체주의 정권은 노동조합 조직을 광범위하게 파괴했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노동조합이 금지되었다.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과 파시즘의 등장으로 점차 약화되던 국제산별노련은 1939년 2차 대전의 발발로 결정타를 맞게 된다. 특히 독일 나치즘의 유럽 석권은 유럽 대부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마비시켰고, 국제산별노련 본부의 폐쇄를 야기했다. 1945년 전쟁이 끝나면서 국제노동운동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이뤄졌고, 이와 더불어 국제산별노련의 재건과 국제노동조합운동의 통합을 위한 모색이 시도되었다.

3. 세계노련의 분열과 국제자유노련의 등장

2차 대전의 종식으로 각국 노총들이 국제노동운동의 내부 분열을 끝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945년 명맥만 유지하던 국제노동조합연맹(IFTU)이 해산되었고,³⁾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FTU)이 창립되었다. 세계노련(WFTU)의 창립에는 미국의 CIO, 영국의 TUC, 소련의 AUCCTU 등 파시즘에 맞서 싸웠던 연합국 노총들이 앞장섰다.

3) 각국의 노총이 국제연대에 나선 것은 개별 노조들이 국제연대를 본격적으로 모색한 이후인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1901년 유럽 각국의 중요 노총들이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모임은 1913년 국제노련(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IFTU)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반공주의에 기반한 냉전(Cold War)의 도래는 국제노동운동을 다시 분열시켰고, 갈등과 반목은 세계노련과 국제산별노련(ITSs)의 관계와 역할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소련은 세계노련의 중앙집중성을 강화하고자 했고, 자본주의 국가의 노총들은 국제산별노련의 자율성을 유지하려 했다. 국제노동조직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논쟁의 이면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분열하던 당시 국제 정치의 메커니즘이 도사리고 있었다.

결국 두 흐름은 화해하지 못했고, 이는 세계노련의 분열로 이어졌다. 1949년 자본주의권 노총들이 세계노련을 탈퇴하고,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을 만들었다.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서유럽 노총들이 국제자유노련(ICFTU)에 동참한 데는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노총들과의 반목과 더불어 미국의 유럽 경제부흥 계획인 마셜 플랜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자유노련의 ‘자유’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반공산주의·반사회주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운동의 대분열 이후 냉전과 식민지 해방투쟁 과정에서 세계노련은 동유럽과 아시아의 공산주의 성향의 노동조합들에서 회원 조직을 충원했다.⁴⁾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신생 독립국 노총들도 ‘민족해방’을 지지했던 세계노련에 가입했다. 또한 세계노련은 자본주의 국가의 노총이 주도한 국제산별노련(ITSs)에 대항해 노동조합 인터내셔널(Trade Union Internationals)을 만들어 활동했다.

4) 1945년 11월 5일 결성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세계노련(WFTU)에 가입 신청서를 냈고, 1946년 3월 10일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은 1949년 국제자유노련(ICFTU)에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이로써 국제노동운동에서 서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와 반공주의 계열 노총들이 결집한 국제자유노련(ICFTU)과 소련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와 혁명적 민족주의 계열 노총들이 결집한 세계노련(WFTU)의 대립 구도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대결 구도는 2차 대전 이후 식민지 종속국의 민족해방 투쟁, 1950년 한국전쟁, 1960년대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고착되었고, 1989년 이후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붕괴까지 지속되었다.

4. 1990년대 이후 국제노동조합운동의 흐름

1980년대 시작된 신자유주의 흐름은 ‘레이저노믹스’와 ‘대처리즘’에서 본격화되었다. 금융자본의 활성화와 다국적기업의 급속한 확산은 각국의 경제자유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자본주의의 ‘부흥’을 가져왔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이래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고삐를 벗겨버렸고, 이후 세계는 시장경제의 적나라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세계적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는 국제노동조합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세계노련을 약화시켰고, 결국 국제자유노련의 경쟁자로서의 지위를 상실케 만들었다. 이로써 국제자유노련은 명실상부한 각국 노총의 국제적 연맹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세계노련 성향의 노동조직들을 대거 가맹시킬 수 있었다.

한편으로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운동도 국제자유노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들어 브라질의 CUT(1992년), 남아프리카의 COSATU(1997년), 한국의 민주노총(KCTU, 1996년)이 국제자유노련에 가입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1980년대 이후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sation)라는 새로운 환경은 국제노동운동의 재단결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역할을 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전체 노동대중에 대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격은 국제노동운동에게 공통된 도전을 던져주었고,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지만, 아직 이러한 기운은 형성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국가기구로 기능하던 기존 노동조합 조직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90년대 이후 새롭게 독립 노조들이 다수 출현하기는 했으나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제3장 세계노동조합연맹

1. 세계노련의 창립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FTU)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이 구체화되고 새로운 질서를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영국노총(TUC), 미국의 노총 가운데 하나인 산별기구평의회(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CIO), 그리고 소련의 전연방노동조합중앙협의회(AUCCTU, All Union Central Council of Trade Unions) 등 연합군 핵심 국가들의 노총 조직들이 공동으로 소집하여 1945년 10월 3일부터 8일까지 파리에서 개최한 세계노동조합총회(World Trade Union Congress)에서 창립되었다. 이 총회에는 55개 국가에서 56개 전국 단위 노동조합 조직과 20개의 국제 노동조합 조직이 참여하였다. 총회에 참여한 조직들이 대표하는 조합원 수는 6,700만 명에 달했다.

이보다 앞서 세계노련의 설립을 제안하고, 조직 창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1945년 2월 6일부터 17일까지 런던에서 세계노동조합대회(World Trade Union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53개 전국 단위 노동조합 조직과 국제 노동조합 조직들에서 204명의 대표가 참여하였다. 이 대회는 영국의 TUC, 미국의 CIO, 소련의 AUCCTU에서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프랑스의 노동총동맹(CGT), 중국노동연맹, 라틴아메리카노동자총연맹이 공동 부의장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TUC의 월터 시트린(Walter Citrine) 총서기가 대회 서기를 맡았다.

세계노련은 국제노련(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IFTU)에 소속되었던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해 비사회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 경향의 각국 노총들과 적색노동조합인터내셔널(Red International of Labour Unions, Profintern)에 소속되었던 공산주의 경향의 노총들이 총망라한 국제노동조직으로 건설되었다.⁵⁾

세계노련은 이데올로기로 분열되었던 국제 노동조합운동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는 2차 대전 과정에서 구축된 반파시즘 연합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천황제 같은 우익 전체주의를 타도하고 국제연합(UN)의 창설이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확립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은 세계노련을 창립할 것을 결의한 런던 세계노동조합대회⁶⁾의 선언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조직된 노동자 대중은 파시즘을 무릎 꿇게 했으며, 이를 위한 무장투쟁과 생산활동에 전면적으로 기여하였다. 아직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우리의 역사적 대회는 노동자계급의 단결력을 보여주었으며, 파시즘이라는 악의 힘에 대한 국제연합의 도덕적 승리의 증거로 자리매김했다. 승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조직된 노동자 대중은 평화를 만드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평화는 자유인민의 깊은 결의, 이해, 염원, 필요를 반영할 때에만 영구히 유지될 수 있으며, 이럴 때만 피 흘린 희생에 걸맞은 평화로 자리잡을 것이다.

5) 계급투쟁 배격을 천명한 카톨릭과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의 흐름으로 1920년 창설된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ristian Trade Unions, IFCTU)은 세계노련에 동참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조직은 1968년 종교주의를 철회하고 노동운동의 계급투쟁적 요소를 인정하면서 이름을 국제노동총연맹(WCL)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세계대회에 참석한 우리는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민들에게 승전을 위해 바쳤던 노력과 희생을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데 쏟을 것을 호소한다.”

과리에서 열린 창립총회는 규약에서 “전쟁과 전쟁의 원인을 없애고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을 세계노련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결의하였다. 창립대회에서 채택된 제1호 결의안은 “세계노련과 만국의 노동조합운동이 실천할 1차 과제는 파시즘을 하루 빨리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독일과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이 완전하게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반동 세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세력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2호 결의문은 새롭게 구축될 세계 질서를 염두에 두고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 현장에 관한 원칙과 요구를 담고 있다. 세계노련 창립총회는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인종·이념·성에 따른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 노동할 권리와 유급휴가 권리, 적절한 임금과 (주택, 식량 등) 높은 생활 수준의 향유, 실업·질병·사고·노령에 대한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기본 요구로 채택하였다.⁶⁾

창립총회는 별도의 “인민의 자결권”에 대한 결의문을 통해 “파시즘 세력에 대한 승리는 연합군의 단결된 군사력과 함께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와 자결권, 그리고 민족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인민의 적극적인 투쟁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고, “따라서 식민지와 모든 나라의 영토에 사는 모든 인민의 고유의 자결권과 민족 독립의 완전한 실현이

6) 이러한 세계노련의 요구에 기초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을 채택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식민지의 독립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세계총회에 참석한 식민지 노동자 대표와 식민지 종주국 노동자 대표간에 있었던 몇몇 공방에는 세계노련의 분열과 그 후 냉전 동안 계속될 대립의 씨앗이 도사리고 있었다. 인도에서 온 한 대표가 “우리 노동계급이 원하는 것은 민족 독립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국제노동조합운동에 결합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영국 TUC의 대표는 세계노련이 민족 독립을 위한 조직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우리가 이런 정치 논쟁에 휘말린다면 이 국제조직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회 운영위원회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식민주의 지배를 비난하는 결의문 초안을 제출하자, 네덜란드 노동조합 대표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독립 투쟁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차이는 “노동자 힘의 원천인 단결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국제노동운동이 파시즘의 등장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과 “모든 민주세력간의 단결이 없다면 평화와 진보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밀렸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로막지 못했다. 총회는 영국 TUC의 월터 시트린 사무총장을 의장으로,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의 루이 세이랑(Louis Saillant)을 총서기로 선출하고 사무국을 파리에 두기로 하였다.

세계노련은 전쟁이 끝난 뒤 새롭게 만들어지던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에 노동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경제 차원의 세계적 규칙을 만드는 과정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었다. 세계노련의 창설을 이끌었던 주요 세력들은 경제사회이사회가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국제연합(UN) 안에서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 했고,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 ILO와 같은 형식으로 노동의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노련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투표권은 확보하지 못하고 협의권을 얻는 데 그쳤다. 또한 이후 국제연합의 발전 방향은 노동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세계노련은 4년 만에 분열되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서 파생된 냉전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편으로, 세계노련 내부에 존재했던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라는 이념적 대립과 식민주의와 민족해방이라는 역사적 유산의 대립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2. 세계노련의 분열

과시즘에 대항하는 영국, 미국, 소련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의 승리와 이에 따른 전후 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1945년 하나의 국제노동운동 조직으로 창설된 세계노련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49년 분열된다.

세계노련은 새롭게 창설되는 국제연합(UN) 체제에서 투표권을 확보해서 국제 차원의 의제 설정과 규범 구축 과정에 노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국제산별노련(ITSSs)을 조직 내로 통합하여 개별 국가의 노총 차원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국제적 차원의 단일 조직으로서의 노동쟁의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세계노련은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데 모두 실패하였다. 세계노련의 분열은 제1인터내셔널 시절부터 존재해 오던 다양한 노동조합운동 경향들의 차이와 갈등이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하는 공산주의와 “자유” 세계간의 체제 경쟁과 냉전이라는 환경 속에서 증폭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노련이 기존에 존재하던 국제산별노련(ITSs)을 부서 기구로 편입하려 했던 시도를 또 하나의 분열 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전의 국제노동조합연맹(IFTU) 시절에도 있었으며, 또 세계노련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소련 지지 노총들 외에도 영국의 TUC, 미국의 CIO, 프랑스의 노동총연맹(CGT) 등 거의 모든 조직이 동의했던 방향이기 때문에 별도의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노련 창설에 참여하지 않으며 공산주의 노동조합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세계노련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던 미국노동총연맹(AFL)에게 있다. AFL은 국제산별노련에 가입해 있는 소속 노동조합들을 통해 몇몇 국제산별노련의 반발을 부추겼다. AFL은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연합군이 소련과 제휴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식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관계도 불가능하며 불필요하다고 여겼다. 물론 세계노련의 창설에도 부정적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던 1942년 영국의 TUC는 연합국과 소련의 제휴에 기초한 과시즘에 대항한 공동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FL에 “영국·미국·소련 노동조합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AFL은 거부하였다. AFL은 세계노련이 붕괴된 뒤에도 국제자유노련의 창설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가 미국의 경쟁 노총이었던 CIO와 통합한 뒤에야 참여하게 된다. 그 후에도 국제자유노련에 가입한 유럽의 시민주의 노동조합들이 동유럽 노동조합과의 교류를 확대하자 이에 반발하여 1960년대 말 국제자유노련을 탈퇴했다가 1980년대 초에 다시 복귀한다.

세계노련은 창립하자마자 내부 갈등과 분열의 과정을 겪으면서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총서기에 대해 친공산주의 분과 행동을 일삼는다는 비난과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보고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그 결과, 1946년 초부터 집행위원회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내부 의심과 상호 비방으로 인해 조직 창설 당시에 높아졌던 단결 정신이 와해되었다. 그 예로서 세계노련은 1947년 3월 말 조선반도(38선 이북과 이남 모두)와 일본에서 일어났던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6월의 집행위원회와 총회에서 논의·채택키로 하였으나, 보고서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 세계노련은 식민지 지역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내부 이견으로 시행할 수 없었다.

세계노련의 내부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져 분열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던 사안은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이었다. 미국 정부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유럽 재건을 위해, 한편으로는 자국이 보유한 방대한 생산 능력과 과잉 자본의 배출구로 1951년까지 12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원조를 실시하였다. 1947년 6월 미국 마셜 국무장관의 주도로 입안된 이 계획은 전쟁으로 유럽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던 반자본주의 여론과 공산주의 운동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 노동이 사회·경제·정치적 주체로서는 계기가 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의 “원죄”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창당된 독일의 기독교민주당은 1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에 가까운 강령을 채택했다. 프랑스에서는 나치에 협력

한 비시 정권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기업을 국유화하였다. 마샬플랜의 일환으로 서유럽 16개국에 경제 원조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사회 평화, 노동권 인정, 자본의 복지국가 건설 참여 등의 “거래”를 내용으로 “사회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했다. 마샬플랜은 한편으로 노동의 진출을 제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급진화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유럽의 공산주의 경향의 노동조합 등 사회 정치 세력은 미국이 주도하는 마샬플랜에 반대했는데, 이는 유럽 내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공산주의 계열의 노동조합들은 세계노련 차원에서 마샬플랜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는 것은 조직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공식적인 의사결정 단위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 미국의 CIO는 1947년 11월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마샬플랜을 의제로 채택하여 세계노련의 지지를 모아내려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계열 노동조합들의 문제 제기로 의제로 채택할 수 없었다. 소련은 마샬플랜에 대항하여 동유럽을 상대로 한 코민포름(Cominform)을 창설하였고, 서유럽의 공산주의 계열 노동조합은 파업 등 노동 쟁의를 통해 마샬플랜의 시행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1949년 1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노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영국의 TUC 위원장이 12개월 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탈퇴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상임집행위원회는 이 사안을 다룰 권한이 상임집행위원회에 없다며 안전 수용을 거부하고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회부하기로 하자, 영국, 네덜란드, 미국 대표들이 회의장을 떠났다.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영국, 미국, 네덜란드의 노동 조직들은 세계노련을 떠나 새로운 국제조직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세계노련은 1949년 6월 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제2차 세계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영국 TUC의 활동 중단 제안을 거부하고 영국, 미국 등 세계노련 탈퇴 의사를 밝힌 노동조합들에게 공통의 목표를 위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채택하였다.

세계노련 탈퇴를 선언한 TUC의 제안으로 1949년 6월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세계자유노동조합대회가 개최되어 새로운 국제조직 건설 계획이 추진되었다. 1949년 11월 28일 런던에서 국제자유노련 창립 총회의 개최로 세계 노동조합운동의 단일한 국제 조직의 시대는 짧은 4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 51개 국가에서 67개 노총과 4,800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노련(ICFTU)이 출범한 것이다.

세계노련이 붕괴한 것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냉전의 틀이 갖추어지던 초기 단계의 치열한 진영간 갈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운동 내부에 존재해 왔던 오래된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간의 “냉전”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앙정보부(CIA)와 미국노동연맹(AFL)이 합세하여 세계노련을 붕괴시키려 하였고, 스탈린주의의 확립은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세계노련을 악화시키면서 붕괴로 치닫게 하였다.⁷⁾

세계노련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연합국과 소련의 제후의 산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과정에 유럽과 세계를 휩쓸었던 대중적인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민

7) 미국의 CIA 요원이 AFL의 유럽 사무국 대표로 활동하면서 유럽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천주교 진영의 갈등을 부추겼고, 나아가서는 프랑스의 CGT와 이탈리아의 CGIL의 분열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세계노련에 대한 국제산별노련의 반발을 강화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족주의운동, 혁명운동의 힘도 크게 작용하였다. 세계노련의 창출에 바탕이 되었던 새로운 기운은 세계의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에 휩쓸리면서 붕괴되고 말았다. 그 후 세계노련은 완전하게 냉전 구도에 편입되었다.

1949년 대분열 이후 공산주의 국가의 노동조합 조직, 서구의 공산주의 경향의 노동조합 그리고 제3세계의 탈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했던 급진적인 민족주의 또는 공산주의 경향의 노동조합들이 세계노련을 유지해 갔다. 세계노련은 냉전체제 속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는 제3세계 노동운동에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확립과 함께 세계노련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원하는 활동보다는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노동운동과 국가 차원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치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혁명”을 승리를 이끈 후 “독재” 체제를 확립하는 등 타락의 길로 들어섰을 때 세계노련은 세계적인 “냉전” 구도라는 맥락 속에서 이들 독재 권력을 옹호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노련은 민족해방이 이루어진 제3세계 국가에서 노동조합이 국가의 통제와 탄압으로 무력화되고 와해될 때 아무런 유의미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스탈린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내부 갈등으로 세계노련은 거듭 왜소화되었다. 1950년대 소련과 유고의 갈등으로 유고노동조합총연맹이 세계노련에서 축출되고, 또 소련과 중국과의 갈등으로 중국의 총공회도 세계노련을 떠나게 된다. 세계노련 사무국은 1968년 소련의 체코 침공에 규탄 성명을 내면서 소련에 대한 자율성을 찾는 듯 하였으나, 이는 곧 없던 일로 잊혀져버렸다. 소련의 체코 침공은 서유럽

공산주의 계열 노동조합들이 세계노련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CGIL은 침공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조직했고, 1974년 세계노련 참여를 참관으로 격하시키고 1978년에는 완전히 탈퇴하게 된다. 스페인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한 주축이었던 스페인 공산당 계열의 CC.OO도 창립 이후 세계노련에 가입하지 않았다. 1980년 6월 스페인 공산주의 계열 노동조합 활동가 대회에서 스페인 공산당(PCE)의 산티아고 카릴로(Santiago Carilo) 총서기는 “세계노련이 가장 일관성 있는 노동계급 정책을 가진 조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도 못 느낀다. 그러나 세계노련은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조합들이 모여 있는 조직으로 이들 나라의 구조를 볼 때 그 정책은 이들 나라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며 세계노련의 자주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밝히면서 공산당 계열 CC.OO의 세계노련 불가입 입장을 옹호했다. 서유럽에서 마지막까지 세계노련에 참여하던 프랑스의 CGT도 1994년 탈퇴하였다.

동구권의 붕괴와 유럽연합의 심화에 대응하여 유럽에 활동 발판을 마련하려는 세계노련은 프랑스 CGT, 포르투갈 CGT-IN, 스페인의 CC.OO 등 서유럽 공산주의 계열의 노동조합을 묶어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과는 별도의 유럽노동조합 조직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유럽 통합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스페인의 CC.OO의 소극성, 세계노련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은 포르투갈의 CGT-IN의 반대, 프랑스 CGT가 유럽연합에 대해 반대에서 가입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ETUC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다.

세계노련은 1945년 창립 당시, 세계 노동조합운동의 통일된 단일 국

제조직으로 출발했다가 1949년 분열로 공산주의 계열 노동조합운동의 국제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이후 제3세계의 다양한 민중 투쟁과 관계하면서 반제국주의 운동의 대변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하는 냉전 구조 속에서 국가주의와 체제경쟁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세계노련은 1989년 이후 동구권의 붕괴로 냉전 구조가 급속히 해체되자 가맹 조직의 대규모 이탈과 기존 담론의 무력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세계노련이 여전히 노동자들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상징과 결합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은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가 국제자유노련 가입 결의를 최종적으로 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논란을 벌인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CGT가 세계노련의 제 14차 총회 결과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의 지침과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새롭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듯이 사업장, 사회, 세계 차원의 급속하고 혼란스러운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운동의 실질적인 대응을 이끌어 가는 역동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3. 세계노련의 현황

세계노련(WFTU)은 1945년 세계의 주요 노동조합운동을 망라하는 국제노동조직으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1949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비사회주의 노동조합이 탈퇴하여 국제자유노련(ICFTU)을 창설함으로써 기존 공산주의 국가의 노동조합, 서유럽의 공산주의 계열 노동조합,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계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좌파 계열의

국제노동조직이 되었다.

세계노련은 모든 형태의 착취 철폐, 생계 보장, 시대에 걸맞은 생활수준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해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세계노련의 목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식민주의, 제국주의, 경제·정치·문화 영역에서의 억압과 팽창주의에 대항해 투쟁하고, 인종차별 철폐, 저개발의 퇴치, 주권 보장, 국가의 자유와 안보, 내정간섭 배제, 정치·경제·사회적 독립, 정의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 완전고용, 권리 보장, 완전하고 충분한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노동자의 훈련·교육·문화 기회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며, 노동환경의 개선과 생태적 기준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경제·정치적 민주화, 노동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 나아가 핵전쟁 방지와 모든 군사동맹과 블록의 해체를 위해 투쟁하며, 모든 침략과 전쟁에 반대하고 국제적 데탕트, 정의롭고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국가와 인민간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군비경쟁, 특히 핵무기에 반대하며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노력하고, 완전한 탈무장화를 위한 점진적인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계노련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연대 행동의 조직과 조정, 정보 공유, 세미나와 회의 개최,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과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하며, 국제기구와 정부간 기구에서 가맹 조직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세계노련은 1989년 시작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기존의 대규모 조직이 탈퇴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존재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FNPR이 1999년 국제자유노련에 가입함으로써 세계노련 가맹조직의 대규모 이탈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노동조합에 이어 서유럽 노동조합들도 대부분 탈퇴함으로써 유럽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세계노련의 영향력은 유명무실해졌다. 가장 중요한 서유럽 가맹 조직이었던 프랑스의 CGT가 1994년 탈퇴한 것은 세계노련 몰락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⁹⁾

2000년 3월 인도에서 개최된 제14차 총회 자료에 의하면, 세계노련은 현재 120개국 총 1억3천만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이 총회에는 74개국에서 4억7백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421명의 대의원과 참관인이 참석했다고 한다. 1994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열린 제13차 총회에는 84개국 160개 조직에서 조합원 3억명을 대표하는 418명의 대의원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현재 세계노련에는 쿠바의 노동총동맹(CTC), 북한의 직총, 베트남의

8) 국제자유노련(ICFTU)에는 현재 148개 국가(또는 영토)에서 225개의 노총, 즉 노동조합 총연맹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세계 1억5천7백만명의 조직 노동자를 대표한다. ICFTU의 규모는 냉전 종식 이후에 급속하게 커졌는데, 1982년 이후 가맹 조직 수는 65%나 증가하였고, 조합원 수도 85.5%나 늘어났다. 1994년부터 2001년 기간에 기존 조직의 조합원 감소는 2천만 명에 이르렀던 반면, 신규 조직의 가맹으로 증가한 조합원 수는 880만 명에 달했다. ICFTU의 조직 확대는 대부분 동구권의 붕괴 이후 세계노련(WFTU)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계를 맺고 있던 동구권 노동조합과 남반구 노동조합들의 가입을 배경으로 한다.

9) 이탈리아 최대 노총이자 공산주의 계열인 이탈리아노동총연맹(CGIL)은 1974년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에 가입하면서 세계노련에의 참여 형태를 참관 수준으로 낮추었고, 1978년 최종 탈퇴하였다.

노동총동맹(VGCL) 등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 브라질의 노동총동맹(CGT) 등 남미, 인도의 전인도노동조합총연맹(AITUC) 등 남아시아, 앙골라의 전국통일노동자연맹(UNTA) 등 아프리카, 리비아의 생산자노동조합총연맹과 시리아의 노동조합총연맹(GFTU) 등 아랍권 국가, 키프러스의 PEO, 그리스의 PAME 등 유럽 몇몇 국가의 조직들과 호주의 건설임업광산에너지노조(CFMEU) 건설분과와 같은 개별 산별 조직들이 가입해 있다. 1994년 세계노련을 탈퇴한 프랑스 CGT의 경우, 소속 산별조직들 중 건설과 식품 산업의 노동조합이 세계노련 산하의 국제산별조직(TUI)에 가입해 있다.

세계노련은 가입 자격을 일국 단위의 노총(national center)에 국한하지 않는데, 2002년 3월 제15차 임원회의에서는 콜롬비아의 보고타산타페 통신노조와 도미니카공화국의 산토도밍고지역 자율노동자중앙기구의 가입 신청을 승인하기도 했다.

세계노련은 5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노동조합총회(World Trade Union Congress)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두고 있으며, 총평의회(General Council), 임원회의(Presidential Council), 사무국이 총회의 결정 사항을 위임받아 사업을 전개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의장, 총서기(사무총장), 부의장, 국장/서기 등을 선출한다.

세계노련은 현재 인도 뉴델리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국, 세네갈 다카르에 아프리카지역 사무국,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중동지역 사무국, 쿠바 아바나에 미주지역 사무국을 두고 있다. 2001년 4월에는 그리스 아테네에 유럽지역 사무국을 설립하여 세계노련과 산별노동조합국제조직(TUIs)의 유럽 지역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세계노련은 창립 당시 사무국을 프랑스 파리에 두었으나, 1949년 국

제자유노련과의 분열 이후 1951년부터 1956년까지는 비엔나로 사무국을 옮겼으며, 1956년부터는 체코 프라하에 사무국을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다. 1990년, 1991년 세계노련은 체코 정부로부터 사무국을 철수하라는 통보를 받는 등 동구권 붕괴와 동구권 노동조합의 이탈로 붕괴 위기를 맞았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무국을 체코 프라하에 유지하고 있다.

4. 노동조합인터내셔널(TUIs)

세계노련은 1949년 6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노동조합총회에서 자체의 국제 수준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인 노동조합인터내셔널(Trade Union Internationals, TUIs)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여, 현재 6개가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인터내셔널(TUIs)은 세계노련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국제노동조직으로서 특정 산업과 업종을 기초로 조직된다. 조직의 목표와 활동은 세계노련과 일치하지만 자체적으로 조직 구조, 규칙, 정책,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지도부를 선출한다. 노동조합인터내셔널은 세계노련의 중앙위원회, 임원회의,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와 회의에 참여하고 세계노련 총회에서 채택된 지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 농업식품상업섬유연합노동조합인터내셔널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Agriculture, Food, Commerce, Textile, and Allied Industries

- 공공부문연합노동조합인터내셔널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Public and Allied Employees

인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현재 키프로스의 Christos Alekkou Christou가 의장이며 인도의 Sukomal Sen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에너지금속화학석유연합노동조합인터내셔널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Energy, Metal, Chemical, Oil and Allied Industries 멕시코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운수노동조합인터내셔널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Transport Workers

◦건설목공건축자재산업노동조합인터내셔널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Building, Wood and Building Materials Industries

핀란드 헬싱키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있으며 현재 호주 CFMEU 건설분과위원장인 John Sutton이 의장이며 포르투갈 출신의 Jose Dinis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세계교원노조연맹

World Federation of Teachers Unions

제4장 국제자유노련

1. 국제자유노련의 탄생

1인터내셔널과 2인터내셔널이 활동하던 19세기 말이면 유럽을 중심으로 독점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노동운동도 크게 성장하여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직업별(혹은 산업별) 조직이나 국가 단위의 전국조직이 결성되기 시작하여, 19세기 말부터는 국제조직의 결성을 추진하게 된다.

직업별 혹은 산업별 국제노동조직들인 국제노동조합사무국, 즉 국제산별노련(ITSs)들의 창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국가 단위 전국조직들의 국제조직 건설도 진행되었다. 국가 단위의 전국조직들의 연대는 1901년에 영국과 독일 등 유럽지역 7개 국가의 전국조직 대표들이 코펜하겐에서 스칸디나비아 노동총회를 개최한 후, 1903년 더블린 회의에서 14개국의 국가단위 노동조합들의 연락기구인 국제노동조합서기국(International Secretariat of National Trade Union Federations, ISNTUF)을 발족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조직은 1913년에 국제노동조합연맹(IFTU)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이듬해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말미암아 국제연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난 1919년에 스위스의 베른에서 17개국 노조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노동조합연맹이 새롭게 재건되었다.

그러나 1년 후인 1920년 기독교 계통의 노동조합들이 별도의 국제조

적인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IFCTU)을 설립하였고, 1921년에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제3인터내셔널)인 코민테른(Comintern)의 지도하에 공산주의 노동조합들의 국제조직인 적색노동조합 인터내셔널(Profintern)이 창립됨으로써 국제노동운동은 바야흐로 이념의 차이에 따른 조직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¹⁰⁾ 그런 가운데 적색노동조합 인터내셔널에 의해 식민지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그때까지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국의 노동조합들이 주도해 온 국제노동운동에 비로소 아시아 등 식민지 노동자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좌우 이념에 따라서 분열되었던 국제노동조합운동 진영은 2차 세계대전 중 반파시즘의 기치 하에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5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단위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가하여 세계노련(WFTU)이 창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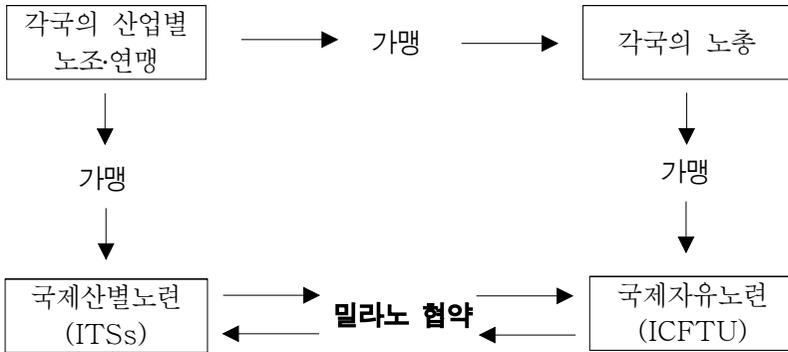
세계노련은 양대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념에 따른 분열을 거듭해온 좌우익 노동조직들을 모두 포괄하였고, 국제산별노련들도 합류키로 하는 등 노동조합의 새로운 국제조직으로서 파시즘의 절멸, 전쟁의 근절과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 임금 및 생활 수준의 개선 등을 목표로 힘찬 출발을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냉전시대의 개막에 따른 사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적인 차이에다가 전후 유럽복구를 위한 미국의 마셜플랜에 대한 세계노련의 반대에 반발하여 영국의 TUC와 네덜란드의 NVV 등 유럽의 비공산권 노조들이 탈퇴하게 되면서 분열이 시작되었다.

10) 제1차 세계대전 중 제2인터내셔널의 좌파와 중앙파들에 의해서 국제조직 재건 노력이 행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레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었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성공하고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인 1919년 3월에 모스크바에 독일을 비롯한 30개국 대표들이 모여 제3인터내셔널인 코민테른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1949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국제자유노련(ICFTU)이 창립되었다.¹¹⁾ 세계노련과 국제자유노련, 두 진영의 입장은 국제산별노련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대부분의 국제산별노련과 자본주의권 노조들은 국제산별노련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세계노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국제산별노련(ITSs)과 국제자유노련은 1951년에 밀라노협약(Milan Agreement)을 맺어 재정과 조직 운영에서 상호 독자성을 인정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상호간의 조직적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게 된다.¹²⁾

<그림 1> 국제자유노련과 국제산별노련의 관계



(출처) Heinz Bendt (1996), 『One World, One Voice, Solidarity -The 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s』, p.9,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

11) 한국노총은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연맹(대한노총) 시절 국제자유노련(ICFTU)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여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직업총동맹(GFTU)은 세계노련(WFTU)에 가맹하였다. 민주노총은 1996년 국제자유노련에 가입했다.

12) 밀라노 협약은 국제산별노련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동일한 노동운동의 일원으로서 국제자유노련의 일반정책을 수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국제산별노련들이 공식 비준을 유보하다가 1969년 협약 개정을 통해 국제자유노련의 정치적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나서야 협약을 수용한다.

국제자유노련은 창립 후 20여년 동안 반공주의와 노사협조주의 경향을 강하게 보였으나, 1960년대 말 유럽을 휩쓴 진보적 지식인 및 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¹³⁾

2. 국제자유노련의 조직구조 및 운영체계

벨기에의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자유노련(ICFTU)은 2002년 현재 전세계 150개국, 231개 노총이 가맹해 있으며, 조합원수는 1억 5천만명에 이른다. 국제자유노련의 최고 의결기구인 세계총회(World Congress)는 4년마다 개최되며, 총회에 참가하는 조직별 대의원수는 가맹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된다.¹⁴⁾

총회 개최지는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결정되는데, 제15차 총회(1992년)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제16차 총회(1996년)는 유럽의 벨기에, 제17차 총회(2000년)는 아프리카의 남아공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오는 제18차 총회는 2004년 12월에 일본에서 개최된다.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대개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집행

13)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노총(AFL-CIO)은 국제자유노련의 사회민주주의 지향성에 반발하여 1969년에 탈퇴하였다가, 1982년에서야 복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제자유노련의 창립을 주도하였고 조합원수가 1천3백만명으로 최대조직인 미국노총은 유럽 노동조합에 비해서 국제자유노련 안에서의 주도권이 약한 편이다.

14) 국제자유노련(ICFTU)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수 대비 대의원수 배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10만명까지 1명, 10만1명부터 25만명까지 2명, 25만1명부터 50만까지 4명, 50만1명부터 200만명까지 6명, 200만1명 500만명까지 8명, 500만1명부터 750만명까지 12명, 750만1명부터 1000만명까지 15명, 1000만1명 이상 20명 순이다. (ICFTU 규약 제2조)

위원회(Executive Board)가 최고 의결기구가 되며, 이밖에 재정이나 운영상의 긴급한 안건을 다루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있다. 국제자유노련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무총장과 집행위원들은 세계 총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002년 초에 영국 출신의 사무총장인 빌 조던(Bill Jordan)이 영국의 상원의원이 되면서 사퇴하고 같은 영국 출신의 가이 라이더(Guy Ryder)가 새 사무총장에 피선되었다.

집행위원은 지역별로 아프리카 6명, 아시아 8명, 오세아니아 2명, 서아시아 1명, 중동 2명, 유럽 15명, 라틴아메리카 6명, 북아메리카 6명, 서인도제도 1명이 각각 배정되어 있다. 이밖에 국제자유노련의 여성위원회 대표(최대 5명까지)와 청년위원회 대표(1명)에게도 집행위원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진한 대한노총 위원장이 초대 집행위원에 피선된 적이 있으나, 당시의 국내 정치 상황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다가, 40년만인 1992년 한국노총의 박종근 위원장이 절반 임기의 집행위원에 피선되었고, 박인상 위원장도 집행위원을 역임했다. 그리고 이남순 현 위원장 역시 4년 임기의 정식 집행위원으로 피선되어 활동하고 있다.¹⁵⁾

15) 민주노총의 국제자유노련(ICFTU) 가입은 전신이었던 전노협이 1991년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한국노총과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사무소(ICFTU-APRO)의 반대로 가입승인이 보류되었다. 이후 1995년 민주노총이 결성되어 가맹을 신청하자 같은 해 12월에 열린 국제자유노련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996년 3월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이 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1996년 6월 개최된 집행위원회의에서 가입 승인이 이뤄졌다. 그 후 200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었던 제17차 총회에서 한국노총 위원장이 집행위원에, 민주노총 국제국장인 교체집행위원에 각각 선출된 바 있다.

가맹조직들이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국제자유노련의 가맹비(affiliation fee)는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 1천명당 납부 기준액을 근거로 분기별로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¹⁶⁾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이 열악한 국가의 가맹조직에 대해서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가맹비를 미납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 체납기간이 2분기이상 4분기 미만인 조직은 총회 참석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4분기 이상 8분기 미만을 체납한 조직은 총회참석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8분기 이상을 체납한 조직은 국제자유노련을 탈퇴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체의 권한이 정지된다.

한편, 국제자유노련은 1949년의 창립총회에서 지역기구 설립과 지역단위 활동을 증대하기로 한 결의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ICFTU-APRO), 라틴아메리카 지역사무소(ICFTU-ORIT), 아프리카 지역사무소(ICFTU-AFRO) 등 각 대륙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들 지역 조직들도 국제자유노련과 같이 총회,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사무총장 등 주요 간부들의 선출기관과 방식도 국제자유노련과 동일하다.¹⁷⁾

16) 지난 2000년 열린 제17차 ICFTU 세계총회에서는 조합원 1000명당 가맹비 납부 기준액을 2001년 161.80유로, 2002년 165.05유로, 2003년 168.35유로, 2004년 171.70유로로 결정한 바 있다.

17) 유럽지역에도 국제자유노련의 지역사무소인 ICFTU-ERO가 있었으나, 1973년에 유럽노동조합총연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이 창설되면서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다. ETUC는 ICFTU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ETUC에는 ICFTU 가맹조직 뿐만 아니라 세계노동총연맹(WCL)이나 세계노련(WFTU) 가맹조직들도 참여하고 있어 ICFTU와 국제산별노련 내에서 ETUC의 위상과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기도 한다.

3. 국제자유노련의 주요 활동

국제자유노련(ICFTU)은 ‘빵, 자유, 평화’를 모토로 하여 ① 세계 각 지역 노동자의 이익 증진, ②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사회보장을 위한 투쟁, ③ 국내 및 국제적 빈부격차 축소, ④ 국제 이해, 군비축소, 평화, ⑤ 각 지역 노동자의 조직화 지원, ⑥ 각 지역에서의 독재와 억압, 인종, 피부, 신념, 성차별의 철폐, ⑦ 기본적인 인권 및 노동조합권 옹호 등 7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활동으로는 △ 노조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 △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의 박멸, △ 남녀평등, △ 환경보호, △ 전세계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 젊은 노동자들의 조직화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에이즈(AIDS) 퇴치와 제3세계 노조의 권리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사회 정의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제17차 세계총회에서는 노동기본권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활동계획을 수립하였다. 21세기를 맞이한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려는 시도에서 새천년 논쟁(Millennium Review)을 제기하여 국제자유노련의 각종 회의와 각급 조직단위에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산별노련(ITSs),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등 국제노동조직들과 다국적기업, 노동권 탄압, 민주화 등 공동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의 틀인 글로벌 유니언(Global Unions)을 발족하기도 했다.

국제자유노련은 유엔경제사회위원회의 자문기구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유엔 산하 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참석할 자격을 갖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국제자유노련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유엔 산하 기관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에서의 활동은 국제자유노련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ILO 활동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노련은 냉전시기에는 세계노련과 경쟁하면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로는 ILO의 노동자그룹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일례로써 3년마다 이루어지는 ILO 이사회의 노동자대표(정이사 및 부이사 각각 14명) 선출과정에서도 국제자유노련이 막후에서 인선 조정작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대표 이사 대부분이 국제자유노련 가맹조직에서 선출되고 있다.¹⁸⁾

국제자유노련은 국제 사회에서 ILO의 역할과 영향력을 증대시켜서 유엔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함께 세계화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자유노련은 ILO를 통한 문제 제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IMF, 세계은행, WTO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IMF나 세계은행

18) ICFTU 가맹조직이 아닌 중국총공회(ACFTU)는 1993년부터 매년 ILO 이사회 진출을 시도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2년의 제90차 ILO 총회에서 ICFTU가 내세웠던 이스라엘노총 대표를 누르고 정이사로 선출되는 이변(?)을 이뤄냈다. 이 일로 인해 ICFTU 내부에서는 중국총공회(ACFTU)를 지지한 조직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과 같은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s, IFIs)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들 기구가 개발도상국에 국제금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민영화와 민간기업 구조조정을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다.

특히 국제자유노련은 1995년에 WTO가 출범하자 WTO 규정에 ILO 핵심협약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조항(Social Clauses)을 포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¹⁹⁾ 구체적으로 ILO와 WTO가 그러한 경제적 제재 결정을 위한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서구 선진국의 입장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기본권 억압, 죄수 및 아동노동의 이용 등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 저렴하게 생산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의 부과, 수입쿼터의 유지 등 일정한 무역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 무역과 노동을 연계하자는 국제자유노련의 전략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노동조합들 사이에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간 경쟁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 안에서 국가간 무역과 자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통합이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국제노동운동 진영

19) 이와 관련하여, 1994년 제81차 ILO 총회에서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고, 같은 해 열린 제261차 ILO 이사회에서는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무역 자유화의 사회적 차원』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자유노련은 이미 유럽연합(EU)내에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경제통합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반영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는 유럽노동자평의회(European Workers Council)를 모델로 하여, 90년대에 새롭게 출범한 유럽아시아정상회담(Asia-Europe Meeting, ASEM)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논의 구조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먼저 ASEM의 경우 노동조합과 관련 NGO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ASEM민간포럼이 결성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국제자유노련의 주도 하에 ASEM 회원국의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여하는 ‘ASEM 노동포럼’도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²⁰⁾ APEC의 경우에도 국제자유노련의 주도로 회원국 노동조합 대표들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 노동조합 네트워크(Asia Pacific Labour Network, APLN)가 1995년 호주에서 발족되어, APEC의 논의구조에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²¹⁾ 그러나 사용자대표들은 자문위원회(ABAC)를 구성하여 APEC의 논의구조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국 정부들

20) 2000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SEM과 관련하여 ASEM 회원국의 노총과 ICFTU, OECD-TUAC 등 국제노동운동단체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한 사회부문에 관한 논의를 ASEM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21) 현재 APLN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은 APEC 회원국인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 14개국 노총이며, 최근 들어 ICFTU 조직이 아닌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노총들도 참석하고 있다. APLN은 매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에서 회의를 갖고 있는데, 오는 2005년에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노동조합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어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국제자유노련은 1949년 창립 이래로 창립조직인 한국노총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왔지만, 본격적인 관심과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화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 폭발적인 성장과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면서부터다. 활동 방식은 주로 조사단 파견을 통해서 이루어 졌는데, 1987년, 1988년(당시 4당 대표를 모두 만남), 1992년, 1994년 등 4회에 걸쳐서 노동관계법, 구속 및 해고노동자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996년에는 민주노총의 가입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파견한 적이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집행위원회 등 공식기구에 보고되었으며, 매년 발표되는 세계의 노동조합권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Annual Survey of Violence of Trade Union Rights)에도 한국 실태가 빠짐없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서 국제자유노련은 한국정부에 대해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비판하고, 제3자 개입금지, 교원노조 및 복수노조 금지 등과 관련된 노동법의 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자유노련의 월간지인 『자유노동 세계』(Free Labour World)에도 한국 관련 기사가 자주 실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있던 2002년에는 한국의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국제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한 바 있다.²²⁾

22) 국제산별노련(ITSS)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 캠페인을 위해서 ICFTU는 유니폼을 입은 축구선수단 사진을 소재로 한 포스트를 제작하였는데, 월드컵에서 한국축구가 많은 논란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전세계 노동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4. 국제자유노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1) 개요

국제자유노련 아시아 지역사무소는 1950년에 아시아지역의 몇몇 국가를 방문하였던 ICFTU 대표단의 권고에 의해서 1951년 5월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설립되었다. 국제자유노련 아시아 지역사무소(ICFTU-ARO)는 1984년 서울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태평양지역을 포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명칭이 오늘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APRO)로 발전하였다. ICFTU-APRO는 지역적으로 전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창립 당시 8개국 노총의 384만명의 조합원에서 2003년 현재는 총 28개국 40개 노총의 3천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ICFTU-APRO의 조직구조 및 운영체제는 국제자유노련과 동일하여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총회는 4년마다 열리며,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²³⁾ ICFTU-APRO의 본부는 싱가포르노총(SNTUC) 본부 안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도의 뉴델리에 남아시아 지부를 두고 있었으나, 재정난 때문에 2003년 9월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폐쇄기로 결정한 바 있다.

ICFTU-APRO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무총장은 초창기부터 인도 출신의 노조간부들이 연속해서 맡아오다가 1989년부터는 일본 섬유노

23) ICFTU-APRO의 차기 총회는 ICFTU의 세계총회(2004년 12월, 일본) 직후인 2005년 1월에 네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런(젠센) 출신의 다카시 이즈미(Takashi Izumi)에 이어서 1999년부터는 같은 젠센 출신의 노리유키 스즈끼(Noriyuki Suzuki)가 사무총장에 선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ICFTU-APRO에서 일본노총(連合)의 역할과 영향력은 거의 상당한 수준이다. 재정적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무총장 및 위원장 선출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²⁴⁾

한국에서는 한국노총이 오랫동안 연속해서 집행위원과 비상임 부위원장직을 맡아오고 있으며,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에도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96년에 국제자유노련에 가입함으로써 ICFTU-APRO의 회원조직이 되었지만 ICFTU 본부 차원의 활동에 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2) 주요활동

1996년에 개최된 국제자유노련(ICFTU)의 제16차 세계총회 이후 교육과 프로젝트사업이 지역조직으로 이관되면서 국제자유노련의 활동에 있어서 대륙별 지역조직의 역할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ICFTU-APRO는 조직 내에 교육, 홍보, 사회경제정책, 인권과 노동권, 여성, 청년 등의 담당 부서를 두고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4) 지난 2000년에 열렸던 ICFTU-APRO 총회에서 그동안 일본노총(連合, 령고)가 추천한 후보가 위원장으로 선출되던 관행을 깨고, 호주노총(ACTU) 위원장인 샤란 버로우(Sharan Borrow)가 치열한 경선 끝에 임기 4년의 위원장에 선출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주된 활동방식은 지역차원의 국제회의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회원조직들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이슈에 대해서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자료를 발행하거나 국가별 세미나를 통해서 회원조직들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지역 안에서 노동상황이 열악하거나 국제자유노련 가맹조직이 없는 국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총공회와 베트남노총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직총과 접촉을 시도하는가 하면,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조합 진영이 극심한 분열상을 보였던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직 통합을 통한 새로운 전국조직의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²⁵⁾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노동조합의 재건을 모색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또 한가지 특기할만한 활동으로서 1980년대 중반부터 5년 주기로 개최되었던 ICFTU-APRO 청년제를 들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1994년 8월에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600여명의 청년 노조간부들이 참가한 제3회 청년제가 성대하게 개최된 후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개최를 희망하는 조직이 없어서 중단되고 말았다.

한편, 1994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ICFTU-APRO 집행위원회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맞고 있는 동시에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위협과 도전을 가해오고 있다는 인식에서 정부와 사용자와의 대화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25)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존의 노총이었던 SPSP가 무력해지면서 수십개의 전국조직이 난립하던 상황에서 ICFTU-APRO의 지원에 힘입어 2003년 초에 새로운 통합노총인 ITUC가 설립된 바 있다.

사회헌장(Social Charter)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1997년 아시아 지역을 강타했던 경제위기를 계기로 ICFTU-APRO는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대화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국제금융기구와의 대화에서 ICFTU-APRO는 이들 금융기구가 추진하는 민영화와 규제완화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노동기본권의 보호와 빈곤퇴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지역경제블록에 대응하는 소그룹들

ICFTU-APRO는 한국과 일본이 있는 동북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이스라엘과 터키, 북쪽으로는 몽고, 남쪽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실로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정치발전과 경제수준도 국가별로 엄청난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ICFTU-APRO의 회원조직들이 이해관계가 비슷한 소지역별 그룹을 형성해왔으며, 그러한 경향은 최근의 경제블록화와 맞물리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먼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일찍부터 지역협력체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세계화의 영향으로 회원국 정부들간에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의 창설이 논의되는 등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ASEAN+3)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노총(TUCP)과 말레이시아노총(MTUC)의 주도로 ASEAN

회원국 노동조합들의 협의체인 아세안 노동조합협의회(ASEAN Trade Union Council, ATUC)가 1996년에 발족하였다. 그 후 ATUC는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무역자유화를 비롯한 공동관심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는데, ATUC에 참가하고 있는 조직은 앞서 말한 두 개의 노총과,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SEAN 회원국가의 노동조합들이다.

두 번째로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지역 7개 국가의 협의체인 남아시아지역협력협회(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에 대응하기 위한 남아시아 노동조합협의회(South Asian Regional Trade Union Council, SARTUC)의 출현이다. 이 SARTUC은 SAARC가 ASEAN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지대(South Asian Free Trade Area, SAFTA) 창설을 논의함에 따라 노동조합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2년 1월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관련 노동조합 대표들이 모이게 되면서 구체화되었다. 현재 SARTUC에 참가하고 있는 조직은 인도를 비롯하여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SAARC 회원국의 노동조합들이며, 인도의 뉴델리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세 번째로는 1970년대부터 남태평양의 14개 도서국가와 호주 및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남태평양 포럼(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PIFS)이 1990년대부터 회원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노동조합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족된 남태평양 노동조합협의회(South Pacific Oceanian Council of Trade Unions, SPOCTU)를 들 수 있다. 1995년경부터 이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매년 한 두 차례씩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협의회 구성이 추진되어 2003년 10월 정식 발족되었다.

이들 그룹별 모임이 최근에 생겨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초부터 있었던 한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모임인 북태평양 노동조합포럼(North Pacific Trade Union Forum)은 1990년대 말을 지나면서 모임이 중단된 사례이다. 회원국 노총이 매년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여 이주노동자 문제와 다국적기업과 같은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해 왔으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자유노련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노동네트워크(APLN)가 구성되면서 기존의 북태평양노조포럼은 그 활동이 중단되고 말았다.

제5장 국제산업별노련

1. 국제산업별노련의 역사

노동운동에 있어서 국제연대는 이미 19세기말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결실로서 수많은 국제노동조직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의 노동조합들이 주로 특정 직업이나 직종을 구성단위로 하고 있었던 까닭에 초창기의 국제노동조직들은 대부분이 제화공, 광부, 재단사, 선원, 부두노동자 등의 직업별 조직이었다. 그 숫자는 1900년에 17개에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4년에는 무려 33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졌다.²⁶⁾ 이들 직업별 국제노동조직들은 양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조합들이 산업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많은 조직들이 사라지거나 여러 직업별 조직들이 합병하여 산업별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그 숫자가 20개 내외로 줄어들었다. 그 후 산업사회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의 발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노동조합운동의 성장 등에 힘입어 국제산업별노련(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s, ITSs)은 1980년대 초까지 실용주의 전략을 추구하면서 발전해왔다.

26) 이들 초창기 국제노동조직들을 국제직업사무국 혹은 국제산업사무국 (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s, ITSs)이라고 불렀다. 통상 ITSs라고 불리는 국제산업별노련의 영어 명칭은 국제노동조직들이 산업별로 재편된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0년부터 국제노동연맹(Global Union Federations), 즉 GUFs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다시 말해 ITS와 GUF는 같은 산업별 국제노동조직, 즉 국제산업별노련을 일컫는 용어로 이 책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쇠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대부분의 국제산별노련들이 조직 감소와 재정난에 봉착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제산별노련들의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만 해도 국제교원노련(Education International, EI - 1993년),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emical, Energy, Mining and General Workers' Union, ICEM - 1995년), UNI (Union Network International - 2000년) 등이 기존에 있던 2개 이상의 국제산별조직들의 합병을 통해 거대 조직으로 재편된 바 있다.

이처럼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조합운동의 성쇠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해온 결과, 2003년 현재 국제운수노련(ITF), 국제금속노련(IMF), 국제식품노련(IUF), 국제공공노련(PSI),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 국제섬유노련(ITGLWF), 국제목공노련(IFBW), 국제교원노련(EI), 국제언론노련(IFJ), 국제통신사무금융노련(UNI) 등 모두 10개의 국제산별노련(Global Union Federations, GUFs)이 존재하게 되었다.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줄어들어 최대 6개에서 최소 3개(서비스업종, 금속업종, 기타 제조업종) 정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2. 조직구조 및 주요활동

국제산별노련들(GUFs)은 각기 독립된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대부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4년

마다 개최되는 세계총회(World Congress)이며, 총회가 없는 연도에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²⁷⁾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는데, 스스로 물러나거나 정년 때까지 연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제산별노련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대개의 국제산별노련이 여러 개의 산업 또는 직업 부문을 포괄하게 됨으로써 내부에 소산업별 혹은 직업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국제운수노련(ITF)의 경우 선원, 항만, 항공, 철도, 도로교통 등의 분과를 두고 있다. 국제통신사무금융노련(UNI)은 상업, 전기, 금융, 출판 등 무려 12개의 분과를 두고 있다. 아울러 많은 국제산별노련이 산하에 여성, 청년, 환경, 건강, 안전 등 특정 분야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산업별, 분야별 분과 조직과 함께 국제산별노련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별 조직이다. 대부분의 경우 유럽,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대륙별로 지역조직을 두고 있다. 국제산별노련은 세계 각국의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혹은 산업별 연합조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며, 통상 집행위원회나 총회의 승인을 거쳐서 가입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국제산별노련은 가맹조직들의 내부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가맹조직의 강화를 위한 재정적,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조직활동에 대한 자문, 노동쟁의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조직, 그리고 각종 캠페인 후원 등 가맹조직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7) 근래 들어 집행위원회의 규모가 커져서 신속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요 집행위원들과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별도로 두는 조직도 늘고 있다.

국제산별노련은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의 국제연대 촉진, 인권과 노동조합권의 보호,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의 실현이라는 세 가지 공통 목표를 추구하면서, 국제자유노련(ICF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회의(OECD-TUAC) 등 다른 국제노동운동 기구와 공동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국제산별노련의 전통적인 활동방식은 각종 국제회의를 조직하여 노동현안에 대한 토론과 조직적인 결의를 모아내는 방식이었으나, 근래에는 가맹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 캠페인을 통해서 직접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다국적 혹은 초국적 기업들의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들 기업들의 반노동자적, 반사회적인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그러한 노력은 국제산별노련과 다국적기업간에 결사의 자유 보장, 단체교섭권 인정, 건강과 안전, 차별대우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등 최소 한도의 노동기준을 규정한 세계협약(Global Agreement 또는 Framework Agreement)의 체결이라는 결실을 낳고 있다. 현재 국제협약체결에 가장 적극적인 국제산별노련은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으로서 모두 6개의 다국적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뒤를 이어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5개, 국제식품노련(IUF)이 4개, 그리고 국제금속노련(IMF)과 UNI가 각각 3개씩의 세계협약을 체결하고 있다.²⁸⁾

28) 1988년에 국제식품노련(IUF)과 프랑스의 다국적 식품회사인 다농(Danone) 사이에 최초로 체결된 세계협약은 현재까지 모두 21개가 체결되었다. 그 가운데 2002년에 새로 체결된 것이 8개에 이를 정도로 세계협약 체결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말 현재 전세계 200만명의 노동자들이 세계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운수노련(ITF)은 2000년에 국제선주 협회(IMEC)와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였다. 한편, 국제산별노련들은 1951년 국제자유노련(ICFTU)과 맺은 밀라노 협약에 의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산별노련과 국제자유노련은 1990년에 협약 개정을 통해서 각 조직의 사무총장들이 매년 두 차례의 국제산별노련 전체회의(General Conference of GUFs)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²⁹⁾ 또한 상대방의 총회나 집행위원회에도 참석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발언권은 주어지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최근에는 ICFTU, OECD-TUAC과 함께 Global Unions라는 틀에서 국제금융기구들과의 대화, ILO 활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공동활동과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국제산별노련의 조직별 현황

1) 국제교원노련(EI) www.ei-ie.org

현재 조합원수 2천6백만명의 최대 국제산별노련인 국제교원노련(Education International, EI)은 기존의 양대 국제교원조직이었던 세계 교사조직연합(World Confederation of Organisations of the Teaching Profession, WCOTP)과 IFFTU(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e Teachers' Unions)가 1993년에 합병하면서 탄생하였다. EI는 교육자, 교사, 강사 등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관련 종사자들

29) 2003년 현재 국제산별노련 전체회의의 의장은 ITF 사무총장인 데이빗 콕크로프트(David Cockroft)가 맡고 있다.

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교육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전문성을 보호하고 교육의 발전을 통해 평화, 민주주의, 사회정의, 평등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159개 국가의 310여개 노동조합과 교육관련 단체들이 가맹해있는 EI는 본부를 벨기에의 브뤼셀에 두고 있으며, 아프리카(토고의 로메), 아시아태평양(말레이시아의 칼라룸푸르와 피지), 유럽(벨기에 브뤼셀), 라틴아메리카(코스타리카의 산호세), 북아메리카(세인트루시아) 등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최고 의결기구인 세계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데, 2001년 7월에 태국의 줌티엔(Jomtien)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미국교사노조(NEA)의 마리 푸트렐(Mary Hatwood Futrell)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으며, 사무총장은 프레드 반 리우웬(Fred Van Leeuwen)이 맡고 있다.

1994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교육총회에서 제정된 ‘세계교사의 날(매년 10월 5일)’을 기해 교사의 사회적 공헌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1998년 제2차 세계총회 때부터 ‘모두에게 양질의 공교육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공교육성, 양질의 교육 실현, 모든 아동들에게 교육기회 제공 등을 실현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교조가 합법화 이전인 1993년에 EI에 가맹하여 많은 지원을 받아왔으며, 2001년의 총회에서 김지예 부위원장이 15명의 집행위원 중 1명으로 선출된 바 있다. EI는 가장 많은 조합원을 갖고 있는 미국의 교사노조인 NEA와 AFT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교사노조들이 미국의 영향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교육시장의 개방과 교육정

책의 상업화가 확대되면서 회원조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IG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원복지 차원의 활동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 www.ifbww.org

국제건설목공노련(International Federation of Building and Wood Workers, IFBWW)은 국제건설노련(Building Workers' International)과 국제목공노련(Wood Workers' International)이 1934년에 통합하면서 탄생하였지만, 1883년에 창설된 국제목수노련(Joiners' Federation)을 조직의 기원으로 삼고 있어서 가장 오래된 국제산별노련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 후 국제석공노련(International Secretariat of Stone Masons), 국제페인트공노련(International Secretariat of Painters and Allied Trades), 국제벽돌공노련(International Secretariat of Bricklayers) 등이 IFBWW에 통합됨으로써 건설관련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국제산별조직이 되었다.

2차대전 이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현재의 스위스 제네바로 본부를 옮긴 IFBWW에는 현재 124개국에서 287개 노조가 가맹되어 있으며, 1천만명 이상의 건설산업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 많은 지역사무소를 갖추고 있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말레이시아 지역사무소를 두고 그 산하에 태평양지역 연락사무소(호주 멜버른), 남아시아 프로젝트 사무소(인도 뉴델리), 산업안전 및 삼림프로젝트 사무소(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을 두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 혹은 세계협약(global agreement) 체결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03년 현재 Ikea(스웨덴), Faber-Castell(독일), Hochtief(독일), Skanska(스웨덴), Balast Nedam(네덜란드) 등 5개의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고 의결기구인 세계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총회는 2001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차기 총회는 2005년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의 연합노련이 1980년에 가맹하였고, 민주노총의 건설노련이 1992년부터 가맹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IFBWW는 한국의 노동탄압과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ILO에 최초로 의의제기를 한 국제산별노련 가운데 하나로서, 이후에도 한국정부와 기업들의 노동탄압에 적극 개입해오고 있다.

3)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 www.icem.org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emical, Energy, Mining and General Workers' Union, ICEM)은 1907년에 창립되어 1천5백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던 국제화학에너지노련(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emical, Energy and General Workers, ICEF)과 1890년에 발족하여 4백5십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가장 오래된 국제조직의 하나였던 국제광산노련(Miners' International Federation, MIF)이 1995년에 통합되면서 탄생하였다.

에너지, 광산, 제지산업, 고무산업, 보석산업, 도자기 및 유리산업, 환

경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포괄하는 ICEM은 2001년 6월 현재 108개국 399개 노동조합에서 2천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

존 메이틀랜드(John Maitland) 위원장과 프레드 히스(Fred Higgs)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는 ICEM의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부 및 중북부,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등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다. 이들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직은 1997년 태국 푸켓회의에서 아태 지역의 가맹조직들이 모여 결성하여 그해 호주에서 열린 ICEM 총회에서 공식 인준을 받았다. 2003년 현재 15개국 64개 노조가 가입해 있는 아태지역 조직은 한국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운동가인 피정선 씨가 아태 지역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노총의 화학노련과 전국전력노조, 민주노총의 화섬연맹이 가맹해 있다.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만큼 활동영역이 넓은 가운데,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에서의 노동기본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계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3년 현재 Statoil(노르웨이), Freudenberg(독일), Endesa(스페인), Norske Skog(노르웨이), AngloGold(남아공), Eni(이태리) 등 6개의 다국적기업들과 세계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4) 국제언론노련(IFJ) www.ifj.org

국제언론노련(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IFJ)은 당초 1926년 2월 파리에서 창설됐으나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 2차 대전 중에는 연합국 기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연합국기자연

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of Allied Countries)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전쟁이 끝난 1946년 26개국의 기자들이 코펜하겐에서 국제기자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Journalist, IOJ)를 결성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의 언론자유와 노동조합의 독자성에 관한 견해차이로 말미암아 미국과 영국 등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이 기구를 탈퇴해 1952년 5월 14개국 언론노조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 결성한 것이 지금의 IFJ다. 그러나 IFJ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기자협회와 같은 조직들도 포괄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의 국제조직으로 인정되지 않다가 1985년의 국제산별노련 총회(General Confederation of 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s)에서 비로소 국제산별노련의 일원으로 승인되었다.³⁰⁾

IFJ는 언론의 자유와 사회정의를 수호하고 언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급적 정치적 색깔은 배제해 왔다. 1999년에는 국제언론인보호기금(International Safety Fund)을 설립해 폭력에 희생당한 언론인과 그 유가족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인에게 나탈리상을 시상하고 있다.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를 통해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2001년 6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100개국 3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선언과 한국의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30) IFJ는 노조 이외의 순수 기자단체들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노조를 조직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규약에서도 "세계 노동조합운동과 뜻을 같이하며 강력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인 노조 활동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사회정의를 수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호주 출신의 크리스토퍼 워런(Christopher Warren)이 1998년 이후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아일랜드 출신의 에이든 화이트(Aidan White)가 1987년부터 맡아왔다.

현재 IFJ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104개국 130여 조직의에서 50만명의 언론인이 가입해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과 미국 중심의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활동 범위를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아시아(호주), 아프리카(알제리), 유럽(벨기에), 중남미(베네수엘라) 등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4년에 관훈클럽이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한데 이어 1966년에 한국기자협회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현재 MBC의 이세용 국제협력부장이 23명으로 구성된 집행 위원으로 피선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언론노조 연맹은 1990년에 가입하였다.

한편, IFJ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언론민주화운동을 주시하고 지원해 왔으며, 1990년 KBS노조의 방송민주화 투쟁 당시 이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1991년에는 한국언론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한국의 언론민주화 투쟁에 대한 ‘한국의 언론자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며, 기자협회, 언론노련과 공동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운동’ 등 세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2000년 4월에는 에이든 화이트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찾아 국민일보 정상화를 위한 국민일보노조 위원장의 단식농성장과 사장퇴진 투쟁을 전개하던 CBS노조를 지지방문한 바 있다.

5) 국제금속노련(IMF) www.imfmetal.org

국제금속노련(International Metal Workers' Federation, IMF)은 1893년 스위스 취리히에 모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헝가리, 스위스, 미국 등 8개국 30명의 노조지도자들이 전세계 금속노동자들의 국제적 협력기구의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1904년 암스테르담대회를 통해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44만명이었던 조합원수가 1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2백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조직 규모가 급증한 결과, 현재는 100여개국의 2백여 노조 2천5백만에 이르고 있다.

IMF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인도 뉴델리,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 칠레의 산티아고,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 등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재의 사무총장은 스웨덴금속노조(Svenska) 출신의 마르첼로 말렌타키(Marcello Malentacchi)가 맡고 있으며, 위원장은 독일금속노조(IG Metall)의 클라우스 즈비켈(Klaus Zwickel) 위원장이 맡아오다가 최근에 사임하여 현재는 공석인 상태이다.

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선출,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등은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Congress)에서 결정되는데, 2001년 11월에 호주의 시드니에서 ‘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Dealing with global challenges)’이라는 주제 하에 제30차 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대회에서 세계화에 대응해 금속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투쟁과 연대를 강화하는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30년 전부터 모국과 하청국 노조들의 연대를 모색하는 세계노동자평의회(World Company Councils)를 조직(현재 자동차산업, 전기전자산업, 기계산업 등에서 18개의 평의회가 조직됨)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요 다국적기업들

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준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2003년 현재 Merloni Elettrodomestici(이탈리아), Volkswagen(독일), Daimler Chrysler(미국) 등 3개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외 중요한 사항은 가맹조직 대표들이 참여하여 2년마다 열리는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와 연 2회 이상 소집되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다. 18명의 집행위원은 서유럽 4명, 동유럽 2명, 북아메리카 4명, 라틴아메리카 2명, 아프리카 3명, 아시아태평양 3명 등 각 대륙별 의석배정을 기초로 중앙위원회에서 임명된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의 금속노련(FKMTU)이 1967년부터 가맹조직으로서 연관을 맺어 오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중반에는 민주노총의 금속산업연맹(KMWF)의 가맹이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한국의 금속산업연맹, 남아공과 브라질의 금속노조들이 3개 회의를 구성하여 IMF 내에서 새로운 흐름의 형성을 주도하면서 제3세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 국제섬유의류피혁노련(ITGLWF) www.itglwf.org

ITGLWF(International Textile, Garment and Leather Workers' Federation, ITGLWF)는 가장 오래된 직업별 국제노동조직 가운데 하나인 국제제화공노련(International Boot and Shoemakers' Federation, 1871년에 창립)이 1970년에 국제섬유노련(International Federation of Textile Workers' Unions, 1894년에 창립)과 통합하면서 탄생하여 현재 110개국 217개 조직에서 1천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

최고의결기구인 세계총회는 4년마다 열리며, 34명으로 구성된 집행 위원회는 매년 한차례씩 열리고 있다. 벨기에의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영국섬유노조 출신의 닐 커어니(Neil Kearney)가 사무총장을, 같은 영국의 운수일반노조의 피터 부쓰(Peter Booth)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산업의 특성상 조직규모가 대체로 작으며 노동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몇 년 전부터 세계 각지의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혹은 Free Trade Zones)에서의 노동기본권 준수와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대륙별 지역조직은 아메리카(FITTWCC/ORI, 베네수엘라 소재), 유럽(ITGLWF/ERO, 벨기에 소재), 아시아(TWARO, 일본 소재), 아프리카(ARCC,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네 곳에 있는데, 이들 지역조직들은 각자의 의사결정기구를 갖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조직인 TWARO는 1960년에 창설되어 현재 20개 국가 53개 조직에서 24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일본 젠센의 다카기(Tsuyoshi Takagi)와 고노(Akiko Gono)가 각각 지역 의장과 사무장을 맡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의 섬유유통노련이 TWARO가 출범한 직후인 1960년에 가맹하여 지역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가운데, 현 오영봉 위원장이 TWARO의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7) 국제운수노련(ITF) www.itf.org.uk

국제운수노련(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은 1896년 파업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조직 결성의 필요성을 갈파한

유럽의 선원 및 부두노동조합 지도자들에 의해 영국 런던에서 출범하였고, 2년 후에 육상교통산업의 노동자들을 포괄하게 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게 되었다. 그 후 지속적인 조직확대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전세계 137개국의 621개 운수관련 노동조합이 가맹해 있으며, 5백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

업종별로 철도(약 137만명), 도로교통(130만명), 내륙수운(3만여명), 항만(30만명), 해양선원(68만명), 근해어업(11만명), 항공산업(40만명), 관광산업(5만명) 등 8개의 분과를 두고 있으며, 해양선원과 항만 조직으로 구성된 공정실행위원회(Fair Practice Committee)라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영국의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아프리카(케냐의 나이로비), 아시아태평양(일본 도쿄), 유럽(런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등 4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최고 의결기구인 세계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가장 최근으로는 2002년 8월에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제39차 총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1996년에는 ITF창립 100주년기념 특별총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바 있다. 집행위원회는 지역별로 선출되는 37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주요 가맹국인 한국은 계속해서 집행위원 1명을 배정받고 있는데, 2003년 현재 항운노련의 오문환 전위원장님이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ITF의 활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것은 해양선원들에 대한 보호활동인데, ILO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ILO 협약 중에서 선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것이 무려 50여개에 달하며, 지금도 ILO의 제반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ITF는 해양선박업에 있어서 규제가 약하거나 없는 제3국의 국적을 임의로 취득하

여 운행하는 편의치적선(Flag of Convenience, FOC)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캠페인을 수십 년동안 지속해오고 있는 가운데, 2000년에는 국제선주협회(IMEC)와의 사이에 국제산별노련으로서 유일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³¹⁾ 최근 들어서는 철도의 안전과 도로운수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는 국제행동의 날 캠페인을 매년 3월(철도)과 10월(도로운수)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활발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ITF의 활동이 선원과 항만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서 수적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철도나 도로교통 분야 가맹조직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해상산업노련, 항운노련, 철도노조, 자동차노련, 택시노련, 대한항공노조 등 육해공을 망라한 교통관련 노동조합들이 가맹하고 있다.³²⁾ 이들 가맹조직들은 70년대 말부터 ITF한국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대 활동을 해오던 중, 1995년부터는 이를 한국운수노협(Korea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KTF)으로 재편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1) 편의치적선을 많이 활용하는 국가의 선주들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ITF가 정한 노동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선박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1인당 연간 약 300달러 정도의 기부금을 ITF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ITF는 2003년 현재 전세계 5대양에서 운행하고 있는 2천5백여 선박들의 선주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들이 납부한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은 전세계 선원 및 부두노동자들의 복지시설 확충 및 편의치적선 검사관 운영 등에 활용되고 있다.

32) 민주노총 산하에도 서울지하철노조, 민주택시노련, 대한항공 승무원노조 등 운수분야의 조직들이 있으나, 한국의 기존 ITF 가맹조직들의 반대로 인해 아직까지 ITF 가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8) 국제식품노련(IUF) www.iuf.org.uk

19세기말 20세기 초에 결성되었던 국제양조공조직, 국제제빵공조직, 국제육류업노련 등 3개의 직업별 국제조직이 통합하여 1920년에 국제식품노련(International Union of Food, Agricultural, Hotel, Restaurant, Catering, Tobacco and Allied Workers' Association, IUF)이 창립되었다. 그 후 1958년에 국제담배노련(International Federation of Tobacco Workers, IFTW), 1961년에 국제호텔요식업노련(International Union of Hotel and Catering Workers, IUHCW), 그리고 1994년에 국제농업노련(International Federation of Plantation, Agricultural and Allied Workers Unions, IFPAAW)이 합류하면서 현재와 같이 International Union of Food, Agricultural, Hotel, Restaurant, Catering, Tobacco and Allied Workers' Association (IUF)라는 긴 명칭을 갖게 되었다.

현재 120개국 336개 조직이 가맹되어 있으며, 1천2백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는 IUF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지역조직으로는 아프리카(나이로비 케냐), 아시아태평양(호주 시드니), 카리브해 연안(바바도스), 유럽(벨기에 브뤼셀), 라틴아메리카(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북아메리카(제네바 본부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러시아 모스크바) 등이 있다.

농업노동자와 가내공장과 같은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조직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와 여성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도 주력하고 있다. 1980년부터 프랑스의 다국적 식품회사인 다농(Danone)의 자회사 노조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한 끝에 1988년에 국제산별노련 최초로 노동

기본권에 관한 세계협약(Global Agreement)을 체결하여 국제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동영역을 개척한 바 있다. 2003년 현재 IUF는 Accor(프랑스), Danone(프랑스), Chiquita(미국), Fonterra(뉴질랜드) 등 4개의 다국적기업들과 세계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 소속의 담배인삼노조(63년~94년), 관광노련(71년~91년), 화학노련(89년~91년) 등이 가입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탈퇴하여 가맹조직이 없는 상태이다.

9) 국제공공노련(PSI) www.world-psi.org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의 역사는 1907년에 결성된 국제공무원교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Government Servants and Teachers)에서 시작되었는데, 독일 자치단체노동조합이 네덜란드 자치단체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원하면서 제2인터내셔널 회의에 덴마크, 헝가리,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의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게 되면서 출범하였다. 1925년에 국제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in Public Administrations and Companies)이 별도로 발족하였지만, 1935년에 이 두 개 조직이 통합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최대의 국제조직이 된 것이다.³³⁾ 1950년대 말까지는 그 명칭을 국제정부공공부문종업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in Public and Government Services)이라고 하였다가 1959년부터 오늘날과 같은 PSI로 불리게 되었다.

33) 국제공무원교사연맹에 가맹해있던 교사들은 이미 1927년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탈퇴하였다.

PSI의 가맹대상은 정부기관, 보건의료, 전력, 상하수도, 가스, 항공관제, 소방관 등 거의 모든 공공행정과 공공서비스 관련 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본부는 제네바에 인접한 프랑스의 페르니 볼테르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140개국에서 600여개의 다양한 공공부문 조직이 가입되어 있으며, 약 2천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46개국, 202개 조직), 아시아태평양(24개국, 102개 조직), 아메리카(35개국, 98개 조직), 아프리카·아랍(40개국, 152개 조직) 등 4개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는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 소재하고 있다. 네덜란드 출신의 한스 엔겔베르츠(Hans Engelberts)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PSI는 지난 2002년 9월에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제27차 세계총회(5년마다 개최)를 개최하였는데, 이 총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와 노동조건, 노동자 권리의 획득, 평등과 다양성 확보, 노동조합 발전과 국제연대 강화 등 네 가지 주요 활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의 전력노조, 공공서비스노련, 정투노련과 민주노총의 공공노련, 보건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등 6개 조직이 가맹해 있으며, 2003년 3월에 한국협의회(PSI-KC)를 발족하여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0) 국제통신사무금융노련(UNI) www.union-network.org

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는 국제우편전신전화노련(Postal, Telegraph and Telecommunication Workers International, PTTI),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노련(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mmercial,

Clerical, Professional and Technical Employees, FIET), 국제출판노련(International Graphical Federation, IGF),³⁴⁾ 국제미디어연예노련(Media and Entertainment Workers' International, MEI) 등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정보통신과 금융산업을 포괄하는 4개의 기존 국제산별연맹이 2년간의 통합 협상을 거쳐 2000년에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UNI는 전세계 140여개국에 걸쳐 900개 노조의 1천5백5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최대의 국제산별조직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FIET의 사무총장이었던 필립 제닝스(Philip Jennings)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UNI는 스위스의 니용(Nyon)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등 4개의 지역사무소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전기, 금융, 상업, 그래픽, 미용, 미디어, 연예예술, 우편, 통신 등 12개의 산업별·업종별 분과와, 여성, 청년, 전문직 등 그룹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2001년 9월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된 첫 번째 총회에서는 핀란드 서비스노조 PAM의 여성위원장인 마이-렌 레말가를 초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총회기간 중 베를린에 있는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의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UNI는 온라인 기술과 기타 현대적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활용하여 회원조직들과의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자원과 정보를

34) IGF는 국제출판노련(International Printers' Secretariat, 1882년 창립), 국제석판인쇄노련(International Lithographs and Allied Traders' Federation, 1895년 창립), 국제제본공노련(International Bookbinders' Federation, 1907년 창립) 등 3개의 직업별 국제노동조직이 1949년에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공유함으로써 다국적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에 맞서 세계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제산별노련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산업의 다국적기업들과의 세계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2003년 현재 Telefonica(스페인), Carrefour(프랑스), OTE(그리스) 등 3개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의 금융노조, 체신노조, 정보통신노련과, 민주노총의 공공연맹, 사무금융노련,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민간서비스연맹, 언론노조 KBS 본부 등 9개 조직 38만 조합원이 UNI에 가맹해있으며, 한국의 가맹조직들은 UNI-KLC를 구성하여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1> 국제산별노련(Global Union Federations) 현황 (2003년 7월 현재)

조직명칭 인터넷주소	본부 소재지	창설년도	가맹조직 조합원수	한국 가맹조직
ITGLWF 국제섬유의류피혁노련 www.itglwf.org	브뤼셀	1960	110개국 217개노조 1,000만명	섬유유통노련(한)
IMF 국제금속노련 www.imfmetal.org	제네바	1904	100개국+ 200개노조 2,500만명	금속노련(한) 민주금속노조(민)
IUF 국제식품노련 www.iuf.org.uk	제네바	1920	120개국 336개노조 1,200만명	담배인삼노조(한)
ICEM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 www.icem.org	브뤼셀	1907/ 1995	108개국 399개노조 2,000만명	화학노련(한), 전력노조(한), 민주화학섬유노련(민)
PSI 국제공공노련 www.world-psi.org	페르니 블테르 (프랑스)	1907	140개국+ 600개노조 2,000만명	전력노조(한), 공공서비스노련(한), 정투노련(한), 공공연맹(민), 보건의료노조(민), 전국공무원노조(민)
ITF 국제운수노련 www.itf.org.uk	런던	1886	137개국 621개노조 500만명	해상산업노련(한), 항공노련(한), 대한항공노조(한), 자동차노련(한), 택시노련(한), 철도노조(민)
IFBWW 국제건설목공노련 www.ifbww.org	제네바	1934	124개국 287개노조 1,000만명	연합노련(한)
EI 국제교원노련 www.ei-ie.org	브뤼셀	1993	159개국 310개노조 2,600만명	전교조(민)
IFJ 국제언론노련 www.ifj.org	브뤼셀	1952	100개국+ 50만명	언론노련(민)
UNI 국제통신사무금융노련 www.union-network.org	니옹 (스위스)	2000	140개국+ 900개노조 1,550만명	정보통신노련(한), 체신노조(한), 금융산업노조(한), 사무금융노련(민), 한국통신노조(민),

출처: www.global-unions.org와 국제산별노련 홈페이지

* (한)=한국노총 소속조직, (민)=민주노총 소속 조직

제6장 세계노동총연맹

1. 세계노동총연맹의 역사와 성격

세계노동총연맹(World Confederation of Labour, WCL)은 1920년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IFCTU)으로 시작하여 1968년 명칭 변경과 규약의 전문에 해당하는 “원칙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났다.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의 토대는 유럽의 몇몇 기독교노동조합들이 1908년에 기독교노동조합국제사무국(International Secretariat of Christian Trade Unions)을 설립하여 협력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마련되었다.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은 192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창립되어 네덜란드 출신의 피터 조제프 세라렌스(Pieter Jozef Serrarens)가 사무총장을, 스위스인 조셉 셔러(Joseph Scherrer)가 첫 의장을 맡았다.

1930년대 이후 나치즘과 파시즘의 확산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회원 조직이 파괴되었고, 2차 대전 중에는 네덜란드 유타레히트에 있던 사무국이 독일군에 의해 파괴되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전체주의에 대항했던 많은 기독교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구속되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유럽의 주요 노동조합들이 단일한 국제노동조합 운동조직으로 세계노련(WFTU) 창립을 준비하면서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었던 노동조합들에게도 동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기독교 노동조합은 1945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세계노련 합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하고 기독교 노동조직의 재건

을 결의하였다. 기독교 노동조합들은 세계노련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 조합운동이 아니며, 자의적인 단결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4년 뒤 비공산주의 계열의 노동조합들이 세계노련을 탈퇴하여 국제자유노련(ICFTU)을 건설하면서 기독교 노동조합들은 다시 합류 요청을 받았다. 이 때에도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은 노동조합운동의 다원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냉전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노동조합운동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합류를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지켜나갔다.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현실화된 냉전체제에 의한 유럽의 분단은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에 큰 타격을 주었다.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동유럽 지역이 공산주의 진영으로 편입되면서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은 조직 기반을 크게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성 당시에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가맹 조직이 가장 큰 가맹 조직이었으나, 이들 조직들은 나치즘에 의해 파괴되었다. 또 전쟁이 끝난 뒤에는 세계노련의 출범과 국제자유노련 창설에 합류함으로써 두 나라에서 상당한 규모의 조직 기반을 잃었다. 이탈리아의 3대 노총의 하나로 카톨릭 계열인 CISL은 국제자유노련 건설에 동참했으며, 프랑스의 기독교 노동자총연맹(CFTC)은 1964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이름의 기독교를 삭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프랑스민주노동자총연맹(CFDT)으로 탈바꿈하고 국제자유노련에 합류하였다.³⁵⁾

전통적인 조직 기반을 상실한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의 유럽 가맹 조직들은 2차 대전 이후 독립운동이 전개되던 유럽 국가의 식민지 지역의 노동조합운동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기독교 노동조합들도 다

35) “탈종교화”를 반대했던 세력은 가맹 조직의 30%가 안 되었다. 이들이 모여 조직을 재건하여 옛 이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세계노동총연맹(WCL)을 건설하였다.

른 유럽의 노동조합들처럼 자국 식민지 지역에 자신들과 유사한 노동 조합을 건설하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전개했다. 베트남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비유럽 노동조합이 가입하였고, 1958년 총회에서 최초로 비유럽 노조 대표가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50년대에 들어 서유럽 차원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국제 기독교노동조합연맹은 유럽 차원의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1958년 유럽기구(European Organisation)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노련에 가맹한 서유럽의 주요 노동조합들이 1973년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을 건설하자, 서유럽 국가의 12개 기독교노동조합총연맹 조직이 이에 가입을 신청하여 1년 뒤인 1973년 가입이 승인되자 유럽기구는 해산되었다.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은 서유럽 내에서 가맹 노동조합이 소수 세력으로 지위가 축소되고, 나아가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를 표방함으로써 제3세계 노동조합의 조직화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은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신앙”과 “영성”을 중요한 이념적 토대와 기조로 유지하면서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를 내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68년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6차 총회에서 조직의 명칭을 세계노동총연맹(World Confederation of Labour, WCL)으로 바꾸어 재창립하게 된다. 이 때 세계노동총연맹은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이 처음부터 내세웠던 신앙적 기초를 새롭게 표현하면서 운동의 기조를 확립한 ‘원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원칙 선언문’에서 세계노동총연맹은 “인간과 국가의 자기 실현에는 물질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있다고 믿는다”고 노동자들의 영성을

노동조합 활동에서 중요한 기초로 삼을 것을 선언하였다. 나아가 “세계 노동총연맹의 원칙과 목표 그리고 행동의 방법은 인간과 세계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기초한 영적 개념 또는 이와 함께 자유, 존엄성, 정의 그리고 형제애에 기초한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이러한 생명에 대한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계를 건설하고 완성시켜야 하는 힘과 의무가 있는 사회적 존재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서로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세계노동총연맹은 ‘원칙 선언문’에서 무신론에 기반한 사회주의와 물질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거부한다. 기독교 혹은 가톨릭이라는 제도화된 특정 종교를 표방하진 않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발전과 질서 있는 사회 발전을 합심해 추구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카톨릭 교회가 확립한 “하나의 몸 (corporatism)” 원칙에 입각해 계급 적대를 부정하는 기초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2.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적 배경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이라는 서구에 고유한 노동운동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이 발생한 것은 여러 갈래의 위기의식이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사회집단인 노동자가 생겨나고, 이 집단이 자본주의의 무자비한 착취에 노출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기에 대항하는 각종 투쟁과 운동이 우후죽순처럼 태동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유럽의 기독교와 카톨릭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노동자들의 타락한 삶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운동, 자본주의 환경에서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노동자의 몸부림에 교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운동, 사회주의가 제시하는 해답에 노동자들이 이끌림으로써 노동자들이 무신론적인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 전통적인 교회-국가 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교회의 특권적 지위 상실 등이 기독교 노동조합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급변에 대응해서 노동자들의 운동과 조직 안에서 기독교 신앙과 종교적 정체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었다.

기독교 노동운동은 1850년대부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당시 유럽 각지에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 교회 등 모든 기독교 종단에서 비슷하게 등장했다. 그 형태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동자 생활에 투신하는 목회자 운동, 새로운 산업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교리 개혁 운동, 노동자조직 지원 운동 등 다양한 모습을 띄었다.

영국에서는 1848년 4월 차티스트 혁명과 그 실패를 겪으면서 기독교 사회주의운동이 태동했고, 선구적인 신부들과 신학자들의 노력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관심을 영국교회의 주요 사안으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1898년 성공회는 평신도의 사회적 실천을 승인하는 최초의 공식 문서를 발표하게 된다.

독일 카톨릭교회는 1850년대 개신교 왕조의 카톨릭교회 탄압에 맞서 주요 주교와 신부들이 대응 활동을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

변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동자 조직을 지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휴가, 이익분배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기독교사회당과 각종 기독교 노동자 조직이 생겨나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1876년에 클라스 카터(Klaas Kater)라는 벽돌공이 최초의 개신교노동자단체인 Patrimonium을 결성하였다. 이것은 1890년 최초의 기독교 노동조합인 시가담배제조노동자조합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후 네덜란드의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은 계속 확산되어 10년 후인 1909년 10개의 기독교 노동조합이 모여 전국기독교노동조합연맹(CNV)을 출범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가톨릭노동조합(NKV)도 건설되었다.³⁶⁾

벨기에의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은 1886년 조직된 반사회주의면직물노동자연맹으로 시작하여 1908년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앙조직인 ACV가 설립되었다. 1909년에는 왈로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왈로니아기독교자유노동조합총연맹(CSC)이 건설되었다. 1912년에 두 조직이 통합하여 ACV-CSC가 설립되었다. 조합원 150만명으로 최대 노총인 ACV-CSC는 현재 사회(민주)주의적인 벨기에노동조합총연맹(ABVV)과 함께 양대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887년 최초의 기독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을 공포하면서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은 힘을 얻기 시작했고, 마침내 1919년프랑스기독교노동자총연맹(CFTC)이 출범하게 되었다. CFTC는 생디칼리즘, 사회주의, 공

36) 사회주의 노동조합 조직인 네덜란드노동조합연맹(NVV)은 CNV가 창립되기 3년 전인 1906년 조직되었다. 1976년 NVV는 NKV와의 조직 통합에 합의하고, 1982년 통합 노총인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FNV)을 출범시켰다.

산주의가 확산되고, 1895년 노동총연맹(CGT)이 창립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카톨릭 교회의 지원을 받아 노동자계급을 교회로 다시 이끌어 온다는 사명을 기초로 창립되었다.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은 산업혁명 과정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힘과 자본주의의 극복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운동 사이에서 노동자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전망을 내세워야만 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자본과 노동간의 관계를 계급 전쟁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유재산의 폐지를 주장하며 혁명을 통한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이 거세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의 교회는 새롭게 확립되는 국가(세속권력·권위·제도)와 교회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둘러싼 갈등에 매몰되어 있었다.³⁷⁾ 내부적으로는 교회 내부의 위계질서와 “지구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라는 뿌리깊은 보수성으로 인해 노동자 문제 또는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

1891년 11월 네덜란드 최초의 기독교도 사회대회에서 개신교 목사인 아브라함 쿠이퍼(Abraham Kuyper)는 “사회주의자들은 우리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불의와의 싸움에서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냈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방어적인 시도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별 성직자들의 노력과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는 노동자 평

37)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국가와 카톨릭 교회가 오랜 갈등 끝에 1929년 바티칸의 독자적 국가 창설에 합의함으로써 세속권력과 교회간의 관계 재정립이 완성되었다.

신도들의 호소는 유럽 교회의 위기의식을 일깨웠고, 이러한 흐름은 1891년 5월 교황 레오 13세가 노동 문제에 관한 회칙인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발표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등장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카톨릭 최고위층의 최초의 공식 발표문인 이 회칙은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과 갈등의 원인들을 지적하면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사유재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공산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였다. 교황 레오 13세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와 고용주가 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서로 관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각각이 지니는 의무를 규명하고 신이 창조한 인간과 물질의 세계에서 노동이 가지는 의미와 존엄성 그리고 재화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1850년대부터 교황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 회칙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교회는 노동문제와 산업사회에 관한 입장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마침내 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여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실천의 정당성을 부인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제시하는 관점과는 달리 교회는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관계는 적대적이지 않다고 규정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와 집단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다고 제시했다. 노동자들도 자신의 이해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데 그것은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존재 목표를 부정하는 대우를 수용”할, 즉 “자신의 영혼을 노예적 예속에 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신이 창조한 인간으로서 노동자는 신이 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주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무”라고 규정하였다.

1891년 공포된 교황 레오 13세의 노동에 관한 회칙은 다양한 노동자 조직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유럽 각국에서 결성된 대부분의 전국 단위 기독교 노동조합 연맹체들도 레오 13세의 회칙에 힘입어 건설되었다. 물론 1908년 기독교노동조합국제사무국 설립에 이은 1920년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의 창설도 이 흐름 속에 있다. 그리고 이 회칙은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의 강령적 기초를 제시하여 운동의 방향성과 존재 이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초는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IFCTU)이 1968년 이름을 세계노동총연맹(WCL)으로 바꾸어 재창립하면서 채택한 '원칙 선언문'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3. 세계노동총연맹의 현황과 운영

세계노동총연맹(WCL)은 2001년 10월 현재 116개 국가의 144개 조직에서 2천6백만 노동자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 노동조합 조직이다. 아프리카에서 32개 노총, 남미에서 41개 노총과 3개 소지역 조직, 북미에서 3개 조직, 아시아에서 11개 노총과 2개의 소지역 조직, 유럽에서 21개 노총이 정식 가맹 조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외에 16개 특별 가입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8개의 전국 조직이 참여하는데, 벨기에의 ACV/CSC만이 자국에서 최대 '노총'이다.

지역 조직으로는 아시아노동조합형제단(Brotherhood of Asian Trade Unionists, BATU), 라틴아메리카노동자중앙(Central Latinoamericana de Trabahadores, CLAT), 아프리카민주노동자노동조합기구(Democratic Organisation of African Workers' Trade Unions, DOAWTU)가 있으며, 북미주 활동은 1913년 흑인 철도우편운송노동자들이 주도해서 조

직한 전국우정청및연방정부노동자동맹(National Alliance of Postal and Federal Employees, NAPFE)이 총괄하고 있다. 유럽에는 별도의 지역 기구를 두고 있지 않지만,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 차원에서 회원 조직들이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1989년 동유럽 지역 공산주의 국가 체제가 붕괴된 후 많은 동유럽 노동조합 조직이 세계노동총연맹에 가입하여, 2001년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제25차 세계총회에 맞춰 동유럽 지역사무국을 설치하여 지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노동총연맹은 규약으로 독자적인 산업별 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모든 가맹 조직이 지역 조직과 국제직업연맹(International Trade Federation, ITF)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세계노동총연맹에 가입한 각국 노총 조직에 소속된 산업별 조직은 공공, 교육, 운수, 건설, 섬유 의류, 제조산업, 농업식품, 사무직, 직업운동선수 등 9개 국제직업연맹(ITFs)에 가입해서 산업 차원의 활동을 전개한다.

세계노동총연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4년마다 열리는 총회(Congress)로 ‘원칙 선언문’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 활동 방향과 계획, 중앙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활동 지침을 결정하고 새로운 조직의 가입과 제명을 승인하며,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임원과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가맹조직별 투표수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조합원 수가 1만 미만이면 1표, 5만까지는 2표, 10만까지는 3표이며, 10만 이상일 경우 20만까지 4표, 그리고 추가 10만당 1표를 추가 배정하여 90만이면 11표가 주어진다. 하나의 가맹 조직에 배정 가능한 최대 투표수는 12표다. 세계노동총연맹은 국제산업별연맹과 지역조직에도 대의원 대회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기본 2표가 배정되며, 5만당 1표가 배정되어 최대 12표까지 주어진다.

중앙위원회(Confederal Board) 위원은 모두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선출되는 위원장, 산별조직 대표 부위원장 1명과 지역 조직을 대표하는 부위원장 6명, 사무총장, 사무차장 2명, 재정위원 1명과 산별조직들을 대표하는 위원,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산별조직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는 최소 연 1회 개최되어 세계노동총연맹의 사업을 총괄한다. 2001년에 개최된 제25차 세계총회에서는 48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세계노동총연맹은 위원장, 부위원장, 재정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고 총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하는 사업의 집행을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최대 7명까지 선출할 수 있는데 부위원장 중 1명은 산별조직 차원의 활동과 사업을 대표하고, 6명은 지역을 대표한다. 사무차장 2명은 각각 산별 차원의 활동과 협력 사업을 담당한다.

세계노동총연맹은 세계직업행동위원회(World Committee on Trade Action)를 두고 국제 수준에서 산업별 활동과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세계노동총연맹 차원에서 전개하는 산업별 활동계획을 준비하여 총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직업행동위원회는 국제직업연맹(ITFs)의 대표들과 세계노동총연맹 중앙위원회에 참여하는 대륙·지역별 산업 행동 대표들로 구성된다. 세계직업행동위원회 산하에 직업행동위원회(Committee on Trade Action)를 두고 산업 차원의 활동과 사업의 운영을 총괄한다. 직업행동위원회는 국제직업연맹 위원장, 세계노동총연맹 사무총장, 산별 활동을 담당하는 사무차장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 세계노동총연맹은 예술가조직활동총괄위원회, 여성위원회,

인권및국제노동기준위원회 등의 상설위원회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세계노동총연맹의 가맹 조직은 지역 조직으로 편제되며, 회원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각 산업별 조직은 해당 국제직업연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제직업연맹은 세계노동총연맹에 가입한 각국 노총에 속해 있는 산별 조직과 세계노동총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노총 조직에 속해 있는 산별 조직으로서, 규정에 따라 세계노동총연맹에 가입이 승인된 산별조직을 규합한다. 국제직업연맹은 회원 조직이 세계노동총연맹에 가입해 있는 해당국의 노총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세계노동총연맹에 가입한 노총 조직은 가맹되어 있는 산별 조직이 해당 국제직업연맹에 가입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세계노동총연맹은 노총과 전국·지역 단위의 노동조합 조직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가입을 원하는 조직은 세계노동총연맹의 ‘원칙 선언문’에 동의하여야 한다. 물론 자체 규약과 강령이 세계노동총연맹의 규약과 강령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별도의 규정에 따라 한 나라에서 복수의 조직이 가입할 수 있다. 회원 조직은 자체 규약과 원칙 선언문을 개정하게 되면 통보하여야 하며, 세계노동총연맹은 회원 조직의 활동이 ‘원칙 선언문’, 규약, 규정, 결정에 반할 경우 또는 재정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분할 수 있다.

4. 전지구적 사회 계약, 세계노동총연맹의 새 방향

세계노동총연맹(WCL)은 2001년 10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제 25차 세계총회를 열어 2005년까지의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 1989년 공산주의권 붕괴 이후 불가리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마케도

니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 노동조합들이 대거 가입한 상황을 반영하여 사상 처음으로 동유럽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세계노동총연맹은 제25차 총회에서 현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세우는 가치는 세계노동총연맹이 ‘원칙 선언문’에서 활동의 기초로 확인하고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선언하였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인간과 선에 해악이 되며, 거짓 가치를 내세우고, 문화를 상업적 활동으로 왜곡하여 표준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세계노동총연맹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부정한다”고 선언하고, “영혼이 없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였다.

세계노동총연맹은 21세기 세계 노동자와 인민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항하여 ‘원칙 선언문’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조합 조직을 주축으로 하는 보다 넓은 조직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을 축으로 보다 넓은 의미의 노동자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세계노동총연맹은 자체의 운동 성격을 “노동자 사회운동”으로 규정하면서 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측면의 문제를 하나의 조직으로 담아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에 대해 노동조합운동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운동과 연대할 것을 제시하였다.

세계노동총연맹은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횡포와 폐해에 대한 전세계적인 투쟁과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이 이러한 국제적인 인식 형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세계노동총연맹은 이러한 인식과 결의를 토대로 노동조합운동의 활동 영역을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투쟁,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투쟁, 성장과 소수만을 위한 경제 발전에 대항하는 온전한 세계적 발전을 위한 투쟁, 기본권리와 노동권의 유린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사회권의 국제화, 인간 발전의 전진, 다국적기업의 규제, ILO 강화와 새로운 전지구적 기구의 설립을 운동 방향으로 정하였다. 세계노동총연맹의 운동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권의 국제화: 자본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회·노동·환경 규칙을 전세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간 협상과 공동 결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국제기구와 지역기구가 국제적으로 이미 확립된 인권·노동권·사회권·환경권을 기본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부의 공정한 분배가 지속가능하고 온전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인정하고 “발전권”을 우선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 국제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 조건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고 존중되는 것이다. 즉, 실제 노동이 행해지는 곳에서 인간 존엄성이 실현되는 것이 사회 정의의 지구화, 즉 세계화(globalisation)를 위한 핵심 열쇠임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의 인권과 ILO 기본 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세계화의 민주화는 약자의 권리 향상을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하기에 어린이 노동의 근절, 총체적 이주 정책의 수립, 평등한 대우와 기회의 보장, 이주노동자 가족의 결합, 외국인혐오증과 인종차별 근절을 위한 이주

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여성·장애인·노인의 권리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실행, 청년의 사회경제적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청년 정책 등 사회 연대 장치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인간 발전과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화의 민주적 운영의 결과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온전한 발전의 진전이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해 모든 경제 정책과 금융 기구들은 재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실현이 우선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고, 노동자를 생산 요소가 아닌 인류 발전을 위한 노동의 담지자로 인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자유롭게 선택한 지속가능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국제기구·사용자는 모두 이러한 고용 원칙의 실현에 복무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한계와 의지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빈곤 퇴치를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보호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서비스의 사유화(privatisation)를 반대하고, 물·교육·보건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과 식량자립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무역을 지속가능한 인간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최빈국의 외채를 탕감하고 개발도상국 외채의 상당 부분을 취소하여 외채상환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세계적 조치가 취해질 때에만 사회적 최소 소득보장체제가 가능하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기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고, 나아가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

다국적기업 규제: 이러한 사회적 권리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화의 민주적 운영은 자본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대항력을 기업 차원에서 확립하지 못한다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국적기업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전세계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노동자운동은 노동조합의 실천과 구조를 혁신하여 대항력을 강화하고, 그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을 실현해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확보하는 것을 바탕으로 국가간·노동자간 경쟁 체제를 해체시켜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노동기준 위반을 폭로하고, 생산 과정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적극 전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운동진영과의 공동투쟁능력을 강화하여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을 알려나가야 한다.

사회적 대화와 새로운 세계화 운영체계의 확립: 사회적 대화는 노동조합의 자유와 노동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파업 등 다른 종류의 행동과 함께 노동조건과 삶의 조건을 향상하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ILO의 기준 설정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다국적기업이 구속력 없는 자체 기준을 만드는 것을 막아내고, 국제노동기준의 실현을 위해 개별 국가와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행정의 향상, 노동기준 설정과 이행, 고용관계·사회

보장·사회적 대화에 대한 ILO의 의제 설정 능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국 노동조합운동은 ILO 협약의 비준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사업장에서부터 세계 차원의 의사 결정 과정에까지 확립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지구적 차원의 운영 체도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주의를 복원하고, 국제기구들 간의 힘 관계를 새로이 확립해야 한다. 우선 ILO가 국제금융기구들과 동등한 위상을 확보해야 하고, 국제금융기구들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총괄조정기구로서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와 동급의) 경제사회보장이사회를 유엔 안에 설립해야 한다. 경제사회보장이사회는 인권·사회권·노동기본권이 무역협정과 경제협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화(globalisation)에 대한 사회경제적 규제를 담당한다. 그리고 유엔 정상회담 등 전지구적 의제로 확립된 결정 사안의 후속 조치, 정책 조율과 기구간 중재를 담당하며 국제기구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와 통합운영의 기반이 된다. 나아가 다국적기업 등 단일국가의 능력 밖에서 활동하는 사적 자본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노동총연맹은 이상의 과제 실현을 위해 제24차 세계총회에서부터 “지속가능하고 온전한 발전, 사회 정의, 환경 보호, 평화적 공존, 문화 및 양성적 정체성의 존중, 그리고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전지구적 사회 계약”을 제안하였다. 세계노동총연맹은 이러한 활동 방향을 토대로 반세계화 운동에 적극 결합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세계노동총연맹은 세계

사회포럼을 현장·국가·국제 차원의 활동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는 활동 양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5. 세계노동총연맹과 국제자유노련의 통합 문제

세계노동총연맹(WCL)은 국제자유노련(ICFTU)과 달리 유럽 또는 서구의 거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 이는 세계노동총연맹의 가맹 조직과 조합원이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제3세계 노동조합의 참여 확대와 조합원 비중의 상대적 우위로 세계노동총연맹은 각종 정책 논의 단위에서 제3세계/남반구의 저발전의 원인과 북반구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비사회주의·반공산주의 기조와 어울려 반자본주의·반전체주의 개념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세계노동총연맹은 북반구의 선진국에 대한 비판과 후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관한 요구를 국제자유노련보다 강하게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맹 조직 대부분이 남반구에 있음으로 인해 재정 기반이 협소하여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 1980년대까지 세계노동총연맹은 세계노련과 국제자유노련 두 축으로 제3세계에 형성된 냉전 구도의 영향과 자체의 활동 기조에 깊이 각인된 반공산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사실 세계노동총연맹은 제3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급진적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1989년 이후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기독교 노동조합운동의 중요한 터전이었던 동유럽 지역이 개방되면서 세계노동총연맹은 조직 확대의

계기를 맞았다. 그러나 새롭게 건설되거나 탈바꿈한 동유럽 국가의 주요 노동조합들은 대부분 국제자유노련에 가입함으로써 세계노동총연맹에 실망을 안겨주었다. 기독교의 영향이 강한 조직들만 세계노동총연맹에 합류했을 뿐이었다. 세계노동총연맹에 가입한 가장 유명한 동유럽 노동조합 조직은 폴란드의 연대노조(NSZZ-Solidarnosc)로 1986년 세계노동총연맹과 국제자유노련에 동시 가입하였다.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특히 공산주의 국가의 노동조합들이 거의 대부분 세계노련을 탈퇴해 국제자유노련에 가입하고 일부는 세계노동총연맹에 가입했다. 세계노련의 상징성이 탈색되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주요 남반구 노동운동도 국제자유노련에 가입하게 되었다.³⁸⁾ 시대적 조류가 전환되는 가운데 그 동안 반공산주의 기조 속에서 공조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던 국제자유노련과 세계노동총연맹 사이에 긴장이 생겨났다. 가맹 조직을 둘러싼 경쟁 의식은 두 조직의 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은 특히 유럽과 남미에서 심각했으며, 질시와 반목은 끊이지 않고 불거져 나왔다. 이 때문에 두 조직은 계속해서 “단결”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그 내용과 방향에서는 늘 이견이 존재했다.

윌리 디스(Willy Thys) 세계노동총연맹 사무총장은 2000년 4월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국제자유노련 세계총회에 참석해서 국제 조직의 단결에 대해 언급하였다. 빌 조던(Bill Jordan)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이 “두 조직은 비슷한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데 따로따로 보다는 단결해서 같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윌리 디스 사무총장은 “세계노동총연맹이 세계 수준에서 보다 많은 단결 행동이 필요하다고 인

38) 브라질의 통일노동자중심(CUT)은 1992년, 한국의 민주노총(KCTU)은 1996년,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는 1997년 국제자유노련(ICFTU)에 가입했다.

식하고 있지만 세계 수준에서 노조합 단일구조가 유익할 것이라는 선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반박했다.

세계노동총연맹은 사무총장의 연설과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국제노동조합운동 단일조직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그 뒤에는 실제로 많은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총장은 “상층과 일반 조합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위험”, “규모가 크고 자원이 많은 조직이 지배력을 행사할 문제점”, “내부 민주주의의 훼손” 등의 위험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노동총연맹은 “노동조합운동 안에는 다양한 의견과 민감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투쟁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으며 보다 넓게 연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며 국제자유노련의 단일조직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세계노동총연맹은 국제자유노련의 “통합” 발언에 대해 아무런 공식 제안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하고, 국제자유노련의 행보에는 소규모 조직을 존중하지 않는 거대 조직의 거만함이 도사리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국제자유노련 총회에서 세계노동총연맹 사무총장은 “노동운동의 국제적 단결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공통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자유노련과 세계노동총연맹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제7장 국제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

1.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남반구노조연대회의(Southern Initiative on Globalisation and Trade Union Rights)는 1980년대 말 호주노총(ACTU) 서호주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어온 ‘인도양노동조합회의’에서 출발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서호주는 좌파 정치세력과 노동조합운동의 전통이 강한 곳으로 호주노총 서호주 지역본부는 세계화에 대응할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1988년 서호주 지역의 학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모여 세계화에 대항한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서호주 지역본부는 인도양 지역 국가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학술 회의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이후 이러한 시도는 학술회의보다 인도양 지역의 좌파노조 흐름과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호주 노동조합운동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국제 연대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호주의 항만노조는 2차 대전 이후 네덜란드 식민통치의 부활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파병되는 네덜란드 병력을 후송하는 선박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 바 있고,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권에 대항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남아프리카 국적의 선박이나 남아프리카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에 거부운동을 단행한 바 있다.

이러한 호주노총 서호주본부의 방향 전환으로 1991년 5월 처음으로 인도양노동조합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해외 참가자 12명과 호주

참가자 12명이 참가했다. 해외에서는 필리핀(KMU), 인도네시아(Solidarity),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남아프리카(COSATU)가 참가했다. 회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참가 조직 대부분은 공식 노조라기보다는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자주적·민주적 노조운동으로 구성되었다. 당연하게도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민주노조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가 워크숍의 주제가 되었다.

인도양노동조합회의는 국제자유노련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국제노동운동의 질서를 거부하는 세계노련의 외곽 활동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지역 국가의 기존 노동조합들로부터는 참가 조직들이 각국에서 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호주노총 서호주본부는 많은 나라의 노조 조직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운동을 건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 회의가 기존의 “어용”노조에 대항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회의 주최측은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각국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운동 조직과 연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기준을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실천하는 것으로 삼았다.

1992년 11월 열린 인도양노동조합회의 제2차 대회에는 태국, 베트남, 인도, 남아프리카 등에서 140명이 참여하였다. 대회에서는 남아프리카 COSATU의 제안으로 대회 준비를 위한 지역조정회의를 매년 1회 갖기로 하였다. 제3차 대회는 1994년 11월에 열렸고, 역시 14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어용 노총을 점진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면 이 조직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호주노총 사무총장

과 인도네시아의 민주노조운동 대표들이 충돌하였다.

1995년 서호주 주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자 노동조합이 반대 투쟁을 전개했고, COSATU는 만일 주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서호주에서 출항한 선박의 취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인도의 공산당 계열 노총인 CITU도 서호주 정부에 대한 반대행동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개발도상국 노동조합이 선진국의 노동권과 노사관계에 항의하고 행동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호주노총 서호주본부의 반대 투쟁과 국제연대의 확산으로 인해 서호주 주정부는 노동법 개악 시도를 포기하게 되었다.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서호주본부는 국제연대 활동이 정부의 법안 철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산별노련들이 자발적인 국제 연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국제식품노련(IUF), 국제금속노련(IMF),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등이 지역조정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제4회 대회는 1997년 초 인도에서 CITU의 유치로 개최되었다. 대회에는 260명이 참여하였고, 개막 행사로 진행된 대중 집회에 2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대회에서는 다운사이징, 외주, 비정규직, 민영화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대회를 거듭하면서 인도양노동조합회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고발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COSATU의 유치로 1999년 10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제5차 대회다. 주요 참가 조직들은 핵심 목표를 사전에 정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과 투쟁을 준비하였다. 제5

차 대회를 앞두고 열린 지역조정회의에서 대회의 이름을 인도양노조회의에서 ‘세계화와 노동조합 권리를 위한 남반구의 시도(Southern Initiative on Globalisation and Trade Union Rights)’로 바꾸기로 하였다.³⁹⁾ 5차 대회에는 남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121명이 참여하였다. IMF, ICEM, ITF, PSI 대표들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나이지리아의 노동운동 연구자도 참여하였다. 제5차 대회에서는 2001년 메이데이 공동캠페인 조직을 목표로 세우고,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2000년 메이데이 준비 작업을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 남아프리카의 COSATU, 인도의 CITU, 인도네시아 노동운동단체, 필리핀의 KMU, 한국의 민주노총(KCTU), 호주노총의 서호주본부가 적극 참여하였다. 각 조직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중심의제로 내세웠고, COSATU(4백만), CITU(2백만), 민주노총(10만)이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메이데이 공동행동 이외에 5차 대회는 다국적기업인 리오턴토에 대한 국제적인 항의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항의서한과 연대서한 보내기, 각종 홍보 캠페인과 시위 조직하기 등을 실천키로 하였다.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로 이름을 바꾼 첫 대회가 2001년 11월 민주노총의 대회유치로 한국에서 열렸다. 한국의 민주노총, 호주노총(ACTU) 서호주본부, 남아프리카의 COSATU, 인도의 CITU, 필리핀의 KMU, 홍콩의 HKCTU,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모두 2백명이 참가한 대회는 한국노동교육원(KLEI)에서 1주일 동안 열렸고, 세계화

39) 우리나라에서는 의미를 분명하기 하기 위해 “남반구노조연대회의”라고 부른다.

에 대항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⁴⁰⁾ 서울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SIGTUR의 약점으로 불균등한 노조 발전 상태, 다양한 정치적 전통, 노동운동 환경의 급속한 변화, 국제노동조합운동과의 관련성, 산업 차원 활동의 어려움 등을 거론하면서 각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키로 결정했다.

인도양노동조합회의를 거쳐 남반구노조연대회의로 발전해온 배경에는 참가 조직들의 정치적 의지와 이들 노조가 공통으로 경험해온 국가와 자본의 탄압이 자리잡고 있다. 남반구노조연대회의는 공통의 투쟁 경험을 토대로 참가 조직의 장점과 강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면서 현재의 협의체 수준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로 발전해나갈 과제를 안고 있다.

2. 노동자민중국제연락위원회와 열린세계대회

노동자민중국제연락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f Workers and Peoples, ILC)는 1991년 1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열린세계대회(Open World Conference)에서 설립되었다. 열린세계총회는 63개국에서 사회주의, 사민주의, 공산주의 등 다양한 정당의 대표들에서부터 좌익 성향의 학자와 노동조합 간부들까지 노동운동 조직에서 일하는 다양한 성향을 대표하는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40) 서울 대회에 이은 SIGTUR 차기 대회는 2004년 하반기에 태국의 방콕에서 열린다.

ILC는 첫 번째 열린세계대회의 결과물로서 탄생한 셈인데, 기존의 국제노동운동 조직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기존의 국제노동조직을 대체할 의사가 없으며 그들과 경쟁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출범했다. 나아가 ILC는 1864년에 런던에서 출범했던 제1인터내셔널, 즉 국제노동자협회(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를 조직 모델로 삼는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정당이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자교육단체나 협동조합 조직들도 참여하였던 국제노동자협회처럼 ILC는 노동자들의 민주성에 기초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통일된 행동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ILC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운동들을 조직한다는 목표 하에 전세계의 노동자계급과 청년, 억압받는 민중들이 세계 자본주의의 공세에 맞서 투쟁하도록 연대와 단결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영화 반대, 규제완화 반대, 전쟁 반대’라는 행동강령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전쟁과 착취 반대선언(Manifesto Against War and Exploit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ILC의 강령은 전세계의 노동자 조직, 특히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계급투쟁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세계 자본주의에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오로지 노동자계급 자신의 자주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ILC는 현재 94개국의 다양한 성향의 노동조합 간부들과 정치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ILC는 1991년의 첫 대회를 포함하여 1993년과 199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열린세계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000년 2월에는 미국 노총(AFL-CIO)의 산하 조직인 샌프란시스코 노동자협의회⁴¹⁾와 공동

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열린세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전세계 56개국의 노동조합 간 부와 민주화운동 활동가 600여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2002년 2월에는 독일의 베를린에서 ILC와 샌프란시스코 열린세계대회 지속위원회, 그리고 독일 노동조합 간부들로 구성된 대회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규제완화 반대와 노동권 수호를 위한 국제대회’가 개최되었으며,⁴²⁾ 본 대회가 열리기 전날 저녁에는 ‘여성노동자의 권리수호를 위한 국제대회’도 열렸다.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전쟁이 예고되고 있던 2003년 1월23~24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비상대회’를 개최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노동운동(International Labour Movement against War)’이라는 조직을 발족하기도 하였다.

한편, ILC는 창립되면서부터 ILO 협약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매년 ILO 총회기간에 제네바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⁴³⁾ 아울러 아동노동에 반대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아동노동과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국제법정(International Tribunal against Child Labour and Slavery)’에 적극 참

41) 이 샌프란시스코 노동자협의회는 미국노총(ALF-CIO)의 지역조직들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 노동당의 주요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42) 대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규탄과 함께 한국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저지투쟁사태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43) 2003년의 제91차 ILO 총회에 맞춰서 개최된 ILC 집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현행 ILO협약들을 다국적기업들이 임의로 만드는 ‘행동규범(Codes of Good Conduct)’으로 대체하려는데 반대하면서 ILO의 협약체계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지역의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에 대해서도 다양한 반대 캠페인을 조직해왔으며, 중국, 루마니아, 한국, 토고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된 노동조합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전개해오고 있다.⁴⁴⁾

현재 ILC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좌파 정치인과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노총 산하 서부지역의 노동조합 조직, 독일노총(DGB) 산하 베를린지역 노동조합, 러시아의 구공산당계열의 노동조합,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의 노동조합들,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정당 및 노동조합들이 조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3. 남아공·브라질·한국 3국 노동운동 교류

1970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대륙의 남아프리카, 남미 대륙의 브라질, 아시아 대륙의 한국 등 3개국 노동운동이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급격한 산업화를 겪은 세 나라 모두 각 대륙에서 주도적인 신흥공업국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세 나라 모두 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자계

44) ILC의 조사단 2명이 2001년 말에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하고 돌아갔는데, 이때 조사단의 일원으로 방한하였던 ILC 대표 Daniel은 프랑스 트로츠키주의 정당의 사무총장으로서 2002년 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다.

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컸으며, 이는 각국에서 노동조합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편, 정치적으로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 브라질과 한국은 군사독재라는 권위주의 정부를 경험했으며, 세 나라 노동운동 모두 자본을 지원하는 국가의 탄압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신흥공업국으로서 각 대륙을 선도하는 대표성과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사회계급 구성, 인종차별 정권과 군사독재 정권이라는 권위주의 체제에 맞선 노동운동의 정치투쟁 전통, 노동자들의 희생에 기반한 급속한 경제발전에 대항한 민중운동세력의 투쟁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세 나라 모두 자주성(independence)·민주성(democracy)·전투성(militancy)이라는 특징을 가진 노동조합운동이 출현하였다. 자주성과 민주성에 기반한 전투적 노동운동 흐름은 남아프리카노동조합평의회(COSATU), 브라질의 통일노동자중심(CUT), 한국의 민주노총(KCTU)으로 발전하였고, 국제노동운동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다.

남아프리카, 브라질, 한국 세 나라 노동운동 사이에 네트워크를 건설할 필요성은 1990년대 초 독일의 사민당 계열 재단인 에버트재단(FES)과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에 의해 제기되었다. 에버트재단과 ICEM은 교류와 연대 활동을 통해 세 나라 노동운동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3국 노동운동 교류 프로그램(이하 3국 연대)을 추진했다. 3국 연대는 세 나라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조직들인 COSATU, CUT, KCTU으로 이뤄진 노동조직 네트워크에 각국을 대표하는 노동연구단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각국을 대표하는 노동연구단체로 남아프리카에서는 전국노동경제발전연구소(NALEDI), 브라질에서

는 CUT의 정책개발 부서인 DESEP, 한국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가 참가하였다.

3국 연대를 위한 첫 회의는 민주노총(KCTU)의 출범에 맞춰 1995년 11월6일 ~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남아프리카의 COSATU/NALEDI, 브라질의 CUT/DESEP, 한국의 KCTU/ KLSI가 참여하였다.⁴⁵⁾ 첫 회의에서는 조직 및 단체 소개, 각국의 노동운동 현황 소개,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조직, 현대자동차 등 울산 공단, 수도권 노동자 주거지 등을 방문하고, 민주노총 결성대회 참석(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 참석(11월12일) 등의 행사를 가졌다.

3국 연대 2차 회의는 1996년 11월18일 ~ 23일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다. 참가한 노동조직과 연구단체는 1차 회의 때와 같았으며, 남아프리카 노동운동 상황, 3국 경제상황 비교 분석, 공장 방문 및 현장위원(shopstewards) 간담회, 산업별 중앙교섭의 역할과 기능, 남아프리카의 노사정위원회인 전국경제발전노동위원회(NEDLAC)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남아프리카의 사회적 합의 경험에 관한 토론회, 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주제로 한 토론회, COSATU와 NALEDI 방문, 에너지 및 광산 부문 산업정책 토론회, 노동시장 정책 토론회, 통상산업부를 방문해 산업정책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3차 회의는 1997년 11월16일 ~ 22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렸다. 참가한 노동조직과 연구단체는 1차 및 2차 회의 때와 같았으며, 상

45) 3국 연대 1차 회의 참가자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3국의 화학노조 대표자들도 참가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이 에버트재단(FES)과 더불어 3국 연대 프로젝트를 제기하고 후원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학부문 노조의 참가는 1차 회의에 그치고, 2차 회의부터는 노총간 교류로 한정된다.

파울로주 에너지노동자재단 방문, 3국 정치 경제 상황 비교 토론회, 노동법제의 유연화와 노동조합 조직구조의 변화 토론회, 산업구조조정에서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 정책 경험 비교 토론회, 상파울로 ABC 지역 자동차 공장 방문, 관련 노조의 교섭국/정책국 간부와의 토론회, 노동자당(PT)이 집권한 상토안드르(Santo Andre) 시정부 방문, 지역 차원의 산업구조조정 영향 토론회, 노동연구소 방문, 상파울로 사용자단체 FIESP 면담, 상파울로 은행노조 방문, 은행부문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토론회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3국 연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모임은 1998년 11월1일~7일 독일 카겔-뮐렌호르스트에 있는 독일화학광산노조(IG BCE) 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이 모임에는 후원단체인 FES와 3국의 참가 노동조직 및 연구단체들은 물론 독일노총(DGB)도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는 네덜란드노총(FNV) 국제국에서도 참가하여 3국 연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 3국 연대 프로젝트에 대해 참가자들은 “세 나라 사이의 정치적 대화가 노동조합운동의 협력을 증진시켰으며, 세계화에 대처할 공동전략을 마련해야 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평가하면서 “세계화의 결과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4국 노동조합(독일 포함)의 대응”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세계화로 인한 노동구조의 변화와 그것이 단체협상에 미치는 영향’,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연대’ 관련 4국 경험, ‘노동조합 구조(통합)와 노조 개혁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노동운동 차원의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카겔-뮐렌호르스트의 평가 모임에서는 1998년 11월로 일정을 마무리하는 3국 연대 프로젝트를 이후에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남아프리카, 브라질, 한국 등 3국 연대의 참가 주체들은 프로젝트를 계속할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3국 연대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자유노련(ICFTU)의 각종 회의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며, 1995년 이후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던 에버트재단(FES)은 3개국 참가 조직 및 단체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지속적인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 회의와 관련된 기타 행사로는 동독 소재 화학산업단지 방문 및 종업원평의회(workscouncil) 활동가와의 대화, 베를린의 독일화학에너지광산노조(IG BCE) 본부 방문 및 베를린 지역의 노사관계제도 토론회 등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2000년 2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노총(FNV)의 후원으로 COSATU, CUT, KCTU 3개 노총 대표들이 만나서 남녀평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다국적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노동조합과 NGO의 관계, 에이즈, 국제자유노련 제17차 총회 공동 대응 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3국 연대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헤어졌다.

2000년 8월22일~26일 독일에서 에버트재단(FES)과 네덜란드노총(FNV) 공동 후원으로 COSATU, CUT, KCTU가 모여 3국 연대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독일노총(DGB)도 참가한 이 회의에서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3국 연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이 논의되었다. 계획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응’, ‘WTO·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대응’, ‘구조조정’, ‘다국적기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등의 주제를 공동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0년 11월 서울에서 남아프리카의 NALEDI, 브라질의 CUT와 DESEP, 한국의 민주노총(KCTU)과 한국 노동사회연구소(KLSI)가 참가한 가운데 프로젝트 관련 회의가 열렸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조합과 다국적기업’, ‘세계화와 WTO에 대한 노조의 대응’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한 8월 회의의 결정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2001년 6월 다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노총(FNV) 주최로 3국 연대와 관련한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구체적 성과 없이 끝났다.

1995년 ~ 1998년까지 진행된 남아프리카, 브라질, 한국 노동운동의 3국 연대 프로젝트는 제3세계를 대표하는 노동운동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실 이전까지 3국의 노동운동 사이에는 제대로 된 교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간의 교류와 더불어 각국의 노동연구단체 및 연구자들의 교류가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것은 3국의 노동조합 모두 대중동원(mobilisation) 노선에 기반한 ‘투쟁과 저항’의 단계를 넘어 정책 개발을 통한 정책 참여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3국 연대 프로젝트를 통해 3국 노조간부 및 노동연구자들의 인적인 교류와 더불어 3국의 정치·경제 상황,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조합운동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이 폭넓게 이뤄졌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며, 국제 노동계에서 3국이 진보·개혁 블록의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되었다는 점도 노동운동사의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반면, 상당 기간 모임과 논의가 지속되었던 데 비해 사업의 내용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으며, 3국 노동운동에 공통된 도전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갖는다. 실천과 관

런해서 3국 노동조직들이 ICFTU나 ILO 회의에서 공동 대응을 실질적으로 모색한 적이 없었고, 연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조합 조직구조, 노동법제,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운동의 남남(South-South) 연대, 노동운동의 남북(South-North) 협력, 세계화의 영향과 노조의 대응 등 공통된 연구주제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으며 실질적인 연구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3국 연대는 1단계 프로젝트가 끝난 후부터 활동이 없는 상태다. 물론 1단계 프로젝트 역시 상호 방문과 정보 교류 수준에 그쳤고, 3국 노동운동의 공동전략을 수립하고 공동실천을 조직하는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3국 연대는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시장의 변화, 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구조와 교섭체제 분석, 다국적기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WTO체제에 대한 노동진영의 대응 등 각국 노동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과제들을 다뤘으나 이를 논의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으며, 구체적인 전략 수립과 공동 실천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3국 연대 과정에서 형성된 COSATU, CUT, KCTU 세 조직 사이의 네트워크로 말미암아 남반구 노동조합운동의 국제연대가 한층 활발해졌으며, 중장기적으로 ILO와 ICFTU 등 국제노동조직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기타 국제적인 노동 네트워크

1) 국제노동자교육협회(IFWEA)

국제노동자교육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s, IFWEA)는 노동자 교육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노동자 교육에 관련한 최대의 국제단체이다. 회원 조직은 노동자 교육과 노동운동의 틀 안에서 활동하는 재단, 노동조합 교육조직, 사회민주당 계열의 교육단체, 직업훈련 관련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1947년 출범한 국제노동자교육협회는 현재 사무실이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으며, 아슬락 리슬란드(Aslak Leesland)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또한 영국의 일반노조인 GMB의 도움으로 맨체스터에 소재한 GMB노동대학에 프로젝트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데이브 스푸너(Dave Spooner)가 연락 책임을 맡고 있다. 위원장은 국제식품노련(IUF) 위원장 출신인 단 갈린(Dan Gallin)이 맡고 있으며,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해 19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다. 유럽 지역의 회원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재정과 오랜 동안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유럽노동자교육협회(Euro-WEA)를 두어 자체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카리브 지역의 경우 지역담당 코오디네이터를 두어 지역 차원의 연락 관계를 맡게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코오디네이터는 필리핀의 노동교육연구네트워크(LEARN)의 말론 퀘사다(Marlon Quesada) 소장이 맡고 있다. 국제노동자교육협회는 분기별로 기관지 『노동자교육』(Workers' Education)을 발행해 본부와 가맹 조직의 활동과 노동교육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국제노동자교육협회는 “민주노동운동의 토대 위에서 연대와 협력, 정의와 평등, 민주주의와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육사업”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역할로는 회원 조직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과 더불어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산별노련(GUFs),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UNESCO, 국제노동기구(ILO) 등

의 국제 기구에서 국제노동자교육협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들을 설정하고 있다. 국제노동자교육협회는 정부, 국가기관, 정당, 사용자 단체로부터 독립된 조직이며, 회원 조직의 기본 의무 이행을 전제로 회원 조직의 완전한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노동자교육협회에는 민주노동운동의 주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 교육 단체, 교육 관련 노동조합 조직과 정치 단체라면 누구나 회원 조직이 될 자격을 가진다. 현재 전세계 59개국과 6개 국제조직에서 103개 회원 조직을 갖고 있다. 대륙별 회원 조직 수로는 아프리카 20개, 아시아 26개, 카리브 지역 3개, 유럽 42개, 남미 6개, 북미 4개로 유럽 지역이 활동과 재정에서 국제노동자교육협회를 주도하는 형편이다. 국제노동자교육협회에 가맹한 국제 조직은 6개로 국제교원노련(ED), 국제금속노련(IMF),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노련(IUF), 유럽의 노동사회 NGO들의 연합체인 솔리다르(Solidar), 국제통신사무노련(UNI)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가 1997년부터 회원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노동자교육협회의 대표적인 국제 노동교육 사업으로는 1997년 이후 진행되어온 국제스터디서클(International Study Circle, ISC)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ISC는 유럽의 전통적인 노동자 학습 방식인 학습소모임(study circle)에 인터넷과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IT)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학습소모임의 진행 과정과 토론 내용을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소모임 전체가 공유하는 것을 기본 운영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일년 동안 노조 간부 10명을 중심으로 학습소모임을 꾸려 아시아 차원의 ISC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지금까지 국제노동자

교육협회가 실시한 지역별, 국가별로 진행된 ISC 주제를 살펴보면, ‘시민사회’(동유럽 차원의 ISC, 2002~2003년), ‘변환, 경제 재건, 그리고 사회적 파장’(동유럽 차원의 ISC, 2001년~2002년), ‘세계경제 속의 이주노동자 문제’(2000년~2001년), ‘세계화와 다국적기업 대응’(1997년~1998년) 등이 진행되었다.

국제노동자교육협회의 현상태는 그리 좋지 않다. 집행부가 공백 상태에 있으며,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목적과 기능이 비슷하고 회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는 유럽의 노동사회 NGO 연합체인 솔리다르(Solidar)와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2) 솔리다르(Solidar)

솔리다르(Solidar)는 민주적 노동운동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 국제 협력, 인도주의, 평생교육 분야의 비정부기구들의 국제연합체이며, 벨기에의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다. 회원 조직은 16개국에서 정회원 25개, 가맹조직 7개, 참관단체 1개, 명예회원 4개로 이뤄져 있으며, 16개국 가운데 12개국이 유럽연합(EU) 가입국이다. 국제자유노련(ICFTU)은 솔리다르의 창립 멤버이며, 솔리다르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는 전세계적으로 90개에 달한다.

주요 사업은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노동자 권리의 증진, 사회적 유럽의 건설, 이주노동자의 권리 증진,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 인도주의적 후원 도모 등의 영역에서 사업을 해나가는 각국의 노동사회 단체들을 묶어 세우고 지원하는 것이다.

솔리다르는 2002년부터 국제노동자교육협회(IFWEA)와 함께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단체들과 더불어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목표는 세계화 경제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요 임무로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 기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의 경험과 자질을 확대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나라별, 지역별, 세계 차원의 세미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미나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노동자 권리, 경제개발 전략,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 빈곤, 공동체 문제, 민주주의 발전, 인권 등 다양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동조합운동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상호 이해와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가 2002년부터 코오디네이터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5. 온라인 노동 네트워크

1) 글로벌 유니언 www.global-unions.org

글로벌 유니언(Global Unions)은 국제노동조합 조직들이 함께 만들고 관리하는 웹사이트로 참가 조직들이 생산하는 각종 뉴스와 관련 행사를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제교원노련(EI),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건설목재노련(IFBWW), 국제화학에너지

광산일반노련(ICEM), 국제언론노련(IFJ), 국제금속노련(IMF), 국제섬유봉제피혁노련(ITGLWF),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노련(IUF),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사무노련(UNI),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회의(OECD TUAC) 등 국제노동조직 12개가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유니언 사이트는 국제 노동계의 공식 노동조합 조직들의 웹사이트와 연동되어 있으며, 공식 노동조직들의 정책, 활동과 사업 흐름을 한눈에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유엔의 세계협약(Global Compact), 국제산별노련과 다국적기업 본사가 체결한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차원의 기본단체협약, 세계사회포럼(WSF)과 세계경제포럼(WEF)의 쟁점, 세계무역기구(WTO) 대응 등 국제노동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을 담은 디렉토리를 풍부하게 갖추놓고 있다.

2) 레이버 넷 www.labor.net.org

레이버 넷(LaborNet)의 정식 명칭은 ‘국제노동연대웹사이트’로 컴퓨터 통신을 매개로 국제적인 노동자 연대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원래는 해고된 리버풀 항만노동자 500명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을 조직하기 위해 영국에서 1995년 11월 출범한 웹사이트이다.

국제 노동계에서 투쟁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소개하는데 비중을 맞추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국제 노동자 연대를 지향하며, 오스트리아, 독일, 한국, 영국, 일본 등의 인터넷 노동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

3) 레이버 스타트 www.labourstart.org

레이버 스타트(LabourStart)는 정보 수집과 공유를 통해 국제노동조합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뉴스서비스 사이트로 각종 캠페인과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에릭 리(Eric Lee)가 영국에서 만들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138명의 통신원을 두고 있다. 각국의 기성언론 및 노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영문 소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해외노동운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4) 세계정책네트워크 www.gpn.org

세계정책네트워크(Global Policy Network, GPN)는 노동조합운동과 연관된 진보적 연구소들의 국제 네트워크의 사이트이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노동대중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PN은 2000년 3월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4회 국제진보정책 회의가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회의 참가자들은 시장 자유화를 통한 자본 주도의 일방적인 세계화 문제를 논의했는데, 각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구들이 밀어붙이는 현행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 결과, 브라질의 노동조합통계사회경제연구소(DIEESSE),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EPI), 벨기에에 소재한 유럽노동조합연구소(ETUI), 남아프리카의 전국노동경제발전연구소(NALEDI), 일본의 생활기준개선연구소(RIALS) 등 5개 연구단체로 이뤄진 GPN 운영위원회가 발족되

었다. 이후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노동조합운동을 지원하는 각국의 진보적 연구소를 모집하여 GPN을 정식 출범시켰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칠레, 아일랜드 등 33개국에서 33개 연구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회원조직으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가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들의 네트워크인만큼 노동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 출범 이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진보적 연구소들의 국제 네트워크로서 기능하고 있다.

제8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기 위한 국제연대

1. 세계사회포럼(WSF)

1) 세계사회포럼의 현황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WSF)은 2001년 1월 브라질 포토 알레그레에서 처음 열렸다. 세계사회포럼은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여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971년부터 해마다 1월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 대응해 조직된 세계포럼이다.

2003년까지 포토 알레그레에서 세 차례의 세계사회포럼이 열렸고, 2004년에는 인도 뭄바이에서 4차 포럼이 열렸다. 또한 두 차례의 유럽사회포럼(피렌체와 파리), 아시아사회포럼(인도 하이드라바드), 아프리카사회포럼(이디오피아) 등 대륙 및 지역별 사회포럼이 열렸다. 그리고 범아마존사회포럼, 분쟁과 군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서 개최된 사회포럼,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평화사회포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신자유주의 반대 경제사회포럼 등 여러 차례의 주제별 사회포럼이 열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브라질에서는 일련의 지역 단위 사회포럼과 이를 모은 전국 단위 사회포럼이 열렸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시 또는 주 단위의 사회포럼이 열렸다. 2002년 11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된 최초의 대륙사회포럼인 유럽사회포럼에는 1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평화행진이 조직되기도 했다.

세계사회포럼은 1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1차 포럼에는 3만명이 참여하였고, 2차 포럼에는 6만명, 3차 포럼에는 10만명, 4차 포럼에는 8만명이 참여했다. 1차 포럼에는 117개 나라에서 각종 단체를 대표하는 1,500명의 활동가(전체 단체 대표로 등록된 참가자는 4,700명, 즉 브라질에서 2,566명의 단체 대표)가 참여하였고, 2차 포럼에는 5,500명의 단체 활동가(전체 단체 대표 12,274명), 3차 포럼에는 130개 나라에서 7,700명의 단체 활동가(전체 단체 대표 20,763명)가 참여하였다. 참가 단체가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주관한 세미나와 워크숍은 1차 포럼 때 420개였으며, 2차 포럼 때에는 622개, 3차 포럼에는 1,286개였다.

세 차례에 걸쳐 세계사회포럼이 열리면서 대안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었고, 이제는 논의된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3차 포럼에서는 세계사회포럼 자체를 살펴보는 시도가 처음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세계사회포럼이 정기적인 연례행사로 확정된 것은 1차 포럼이 끝난 뒤였다. 세계사회포럼이 정례화되면서 사회포럼이 엄청난 전지구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몇몇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했던 세계사회포럼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된 것은 세계사회포럼에 담겨 있는 새로운 운동에 대한 갈증과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투쟁과 운동이 결합된 결과였다.

2) 세계사회포럼의 배경

세계사회포럼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각

료회담을 무산시킨 ‘시애틀 전투’가 자리잡고 있다. 시애틀 전투는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진행되었고, 이후 지구 곳곳에서 비슷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가-자본의 행사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1985년 G7 정상회담에 대항한 행동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1월 1일에는 세계무역기구 창설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때맞춰 멕시코에서 사파티스타운동의 봉기가 있었고, 유럽에서는 실업자들이 행진을 벌였으며, 그 해 겨울 프랑스 전역을 마비시킨 공공 부문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1996년 12월과 1997년 1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전개된 노동자 총파업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1997~1998년에는 OECD 회원국들이 주도한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중단시키기 위한 세계적인 투쟁이 전개되었고,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브라질, 러시아 등 남반구 곳곳에서 ‘IMF 경제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흐름은 절정에 달했다. 한편으로 인도에서는 대규모 댐 건설에 반대하는 농민 투쟁이 전개되었고, 브라질에서는 땅 없는 농민들이 부재 지주의 땅을 점거하여 생활 터전을 확보하려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 뒤 1998년 G8 정상회담 때에는 제3세계 외채탕감 네트워크가 영국 버밍햄에서 7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였고,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G8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규모의 집회가 개최되었다.

지구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러한 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다른 형태의 세계화를 부르짖는 운동이다. 불평등에 반대하고, 빈곤에 반대하고, 불의에 반대하고, 사회 정의와 연대를 주장하고 생태계의 온전성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주장하고, 완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세계화로 가속화된 과학기술

발전의 여러 측면을 활용하여(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과 네트워크)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현상이 집결한 네트워크이다. 세계사회포럼은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는 다른 종류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고, 또 그 자체로서도 세계화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사회포럼은 “또 다른 세계화”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한 모색과 노력의 결정체라 할 만하다.

세계사회포럼이 사회운동의 상상력을 보여주고, 또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사회포럼을 생각해 내고 마련했던 사람들은 세계사회포럼을 “조직”이나 “운동” 또는 “전선”으로 규정하지 않고, “공간”으로 인식한다. 자신들의 역할은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이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점에서 세계사회포럼이라는 공간은 어디로 가야한다는 식의 방향 지시나 지침이 제시되지 않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는 여러 운동과 여러 사회 집단의 시도와 노력들이 만나고,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자신의 현장에서, 전국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찾아 접목하는 공간인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은 “중양집중화된” 조직을 통해 “중양집중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실현하는 것과 “중양집중화된” 국가 차원의 해결책을 상정했던 전통 좌파 운동의 모습을 지양하고, “탈집중화”와 “직접 참여”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양하고 자율적인 가지각색의 운

동이 서로 어울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하나의 답이 세계사회포럼이며, 네트워크로 드러난 현재 세계사회운동의 모습이다.

3) 세계사회포럼의 운영

“열린 공간”으로 설정된 세계사회포럼은 현재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운동과 활동의 모습을 닮아있으며, 이를 담고 있다. 1차 세계사회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 이를 준비했던 브라질 조직위원회는 세계사회포럼을 국제위원회와 함께 매년 마련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사회포럼은 그 자체로서 어떤 운동이나 전선체가 아니며,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세계 지배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제국주의에도 반대하며, 인간 중심의 사회 건설에 헌신하는 시민사회의 단체와 운동이 반성적 생각, 새로운 생각의 민주적 토론, 제안의 모색, 경험의 자유로운 교류, 효과적인 행동의 상호연결을 이뤄내는 열린 만남의 자리”라고 규정하는 ‘원칙 헌장’을 채택하였다.⁴⁶⁾ 세계사회포럼이라는 열린 공간으로 모이고 또 만들어내는 운동은 하나의 거대한 운동이 아니라 여러 크고 작은 운동들이다. 세계사회포럼은 광범위한 사회운동들의 연합이며, 차이와 사고와 행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원칙에 기초한다. 세계사회포럼이 새로운 운동 모습을 실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포럼을 끝내면서 “참가자 일동” 또는 “세계사회포럼의 이름”으로

46) 세계사회포럼 브라질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브라질 비정부기구 연합(ABONG),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 브라질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CBJP), 시민권리를 위한 브라질 기업연합(CIVES), 브라질노총(CUT), 브라질사회경제연구소(IBASE), 정의와 인권을 위한 사회네트워크(CJG), 땅 없는 농민운동(MST).

선언문을 채택하지 않는데서 찾을 수 있다. 세계사회포럼은 공동의 정치 선언을 지향하지 않으며,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모든 운동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1주일 기간으로 열리는 세계사회포럼은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1만5천명에서 2만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매일 1회씩 열리는 대토론회(Conference)와 4~5천명을 수용하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논쟁적 쟁점에 관한 원탁 논쟁과 대화(Roundtable of Controversies and Dialogue) 그리고 참여 단체가 제안하고 직접 주관하는 4~5천명을 수용하는 공간에서 열리는 패널토론(Panel Discussion)과 50~100명 정도의 참가자를 수용하는 공간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하루에 3개의 패널토론이 마련되고 세미나와 워크숍은 하루 200개 이상이 개최된다. 이와 함께 조직위원회는 특별한 이야기를 할 사람을 초청하여 강연(Testimony)을 제공한다.

세계사회포럼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조직위원회와 국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5가지 정도의 주제 영역과 소주제를 기본틀로 삼아 조직되고 배치된다. 대토론회는 주요 관점과 분석 내용을 포럼에 참여하는 대중과 공유하는 시간이며, 주제별로 진행된다. 패널 토론은 주제 영역의 주요 쟁점, 제안, 전략, 역할과 관점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또 다른 세계를 실현하려는 투쟁의 확산을 모색하는 노력이다. 강연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모범적인 노력과 투쟁을 전개해 온 주요 인사 또는 집단의 증언을 듣는 자리이다. 원탁 논쟁과 대화는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하는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정당, 정부, 유엔 기구 등에서 초청된 인사들과 대면하여 쟁점 토론과 대화를 통해 세계사회운동의 제안과 전략을 다듬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미나는 소주제별

로 쟁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집단적 공유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로서 다양한 조직, 운동, 네트워크들이 공통 사안에 대한 협력과 공동 노력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워크숍은 세계사회포럼의 “작업장”으로 참여하는 각 조직과 네트워크들이 자신의 경험, 계획, 전략을 발표하고 이의 발전과 공유를 시도하는 시간이다.

1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16회의 대토론회, 420회의 세미나와 워크숍, 그리고 22회의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2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27회의 대토론회, 96회의 세미나, 622회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3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10회의 대토론회, 22회의 강연회, 4회의 논쟁과 대화 원탁, 36회의 패널토론, 1,286회의 세미나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4차 포럼에서도 10회가 넘는 대토론회, 1200개에 달하는 세미나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세계사회포럼은 공식 프로그램 외에 세계청년포럼, 세계국회의원포럼, 세계지자체포럼, 세계교육포럼, 세계청소년캠프 등이 주변 행사로 열린다. 이외에 각종 집회와 행진이 조직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이 펼쳐진다.

4) 세계사회포럼과 국제노동조합운동

2억에 가까운 전세계 조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자유노련(ICFTU), 세계노동총연맹(WCL), 유럽노총(ETUC) 등의 국제노동조직들도 세계사회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3년 제3차 포럼에서 이들은 몇 가지 세미나를 자체 개최하였다. 세 조직이 공동으로 “시민사회의 한 가운데 있는 노동조합운동, 양질의 노동, 고용이 있는 세계화”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국제자유노련의 남미지역본부(ORIT)가 “노동자의 인권, 지역통합과 자유무역에 맞선 노동조합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그리고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 국제사무전문직통신노련(UNI), 국제금속노련(IMF), 국제운수노련(ITF) 등 주요 국제산별노련들이 공동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과 함께 “초국적기업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반면 세계사회포럼 브라질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브라질의 CUT는 사회운동단체들과 공동으로 “인간 발전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국제금융기구 확립을 위하여”, “발전 전략으로서의 연대경제”, “리오 + 11, 지속 가능한 세계는 가능한가”, “사회적 책임성이 보장되는 시장은 가능한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운동,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화 방안이 필요한가?”의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다른 나라 노총들과 함께 “최근 세계 노동조합운동이 전개하고 있는 투쟁의 의미”, “노동조합운동과 반세계화 사회운동, 공통의 의제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조직하였다. 미국의 한 노동운동 단체는 “전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미국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3차 포럼의 대주제 토론회에도 노동조합운동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세계무역기구-칸쿤으로 가는 길”에 미국노총(AFL-CIO) 남미 담당자, “연대 경제”에 세계노동총연맹(WCL)의 필리핀 대표, “완전고용과 노동의 재규제”에 한국과 브라질의 노동조합 대표, “평등을 위한 투쟁. 남성과 여성, 실제 변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세계노동총연맹의 아프리카 대표,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에 이

탈리아노총 대표, “교육, 건강, 사회보장 권리에 완전한 접근”에 국제공공노련(PSI)의 대표, “민주주의의 민주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으로부터”에 아르헨티나 노총 대표, “결집의 새로운 기회와 지역과 지구 무대의 다중적 행위자의 긴장”에 캐나다 노동조합 대표, “기성 질서에 대한 시민의 봉기”에 이탈리아노총 대표, “민주적 국가의 새로운 측면들”에 독일 노동조합 대표, “사회운동의 새로운 조직화 방법들”에 이탈리아의 독립 노동조합운동 대표, “세계 질서, 주권과 정부들의 역할과 유엔”에 포르투갈 노총 대표, “민주적 협력: 통합, 다자주의 그리고 평화”에 남미경제공동체(MERCOSUR) 노조연합의 우루과이 대표 등 전부 13개 패널토론에 14명의 노동조합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국제 노동조합의 참여를 살펴보면 국제 조직이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으며, 관심은 고용에 한정되어 있다. 조직위가 현재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주목하여 조직하는 대토론회(Conference)에는 국제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하는 토론자가 거의 없고, 주요 참여 조직이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주관하는 5개 대주제 영역별로 열리는 5~6개의 패널토론에는 비교적 비중 있게 참여하고 있다.

국제자유노련은 2002년 제2차 세계사회포럼부터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노동조직들은 공식 일정에 앞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참여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하루 일정의 사전 행사를 준비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참여를 조직한다.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하는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국제노동조합운동 조직들이 주관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수백 개의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가의 세계사회포럼 참여는 공식 노동조합 조직을 통한 것이라기보다

는 다른 경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국제노동조합운동은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이라는 의제를 내걸고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어떤 면에선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세계사회포럼의 의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왜냐하면 “양질의 노동”이라는 아이디어는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구적 신케인즈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1945년 이후 유럽에서 확립되었던 사회적 파트너십 모델을 지구적 차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사회포럼이 던지고 있는 탈자본주의적/유토피아적 의제에 국제노동조합운동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뜻한다.

세계사회포럼에서 이뤄지는 노동조합운동과 지구적 사회운동의 만남은 전통적인 노동조합운동에게는 “급진적” 담론과 접목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한편으로 주요 국제행사에 대항하여 대규모 시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구적 사회운동에게는 각국의 진보적인 노동자 투쟁과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이라크 침략전쟁과 국제노동운동의 흐름

2003년 3월 19일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개헌연설로 시작된 이라크 침략전쟁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미국과 영국은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를 뽐내며 전후 처리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은 UN 주도의 다자간 처리(multilateral system)를 주장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결과,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뤄

은 UN 체제는 사실상 붕괴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一極)체제의 완성이 분명해지고 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진 이래 미국은 자신의 정치군사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세계 전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확대해 왔다. 소비에트의 붕괴이래 미국의 국제전략은 군사개입을 회피하고 정치공작을 중심으로 한 저강도(low conflict) 전략에서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강행하는 고강도(high conflict)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그 출발점이었다.

이라크 침략 전쟁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입장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쟁 지지 입장이다. 침략전쟁의 당사국인 미국노총(AFL-CIO)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UN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다가, 2003년 3월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노총은 조합원 중 선원, 관제사, 소방관, 경찰관 등 2만명 가량이 예비군으로 전쟁에 소집되었다면서 “미국노동운동은 조합원들과 미군 뒤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노총(TUC)은 유엔을 통한 다자간 해결을 모색하면서 전쟁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놓자는 입장이었는데, 이 역시 궁극적인 수단으로 전쟁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미국노총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둘째는 국제자유노련(ICFTU)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노동운동의 입장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군사행동에 반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틀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을 포함하는 다자간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자유노련은 전쟁 발발 시점인 3월 20일 성명을 내고 “유엔이 참여하지 않는 개별 나라의 군사분쟁은 반아

들일 수 없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면서 “유엔과 다자간 틀을 통한 이라크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셋째는 이번 전쟁을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 제3세계 노조운동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아프리카노총(COSATU)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전쟁이 침략 전쟁이며, 이 침략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십 년이 넘는 경제제재에서 고통을 받아온 여자와 아이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이라크에 대한 야만적이고 비겁한 공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노총은 “미국과 영국이 지난 수세기 동안 군사, 경제,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세계 도처에서 제국주의 활동을 자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소련의 몰락 이후 등장한 미국 단일체제의 극단적인 결과를 온전하게 목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라질노총(CUT)도 이라크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점에 입장을 같이하면서 “석유와 피를 바꿀 수 없다(No Exchange Blood for Oil)”는 슬로건을 내놓았다.

미국 주도 전쟁이냐, 유엔 주도 전쟁이냐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노총과 영국노총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다. 서유럽 노동운동의 경우 마지막까지 유엔을 통한 다자간 해결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미국노총과 영국노총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독일노총(DGB)은 바그다드 함락 직전인 4월11일자 성명에서 “사담 후세인의 독재체제가 해체됐다”면서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영구화하지 말고 UN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촉구했다. 스웨덴노총(LO)도 “조지 부시든 사담 후세인이든 간에 인권과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전쟁은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

반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유럽 노동운동의 입장은 유엔의 결의 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미국노총의 입장과는 다르지만,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유엔 주도의 경제제재와 전쟁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유럽과 미국의 노동운동이 이번 이라크 전쟁을 침략 전쟁(war of invasion)으로 규정하지 않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미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가 문제이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이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쫓아 전쟁을 승인했다면 이라크 침략 전쟁은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번 전쟁을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남아프리카노총과 브라질노총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 노동조합운동의 입장은 1세계 노동운동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개별 국민국가의 정치 체제는 해당 국민 스스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국제법과 인권’을 이유로 한 외세의 부당한 지배와 개입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의 의도가 중동과 카스피해 지역의 방대한 석유 자원을 통제하려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더욱 분명해 진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서로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서유럽 노동운동은 미국의 군사적 점령을 단기간에 끝내고,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유엔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자유노련은 성명에서 “이라크에서 법의 지배에 기초한 민주주의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간 논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UN만이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재건할 정통성

과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이라크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재건 과정이 다국적기업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라크로 몰려들 다국적기업이 ‘ILO 핵심노동기준’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뜻은 좋지만,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유엔이 설자리는 별로 없고, 설사 그럴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라크로 몰려들 석유자본과 건설자본들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지는 의문이다. 특히, 전후 이라크로 몰려들 다국적기업들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구 노동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자유노련의 성명은 성명 자체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향후 이라크 문제가 미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 하에서 처리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나 기타 유엔의 산하기구를 중심으로 국제노동운동, 특히 서유럽 노동운동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국제노동계가 이라크 침략전쟁에 일치 단결하여 대응하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나라 노동자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에 참여했으며,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자 수백만명이 참가한 반전집회가 이탈리아 전역에서 열리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노동자들은 이탈리아의 미군기지에서 이라크로 이동하는 군사물자의 수송을 거부했다. 스웨덴의 노동자들은 버스와 지하철을

멈추고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1분 침묵’에 참여했다. 빠르지는 않지만, 반전평화를 염원하는 움직임이 국제노동운동 안에서 확산되고 있다.

비록 1세계 국가가 가지는 한계는 있지만, 서유럽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미국 주도의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전후 이라크 복구 과정에서 ILO가 참여하고 국제노동운동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여온 국제노동운동 앞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전쟁에 맞서 반전평화를 실현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가 놓여 있다.

사실 이라크 침략전쟁은 끝났지 않았다. 만만치 않은 이라크 민중의 저항은 미국을 새로운 단계의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의 전쟁 책동이 점점 거세지는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도 이라크 침략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 국제노동운동 안에서 1세계 노동운동과 3세계 노동운동의 연결점에서 있는 한국노동운동의 전쟁반대와 세계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3. 다국적기업 규제 흐름

1980년대 이후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확대와 다국적기업의 급속한 진출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진출국 노동조합운동의 특수성, 기존의 노사관계 관행, 각국에 특유한 노동법제 등에 대한 정보 부족과 몰이해로 노동조합 및 종업원들과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각국의 노사관계 관행과 노동조합 활동이 글로벌 스탠더드

에 어긋나는 것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각국의 노동법제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의 국제 기준을 준수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으로 대표되는 세계적 차원의 자본운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국제노동조직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노동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NEs), 유엔의 세계협약(Global Compact)이 있다. 그리고 국제노동운동 차원에서도 국제산별노련(GUFs)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과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는 유엔세계협약, 국제산별노련 국제기본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노동권과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국제 기준들을 살펴본다.

1) 유엔세계협약

유엔세계협약(UN Global Compact)은 1999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되었고, 2000년 9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세계협약은 환경·인권·노동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한 협약으로 강제성은 없으며 기업과 경영자의 시민정신(citizenship)에 호소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유엔세계협약을 승인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연례보고서, 기타 대외 문서를 통해 협약 이행 상황을 외부에 알릴 의무를 가진다. 2003년 4월 현재 전세계 75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 가운데 참여 기업은 1개에 불과

하다. 유엔세계협약은 국제연합(UN)이라는 국제기구의 특성을 반영해 인권 영역은 인권고등판무관실(HCHR), 노동 영역은 국제노동기구(ILO), 환경 영역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분담하고 있다.

유엔세계협약은 그 원칙과 내용이 간단하다. 인권·노동·환경 3개 영역에 마련된 9가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 (2가지)

- 기업의 영향력 안에서 국제적인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 인권 유린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 (4가지)

-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한다.
-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철폐한다.
- 아동노동을 실질적으로 철폐한다.
-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3가지)

- 환경 문제에서 예방 차원의 접근법을 지지한다.
- 더 많은 책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 환경친화적 기술을 개발하고, 그 확산을 장려한다.

이상에서 드러나듯이 유엔세계협약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없으며, 기업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실제 유엔과 다국적기업 사이에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며, 노동조합이나 비정부기구(NGO)의 개입은 아직 부차적이다

2) 국제산별노련의 국제기본협약

국제기본협약(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s)은 국제산별노련과 다국적기업 사이에 체결되는 세계 수준의 단체협약이며, 그 내용은 ILO 핵심노동기준을 근간으로 한다. 국제기본협약은 1988년 국제식품노련(IUF)과 프랑스 다국적기업인 다농(Danone) 사이에 처음 체결되었으며, 2002년 11월 현재 모두 20개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⁴⁷⁾

1980년대 들어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책임이 국제적 쟁점으로 떠올랐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대응해 기업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만들어 기업이 이를 채택·준수토록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기업행동규범은 일부 다국적기업에서 채택되기도 했으나, 형식 면에서 경영진이 주도하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했고, 내용 면에서 ILO에서 규정한 핵심노동기준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범위 면에서 하청업체를 포함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이행 면에서 감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노동조합과의 대화가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으므로 인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 때문에 기업행동규범이 1990년대 들어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

47) 1988년 Danone-국제식품노련(IUF), 1995년 Accor-국제식품노련(IUF), 1998년 IKEA-국제건설노련(IFBWW)년, 1998년 Statoil-국제화학노련(ICEM), 1999년 FaberCastell-IFBWW, 2000년 Freudenberg-ICEM, 2000년 Hochtief-IFBWW, 2001년 Carrefour-국제노조네트워크(UNI), 2001년 Chiquita-IUF, 2001년 Ote Telecom-UNI, 2001년 Skanska-IFBWW, 2001년 Telefonica-UNI, 2001년 Merloni-국제금속노련(IMF), 2002년 Endesa-ICEM, 2002년 Ballast Nedam-IFBWW, 2002년 Fonterra-IUF, 2002년 Volkswagen-IMF, 2002년 Norske Skog-ICEM, 2002년 AngloGold-ICEM, 2002년 DaimlerChrisler-IMF.

서 다국적기업의 영업활동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감시감독 범위 밖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이에 반해 세계화의 확산과 다국적기업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노동운동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이 국제산별노련의 기본협약이다.

국제기본협약은 형식 면에서 노조와 경영진과의 교섭을 통해 체결하며, 내용 면에서 핵심노동기준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며, 범위 면에서 하청업체를 대부분 포괄하고, 이행 면에서 감시 수준을 벗어나 전체 과정에 노조가 직접 개입하며, 노조와 경영진이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한 제도적 신뢰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행동규범보다 진전된 감시규제틀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국제기본협약이 다국적기업 본국 수준에서는 대체로 준수되지만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자회사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점에서 실질적인 단체협약 기준으로 작동되기보다는 아직은 ‘립서비스’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는 다국적기업이 늘고 있는 배경에는 해당 기업의 이미지 제고, 소비자단체 등 압력단체와의 우호 관계 유지, 기업경쟁력 강화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1976년 처음 채택되었으며, 다국적 기업이 각국 정부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데 대한 대응책으로 모색되었다. 당시 국제연합(UN)은 협상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 만들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대신 OECD 차원의 기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1979년, 1982년, 1984년, 1991년에 개정된 가이

드라인은 1980년대 중반 정치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실상 폐기 상태에 처했다가,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실패하고 1990년대 말 기업 활동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고(recommendation)이며,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자국 기업에게 홍보하고 이를 준수토록 할 의무를 지니는데, 30개 회원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인 상태다.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를 수락한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노동권과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해 다국적기업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시행토록 노력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제1장 개념과 원리, 제2장 일반 정책, 제3장 정보 공개, 제4장 고용 및 노사관계, 제5장 환경, 제6장 뇌물 퇴치, 제7장 소비자 이익, 제8장 과학 기술, 제9장 경쟁, 제10장 조세 등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다국적기업은 기업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2개 이상의 나라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일컬으며, 모기업은 물론 현지기업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에서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제4장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내용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LO 핵심노동기준 준수
- 노조/종업원 대표에게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 산업안전보건 보장
- 현지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제공

- 종업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활동의 변화를 검토할 경우 변화 사항을 제대로 통보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종업원 대표 및 정부 당국과 협력함.
- 종업원이 단결권을 행사하고 있을 시, 해당 국가로부터 작업부서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이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해당 기업의 종업원을 다른 나라로 진출시키겠다고 위협해선 안 됨.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설치하는 연락사무소(NCP)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이드라인 수락 국가는 가이드라인을 촉진하고 이행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연락사무소의 설치와 역할을 노동조합·재계·기타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년 모임을 열고 그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OECD 사무국에도 활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운영 원칙은 가시성(visibility), 접근 용이성(accessi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등 네 가지이며, 연락사무소 구성은 해당국의 상황에 따라 정부 사무소, 노사정 3자 협의체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구성과 운영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재계도 배제한 채 관료들 중심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다국적기업의 노동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감시규제를 확보라는 본래 의미는 퇴색하고 외국인 투자정책의 일환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한국 노동조합운동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2003년 11월 한국네슬레노조의 스위스 본사 항의방문 과정에서 그 의미와 효용성이 새롭게 주목받았다.

제9장 결론 - 새로운 방향과 전략 모색

1. 노동운동을 둘러싼 세계적 도전들

1)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현세대가 살고 있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는 세계화(globalisation)의 시대다. 세계화의 중심에는 시장주의 가치의 세계적 확산이 자리잡고 있다. 경쟁, 개인주의, 효율성, 성과주의 같은 시장주의 가치는 일국 차원은 물론 국제 차원에서도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져오며, 저절로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평등,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세계화 지지론자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른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을 장악하고 세계화를 규정하게 되면서 인류는 부의 집중과 빈곤의 증대라는 양극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점차 세계화가 가져다줄 미래는 장밋빛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 지고 있으며, 현재의 방식,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sation)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반대와 저항은 세계화의 피해자인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쪽에서 주로 이뤄지는 반면, 세계화의 수혜자인 각국 정부와 자본은 대부분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수용하되 그 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담론이 거세지고, 그 현실적 영향력에 압도되면서 그 본질과 특성이 점차 신비화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신비화는 사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마비시키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나 숙명론적 비관주의를 낳는데, 당연하게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역시 신비화되고 물신화된 결과, ‘시장 만세와 완전 경쟁’을 외치는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 흐름이 대세를 장악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만약의 근원’으로 규정하며 세계화를 전면 거부하는 흐름이 세를 넓혀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역사적으로 노동의 주요 가치인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평등, 문화적 다양성은 점점 파괴되고 있으며, 자본의 주요 가치인 반(反)노동, 사유화, 통화주의, 사회복지 철폐, ‘법과 질서의 확립’이 득세하고 있다. 아무튼 노동이든 자본이든 간에, 좌파이든 우파이든 간에, 저항 세력이든 지지 세력이든 간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동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가치이자 추세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실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이고,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현대적 발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현대 자본주의의 시대적 특성과 활동 방식을 규정한 개념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입장은 현대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앤소니 기든스는 “아무도 자본주의 말고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아직 남아 있는 쟁점이 있다면, 얼마나, 또 어떤 방법으로, 자본주의가 지배되고 규제될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자본주의 말고 대안이 있냐’는 그의 질문은 ‘개혁’이든 ‘혁명’이든 간에 자본주의에 어떤 식으로든 시비를 걸어왔던 노동운동 진영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은 반자본주의 투쟁 속에서 태어났으며, 초기의

노동운동은 명백히 자본주의의 철폐와 사회주의를 지향했다. 물론 초기의 지향성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고, 많은 논란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궁극적 지향점이 ‘자본주의 체제 안의 개혁(reform)’이나, ‘자본주의 체제의 철폐(revolution)’나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노동운동 세력이라면 누구나 ‘시장의 횡포’와 ‘자본의 지배’에 반대하고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평등,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해왔다는 점이다.

사실 본 연구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류와 비주류 여부를 떠나 국제노동운동의 역사는 이러한 공통의 지향성을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역사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은 노동운동이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현대 자본주의의 흐름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특히,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초국적자본의 영향력 확대, 세계경제체제의 금융화, 포스트포디즘의 대두, 국민국가의 약화 같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이 빈부격차 심화, 문화적 다양성 파괴,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의 정치 참여 축소를 초래하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조합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현실에서 국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방향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저항’으로 모아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국제노동운동진영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바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현행 방식의 세계화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국제노동운동의 화두로 떠올랐으며,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은 한국노동운동 역시 이 고민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2) 제국주의 전쟁과 군사적 위협

21세기는 전쟁의 세기로 시작했다. 2002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에 이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이번 세기가 ‘평화와 번영의 세기’라기보다는 ‘전쟁과 고통의 세기’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물론 모든 군사적 행위 뒤에는 정치 경제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21세기 첫 전쟁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이면에는 중앙 아시아에 군사적 기지를 확보함으로써 지정학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금껏 미국은 중앙 아시아에 진출한 적이 없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의 짧은 지배가 있었지만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뒷마당이었다. 중앙 아시아의 남쪽으로는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가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 중국, 인도라는 21세기 경쟁국가들의 지리적 연계고리를 끊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중앙 아시아인 것이다. 미국은 옛 소련의 공화국들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인접국들에 군사기지를 보유하고왔다. 여기에 침략전쟁을 빌미로 수만 명에 달하는 추가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미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공세를 지역 강대국들인 러시아, 중국, 인도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형국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 열강들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정치적 패권 및 경제적 이익과 맞물리면서 폭발하게 될 때 인류는 미증유의 참사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역시 전쟁의 먹구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새 천년의 첫 해인

2001년 취임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고, 2003년 이라크를 무력으로 점령한 데 이어 이란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도 높게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네오콘(neocon)이라 불리는 미 행정부 안의 초강경파들은 평화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북한의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하면서 군사적 공격을 위한 빌미와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와 남북한은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는 반면, 미국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입김 밑에서 자국의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으로 대변되는 지금까지의 한반도 체제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가 해외는 물론 국내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심화된 북한 김정일 체제의 약화와 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산 및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맞물리면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체제 형성을 예견케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가 남북 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군사적 대결 구도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지난 세기 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의 식민지 쟁탈전은 크고 작은 국지전 끝에 결국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노동운동은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국체주의’와 ‘노동자연대’의 정신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물론 노동운동의 국제연대만으로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노동운동이 자국의 군사적 승리를 지지하면서 애국주의와 국민주의에 매몰되지 않았더라면 전쟁의 강도, 기간, 빈

도를 조금은 개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21세기 국제노동운동의 상황은 20세기 초의 그것보다 더 나쁜 지도 모른다. 노동운동의 국제주의 열망은 그때보다 훨씬 약하다. 경제발전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제적 교류가 노동조합운동진영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그 수준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킬 정도에는 크게 못 미친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노총(AFL-CIO)은 자기 조합원들이 이라크 침략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전쟁 지지를 선언했고, 영국노총(TUC)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노총(LO), 독일노총(DGB), 이탈리아노총(CGIL) 등 유럽의 노동조합진영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지만, 활발한 활동을 벌이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역시 ‘전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반전 국제연대는 이뤄내지 못하는 상태다. 남아공노총(COSATU), 브라질노총(CUT) 등 3세계 노총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연대를 꾸준히 모색해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불행하게도 각국의 노총들을 한데 묶어 평화 네트워크를 꾸려야 할 국제자유노련(ICFTU) 등 국제노동단체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세계 곳곳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국제노동운동은 아직 별다른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인 것이다.

3) 사회복지국가의 해체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

2차 대전 이후 지속되던 자본주의 경제의 호황이 1970년대 초 종료된 후 세계 자본주의는 큰 변화를 보여왔으며, 지금은 민영화, 규제철

폐,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후 서유럽 국가들은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간에 상관없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섞은 혼합경제를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가 출현할 수 있었다.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러시아 혁명 이후 이뤄진 사회주의권의 형성, 자본주의 열강의 각축이었던 양대 세계대전, 대공황기에 드러난 시장경제의 무능력,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의 경제적 호황이었다. 또한 노동운동의 급속한 성장은 사회적 계급간의 타협을 가능케 한 주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대처리즘(Thatcherism)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흐름이 대두하면서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말 이뤄진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이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몰고 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으로 본격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945~70년까지 '사회적 합의'였던 완전고용, 복지국가, 혼합경제로 요약되는 사민주의 체제가 '정부의 실패'라는 이데올로기 공격 속에서 점차 약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민영화 추진, '신노동당(New Labour)'이라고 불리는 토니 블레어 영국 노동당 정부의 우경화, 슈뢰더 독일 사민당 정부의 '새로운 중도(Neue Mitte)' 선언에서 절정에 달했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체제의 후퇴는 노동운동의 침체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출현과 고용구조의 질 악화는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성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 여성, 청년 등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했으나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에

기반한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은 고용 동향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노조 조직률이 정체되거나 하락했으며, 이는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당연하게도 진보와 보수에 기반한 근대적 정당정치를 뒤흔들었다. 경기 침체는 2차 대전 직전인 1930년대 흥행했던 인종주의와 우익정치가 다시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지금 유럽 각국은 극우세력의 대두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기존 정치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한 청년층 사이에 정치 불신이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투표율이 하락하고 있다.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각국에서 국민국가의 힘을 약화시키는 한편으로 '1인 1표' 대신에 '1인 1달러' 논리를 확산시키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절정에 달했던 사회적 연대 의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를 급속히 대체하면서 물신주의가 빈 자리를 채우고 있다. 경제적 물신주의는 정치적 무관심과 맞물리면서 노동운동의 최대 성과물 가운데 하나인 근대 정당정치에 기반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2. 국제노동운동의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1) 세계화 전략의 방향 전환 - 전면 거부에서 비판적 개입으로

일반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전면적 거부(total rejection)나 비판적 개입(critical engagement)이냐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노동운동의 입장은 전면 거부, 즉 사실상의 반세계화

(anti-globalisation)였다. 따라서 IMF나 WTO 등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와는 되도록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하고, 당연히 이들 기구와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특히, 1997년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는 이러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물론 이러한 사정의 배경에는 IMF, WTO, 세계은행 등에서 보여진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횡포와 이들 기구의 비민주적 운영이 자리잡고 있다.

반세계화 입장은 지역경제블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다. 아직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블록은 없다.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는 사실 경제블록으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 역사적으로 한국 경제는 국가가 주도한 개발경제의 결과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제블록은 대단히 낮은 개념이자 경험으로 자리잡았다. 이점은 한국과 같이 동북아시아에 자리잡은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전쟁이후 1990년대 초까지 지난 40년 동안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안보동맹’이 사실상의 경제블록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틀은 낡은 것이 되었다. 한편으로 세계 각국은 경제블록을 활발하게 만들어왔다. 유럽연합(EU)의 출범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이 그것이다. EU의 경우 이제 경제 통합 단계에서 정치 통합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실은 현행 방식의 세계화에는 문제가 많지만, 세계화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운동은 세계화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세계화 방식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세계 경제의 질서를 세우고 규율을 부여하는 국제금융기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나아가며, 'IMF 해체와 WTO 반대'를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시장근본주의에 물든 신자유주의자들도 'IMF 해체와 WTO 반대'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세계 시장이 알아서 잘 작동하는 데 IMF나 WTO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계 경제를 자유방임 상태로 두는 게 최상이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은 일국적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으며, 각종 조직과 기구들을 민주화시켜왔다. 이런 노동운동의 역사를 고려할 때도 세계화 자체를 반대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국제금융기구를 해체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세계화, 특히 국제금융기구와 관련해서 문제의 핵심은 이런 흐름과 기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작동시키느냐는 데 있다.

이 대목에서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WTO 장관급 회담에서 남아프리카노총(COSATU)이 보여준 활동은 주목할만하다. 시애틀 회담에 대비해 COSATU는 남아프리카 정부와 만나 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고, 회의에 참가할 남아프리카 대표단의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동자 대표가 정부 대표단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해 대표단의 활동을 점검하고 노동자의 입장을 협상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유럽의 노동사회 NGO인 솔리다르가 주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역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가능한 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나라들(서유럽,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에서는 점차 제도화되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를 내어왔다.

이제 한국 노동조합운동도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협상을 거부하는 단계를 넘어 개입하고 참여하는 전략으로 이행할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국제노동운동에서 한국노동운동이 기여해온 역할을 고려할 때 세계화 전략과 관련한 방향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2) 국제노동조직의 민주화와 국제노동운동의 개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산별노련(GUFs) 등 국제노동조직을 통한 대응을 꼽을 수 있다. 각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 가운데 ILO는 가장 친노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과 ‘양질의 노동(decent work)’으로 대표되는 ILO의 활동은 WTO가 주도하는 현행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각종 중요 사안과 관련하여 ILO는 WTO에 정례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킬 것을 강력히 권고해왔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자본의 세계화’를 넘은 ‘노동의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다. ILO를 비롯해 유엔개발계획(UNDP), 유네스코 등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들은 현행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제 수준에서의 사회

경제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년 열리는 ILO 총회에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노사정 대표들도 참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사정 3자는 물론 양대 노총간에도 ILO 총회에 대한 사전 조율이나 공동 대응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노사간에는 이해관계가 엇갈려 공동 대응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양대 노총 사이의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은 필수적이며,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노조와 정부 사이의 조율과 대응도 마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 ILO 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양대 노총이 주도하고 각국 노총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나 캠페인의 개최도 고려해볼직 하다.

한편으로 국제자유노련과 국제산별노련을 비롯한 국제노동조직들의 개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한 국제노동운동의 실천에서 가장 우선할 과제다. 공산주의 노동운동에 대항해 출범한 국제자유노련은 많은 문제가 없지 않았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에 편향된 사업내용과 조직운영은 가맹조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 노총의 반발을 초래해왔다.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 속에서 ‘반공’을 표방한 노총이라면 그 활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가맹조직으로 참여시켰으며, 세계 곳곳에서 기성 노동운동에 대항해 성장하던 새로운 노동운동을 ‘빨갱이’로 낙인찍었다. 민주노총 역시 1990년 전노협 출범 이후 한국노총을 비롯한 국내외 노동조직의 이념적 편견 속에서 국제자유노련 가입이 방해받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국제노동조합의 단일 대표 세력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조직 안팎에서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의 CUT, 남아프리카의 COSATU, 한국의 민주노총(KCTU) 등 개도국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국제노동계에서 사

회운동적 노동운동(social movement unionism) 흐름이 성장하면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기존의 운영 방식과 사업 내용으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자체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쪽수 운동’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하는 운동’이라는 뜻이다.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이 일치 단결한다면, 현행의 세계화 흐름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조직된 사회정치 조직이며, 그 사상과 이념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진보적인 조직이다. 이런 점에서 1억 명이 넘는 세계 노동자가 결집한 국제자유노련과 국제산별노련들을 개혁하여 운영과 사업에서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립하는 작업은 조직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시 바빠 이뤄져야 할 과제다.

3. 한국노동운동의 과제와 방향

1) 1세계 노동운동과 3세계 노동운동의 연결고리

한국이 국제 노동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독특하다. 식민지와 내전을 경험했으며, 급속한 산업화와 군사독재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주도적인 신흥공업국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자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것은 한국에서 노동조합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조적 환경이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식민지 국가 가운데 경제적 발전, 정치적 민주주의, 노동운동의 성장 모두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국가가 통제하는 취약한 노동운동을 가진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대단히 역동적인 민주적 노동운동이 성장한 나라로 전환하였다. 한마디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험과 동시에 선진국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 노동계에서 선진국 노동운동과 개발도상국 노동운동의 연결고리(link)라는 역사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와 그 공고화(consolidation)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주화 항쟁을 촉발시키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한계는 이후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재야와 보수야당’으로 대변되는 중간계급이 주도권을 쥐면서 노동운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했다.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독자적 모색이 2000년 1월에 이르러서야 민주노동당의 출범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것은 민주화 투쟁은 물론 그 이행 과정을 주도한 남아프리카나 브라질의 노동운동과 대비되는 대목으로 21세기에 이르러서도 ‘보스 정치’와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초래한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경험은 아직 정치적 민주화에 성공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노동운동에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과 노동을 배제한 급속한 경제발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주요한 사회세력으로 자리잡은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은 비슷한 조건에 있는 개도국 노동운동에 많은 함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노동운동은 지난한 투쟁

과 성장의 과정에서 동원(mobilisation) 전략과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 전략을 구사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지점에서 1세계 노동운동과 3세계 노동운동의 다리 역할이라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임무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의 연대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기대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높다. 특히 우리나라가 위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운동들이 한국 노동운동에 거는 기대는 우리의 상상을 넘는 수준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홍콩, 네팔 등 아시아 각국의 많은 노조간부들이 한국의 노조원들을 만나길 원하며, 한국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어한다. 조직·교육·교섭 등 노조의 일상활동에서부터 산별노조 건설, 그리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노동운동이 지나온 발자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노동운동에 좋은 참고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한국 노동운동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솔직히 말하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축적된 부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우월감을 뺀다면, 우리나라 노조원들은 물론 간부들조차 아태 지역 차원의 국제연대와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 의식이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현대, 대우, 기아, 삼성 등 한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한국 노동운동의 관심과 기여는 사실상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가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회담을 비롯해 각종

경제회담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한국 노동운동은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비롯해 지역 차원에서 이뤄지는 각종 경제적 담론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다.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뤄온 수많은 성과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노동운동을 지도적 위치에 올려놓았다. 지역의 많은 노동조합운동이 한국 노동운동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의 한 걸음이 단순히 한국만의 그것인 시절은 지났다. 15년에 걸친 지난한 투쟁의 성과와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한국 노동운동은 이제 아태 지역은 물론 세계의 노동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ICFTU-APRO)에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혁 요구를 비롯해 지역 노동운동과의 연대 틀을 만들려는 노력을 시급히 전개할 시점을 맞이한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이 미국에 맞먹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한중 노동운동 교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인 중국총공회와 한국노총간 정기교류의 형식과 내용이 한 단계 발전함과 동시에 민주노총 역시 중국총공회와의 관계를 트는데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일자유무역협정 등 한일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한국노총, 민주노총, 일본노총(連合) 사이에 3자 협의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

모든 일이 그렇듯이 노동조합운동의 국제사업 역시 올바른 사업 내

용과 더불어 조직적 결의와 재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우선 대중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에 걸맞은 국제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업은 이데올로기나 정파적 편향을 배제하고 폭넓은 연대를 조직하려는 관점이 중요한데, 이것은 조직, 교섭, 교육, 선전, 홍보 등 노동조합 일상활동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주체적으로 전개한 국제사업을 돌아보면, 여행성 회의 참가의 성격이 짙거나 아니면 특정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진 회의 개최에 편중된 측면이 없지 않다. 조직, 교섭, 교육 같은 노동조합 일상활동, 그리고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경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 사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모범 사례를 다른 나라에 알리는 기회를 넓혀야 하며, 나아가 공식 노동조합 조직간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적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예산 배정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경비를 외국에 의존하는 관행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한국 노동운동의 국제적 기대에 부응하는 자주적이고 역동적인 국제연대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조합운동은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도부와 간부, 그리고 활동가들의 역량이 날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대는 빠르게 변해 가는데 노동운동가들의 관념과 활동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운동과 사회 발전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노동조합의 국제사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양대 노총 모두 국제사업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하다. 산하 가맹조직들 가운데 담당자를 둔 조직은 몇 개 안

된다. 많은 산별 조직들이 작은 조직 규모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제 담당자를 두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없는데 사업이 잘 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전투적 노동운동’을 운운해왔지만, 세계 수준은커녕 기초 수준의 국제 인력을 키우려는 투자에는 인색했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하고 조직의 사업 작풍을 변화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엄청난 속도로 바뀌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업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고,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자를 배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양대 노총의 연대와 공조도 대단히 중요하다. 앞서 지적했지만, 안타깝게도 국제사업 차원에서 양대 노총의 협력은 아직 활발한 수준이 아니다. ILO나 ICFTU 총회를 위한 공동 대응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산별노련과 관련해서 국제 상급단체는 같이 하나, 국내 상급단체는 달리하는 산별 조직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도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사업을 둘러싼 양대 노총 조직 사이의 과당 경쟁이나 과도한 견제를 제어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10개에 달하는 국제산별노련 중에서 국제운수노련(ITF)은 한국노총 소속 가맹조직의 반발로 민주노총 소속 가맹조직이 하나도 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런 사정을 모두 한국노총 소속 가맹조직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국제사업에서 선의의 경쟁을 격려하고 공동 사안에서는 상호 협력하는 노동운동 내부의 분위기가 아쉬운 대목이다.

그리고 국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노동재단(KOILAF)과 한국노동교육원(KLEI) 등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정부 산하에 있는 노동 관련 기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 정부개발원조(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고 ‘개발원조’라는 명목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하여 자금의 지출을 감시하고 노동운동의 국제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WTO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 등 외교 및 통상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이 논의 테이블에 적극 개입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상단에도 참가해 활동을 감시하고 그 내용과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에릭 홉스봄은 현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세계화 과정은 갈수록 빨라지는데 공적 제도와 인간들의 집단적 행동 모두 그러한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 상품과 금융의 자유로운 흐름, 유엔의 약화, 규제철폐의 가속화, 세계 정부의 부재, 유일 초강대국의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세계화는 노동운동 진영에만 새롭고 버거운 게 아니다. 각국의 정부는 물론 거대 자본까지도 이 초유의 도전 앞에 힘겨워하며 그 흐름을 따라잡기 급급하다. 문제는 어느 세력이 교두보를 선점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느냐에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옛 것은 무너지는 반면, 새로운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위기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세계는 위기다. 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어느 쪽을 현실로 만드느냐는 역사의 주체인 인간의 몫이다. 위기를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는 노동운동의 지혜가 절실하다.

참고자료

- 강충호 (2003), '국제산별노련(GUFs)의 어제와 오늘', 『World Labor』 (2003년 8월호), 국제노동재단.
- 강충호 (2003), '국제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노총 교안 I』, 한국노총.
- 김금수, '세계노동운동사', 월간 『노동사회』 시리즈 연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성진 (2003), '국제자유노련(ICFTU) - 빵, 자유, 그리고 평화', 『World Labor』 (2003년 7월호), 국제노동재단.
- 김성진, 신은철, 이동응, 허재준 (1996), 『노사단체의 국제활동』,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홍, '세계 속의 노동네트워크', 매일노동뉴스 시리즈 연재 (2001.10.29 - 2002.3.18.)
- 윤진호 (2000), 『국제화와 노동운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정용욱, "미국 국립문서관 소재 노동 관련 자료", www.aks.ac.kr/archive/thesis/n5.htm.
- 피정선 (2003) '최근 국제노동운동의 흐름', 『세계화시대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노사관계 전략』, 제2회 국제노동포럼 (2003.6.25) 주제발표문, 국제노동재단.
- 코사투 셉템버위원회 (1999), 『셉템버 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각 월호.
- 한국노총(1993) 『국제노동기준』 [ILO(1990)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 Workers' Education Manual 번역자료].
- 한국노총출판부 (1991) 『국제노동기구』.
- Anthony Carew, "Free Trade Unionism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Found at www.arbarkiv.nu/pdf_word/carew_int.pdf.
- Bouwe Hijma, "Inventory of the archives of the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and its predecessors, (1939-) 1950-1992".

- Found at www.iisg.nl/archives/html/e/10748348.html.
- CGT, “Challenges for the Trade Union Movement in Europe and World-wide”, reported by Joel Decaillon. Found at www.cgt.fr/05intern/inte1.htm.
- Daisy Arago, “Trade Unions and Labor Organizations in Asia”, AMRC. (An edited version of the paper presented at the “Trade Union Study Meeting on TNCs” Oct.-Nov. 1991, Ho Chi Minh City, Vietnam, Bangkok, Thailand.
- Dan Gallin (2003), “Care is still required – a rejoinder”, Federation News,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Spring 2003.
- (2001), “Trade Unions and NGOs: a necessary partnership for social development”, Transnational Associations, 1, 2001. Found at www.uia.org/uiata/gallin.htm.
- (1999), “Organized Labor as a Global Social Force”, IR2 (International Relations plus Industrial Relations) Workshop, 1999, Washington, D.C., organised by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February 20, 1999). Found at www.gseu.org.uk/publish/pdfs/12-galli.pdf.
- Debjumar Ganuli (2000), History of the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1945-2000. WFTU, New Delhi.
- Dimitris Stevis (1998),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1864-1997: The Weight of History and the Challenge of the Present”,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olume 4, Number 1 (Winter 1998)
- Edo Fimmen,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Development and Aims. Amsterdam: IFTU, 1922.
- EIROOnline (1999), “Mixed fortunes of CGT and UNSA on ETUC membership”, www.eiro.eurofound.eu.int/1999/03/inbrief/fr9903167n.html.

- Heinz Bendt (1996) 『One World, One Voice, Solidarity - The 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s』, FES(에버트재단).
- ICTUR & War on Want (2001) *The Global Workplace: Challenging the race to the bottom*.
- Jacklyn Cock (2003) ,“A Better or Worse World? The Third World Social Forum, Porto Alegre 2003”. Research Report 5, Centre for Civil Society.
- Jai Sen. (2003) “The WSF as logo, the WSF as commons: take a moment to reflect on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Social Forum. A discussion note”.
- John Price (2002), “Canadian Labour, the Cold War and Asia, 1945-1955” (June 2002).
- Juan Moreno (2001), “Preface to the English Edition”, *Trade Unions Without Frontiers*, ETUI, 2001.
- Losovsky, A. *The World's Trade Union Movement*. London: NMM, 1925. Cited in Richard Hyman, "The International Labour Movement on the Threshold of Two Centuries: Agitation, Organisation, Bureaucracy, Diplomacy".
- Mary Barber, ed., “Mapping Trade Unions: British and International Trade Union Organisations”.
- Peter Waterman (2002), “Reflections on the 2nd World Social Forum in Porto Alegre: What's Left Internationally?” <http://groups.yahoo.com/group/GloSoDia>.
- Peter Waterman, “A Spectre is Haunting Labour Internationalism, the Spectre of Communism”, April 20, 2000. labor-l@yorku.ca.
- Rebecca Gumbrell-McCormick (2002), “The role of Nordic trade unions in the international labour movement”, Presentation at the IREC conference in Aalborg, August 2002. Found at www.socsci.auc.dk.irec/papers/rebecca_gumbrell_mccormick.pdf.

- Richard Hyman, “Imagined Solidarities: Can Trade Unions Resist Globalization?”, www.antenna.nl/~waterman/hyman2.html.
- Richard Hyman, “The International Labour Movement on the Threshold of Two Centuries: Agitation, Organisation, Bureaucracy, Diplomacy”. Found at www.arbarkiv.nu/pdf_word/hyman_int.pdf
- Susan George (2001), “The Global Citizens Movement: A New Actor for a New Politics”. Conference on Reshaping Globalisation: Multilateral Dialogues and New Policy Initiatives. Central European University. August 30, 2001.
- Tom Sibley (2002), “Trade Union Internationalism”, Federation News,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Autumn 2002.
- Trade Unionism in Asia and the Pacific: 50 years of ICFTU-APRO (1951-2001).
- WFTU (1985), The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1945-1985. WFTU/PRACE, Prague.
- WFTU, History of the WFTU, www.wftu.cz/aboutwftu.html.

국제노동단체 연락처

- 국제노동기구(ILO) www.ilo.org
4, route des Morillons
CH-1211 Geneva 22
Switzerland
Tel +41 22 799 6111
Fax +41 22 798 8685
ilo@ilo.org
- 국제자유노련(ICFTU) www.icftu.org
5 Boulevard du Roi Albert II, Bte 1
1210 Brussels
Belgium
Tel +32 2 224 0211
Fax +32 2 201 5815
internetpo@icftu.org
- 세계노동총연맹(WCL) www.cmt-wcl.org
Rue de Trèves 33
B-1040 Brussels
Belgium
Tel +32 2 285 47 00
Fax +32 2 230 87 22
info@cmt-wcl.org
- 국제섬유의류피혁노련(ITGLWF) www.itglwf.org
8 rue Joseph Stevens
1000 Brussels
Belgium
Tel +32 2 512 2606 or 512 2833
Fax +32 2 511 0904

- office@itglwf.org
- 국제금속노련(IMF) www.imfmetal.org
54bis, route des Acacias
Case Postale 1516
CH-1227 Geneva
Switzerland
Tel + 41 22 308 5050
Fax + 41 22 308 5055
info@imfmetal.org
 - 국제식품노련(IUF) www.iuf.org.uk
Post: Rampe du Pont-Rouge, 8, CH-1213, Petit-Lancy (Switzerland)
Phone: + 41 22 793 22 33
Fax: + 41 22 793 22 38
iuf@iuf.org
 -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 www.icem.org
Avenue Emile de Béco, 109
B-1050 Brussels, Belgium.
Tel +32 2 626 2020
Fax +32 2 648 4316
info@icem.org
 - 국제공공노련(PSI) www.world-psi.org
BP 9,
F-01211 Ferney-Voltaire Cedex,
France
Tel +33 (0)4 50 40 64 64
Fax +33 (0)4 50 40 73 20
psi@world-psi.org
 - 국제운수노련(ITF) www.itf.org
49-60 Borough Road, London SE1 1DR

Tel +44 20 7403 2733

Fax +44 20 7357 7871

mail@itf.org.uk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 www.ifbww.org

54, rte des Acacias CH -1227 Carouge (GE)

Tel +41 22 827 37 77

Fax +41 22 827 37 70

info@ifbww.org

◦국제교원노련(EI) www.ei-ie.org

5, Bd du Roi Albert II (8th floor)

B-1210 Brussels, Belgium

Tel +32 2 224 06 11

Fax +32 2 224 06 06

headoffice@ei-ie.org

◦국제언론노련(IFJ) www.ifj.org

IPC-Residence Palace, Bloc C

Rue de la Loi 155

B-1040 Brussels

BELGIUM

Tel 32-2-235 22 00

Tel 32-2-235 22 19

ifj@ifj.org

◦국제통신사무금융노련(UNI) www.union-network.org

UNI Head Office, Avenue Reverdil 8-10

CH- 1260 NYON

Switzerland

Tel + 41 22 365 2100

Fax + 41 22 365 2121

contact@union-network.org

◦국제자유노련-아태지역기구(ICFTU-APRO) www.icftu-apro.org

4th Floor, 73 Bras Basah Road

Singapore 189556

Republic of Singapore

Tel +65 6 222 6294

Fax +65 6 221 7380

gs@icftu-apro.org

◦글로벌 유니언 www.global-unions.org

◦세계사회포럼 웹사이트 www.forumsocialmundial.org.br/home.asp

◦세계정책네트워크 www.gpn.org

◦레이버 넷 www.labornet.org

◦레이버 스타트 www.labourstart.org

[저자 약력]

• 윤 효 원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기획교섭간사
- ICEM 프로젝트 코오디네이터
- 현 민주노동당 국제담당
- 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담당

• 강 충 호

- 영국 리즈대 노사관계학 박사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국장
- 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제국장

• 윤 영 모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국장
- 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

연구총서 2003-11

국제노동운동의 현황과 새로운 흐름

인 쇄·2003년 12월 26일

발 행·2003년 12월 30일

발 행 인·이 남 순

발 행 처·한국노동조합총연맹

140-050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168-24

(代) 02-715-0898

등 록·81. 8. 21 (13-31호)

인 쇄·유일커뮤니케이션즈

100-032 서울시 중구 저동2가 4번지 고당기념관 5층

T.2268-0260 F.2279-0260

가격 : 7,000원